

2025 춘계공동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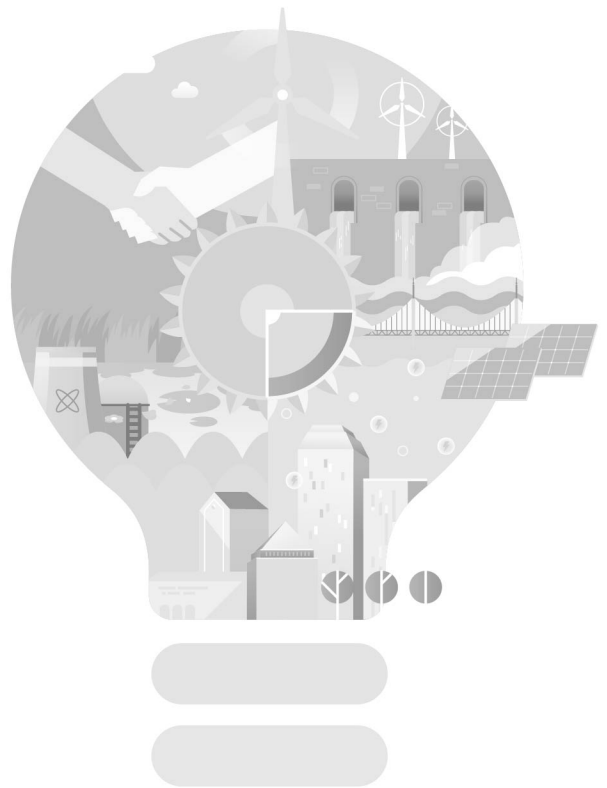
한국공공ESG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지역경제학회

지역의 위기와 지속가능성

2025. 4. 4 (금) 10:30~18:00

산림비전센터

- Session 1**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 Session 2** 개회식 및 특강
- Session 3** 공공부문 ESG 제도적 기반
- Session 4** 순환경제와 지역발전



주최 한국공공ESG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지역경제학회

후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개 회 사

존경하는 여러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님 및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현장 활동가를 위한 사례연구 및 작성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전남대 이영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행사는 한국지역경제학회 김봉원 회장님과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오수길 회장님, 한국ESG전략연구원 양세훈 원장님, 그리고 한국정책학회 홍형득 전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마련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의 위기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주제 하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공공부문 ESG기반 구축, 순환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끊임없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지역소멸, 자원의 고갈과 황폐화 등 여러 위기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을 해 오면서 간과해 왔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지역이 선순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국공공ESG학회·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한국지역경제학회 3개 학회의 춘계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한국공공ESG학회장 사득환

목 차

Session 1 (10:30-11:50)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 좌 장: 김봉원(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이사장)
발제1: 한광식(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발제2: 양세훈(한국ESG전략연구원 원장) 63
 사회복지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ESG 연계 방안
토 론: 강현실(배재대학교 교수), 김동재(건축사사무소 광장 대표이사),
 김찬수(지역사회연구원 원장)

Session 2 (13:00-15:00)

[개회식 및 특강]

- 개회사: 사득환(한국공공ESG학회 회장)
환영사: 김봉원(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
 오수길(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특 강: 이영철(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현장 활동가를 위한 사례연구 및 작성 방법 84

Session 3 (15:10-16:30)

[공공부문 ESG 제도적 기반]

좌 장: 홍형득(강원대학교 교수)

발제1: 고광용(자유기업원 정책실장) 123

ESG 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 대응:

시장경제 친화적 지방정부 ESG 구상

발제2: 안수지(지방정부ESG연구회 부회장) 154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3: 조은채(한국수자원공사 전략단장) 189

새로운 물의 시대, K water의 ESG 전략: Water Positive를 중심으로

토 론: 박보식(한국리더십연구원 원장), 사득환(경동대학교 교수),

이향수(건국대학교 교수)

Session 4 (16:40-18:00)

[순환경제와 지역발전]

좌 장: 오수길(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발제1: 김성균(전략경영연구원 전환사회센터장) 225

더 큰 로컬경제의 자율성과 회복력에 관한 고찰:

SDG 8을 위한 로컬의 순환경제에 관한 고찰

발제2: 김현정(지속가능지역연구소 소장) 별책

관광 ODA와 지속가능한 관광 인증제도:

ESG 적용 전략

토 론: 신진주(ESG 컨설턴트), 김서용(아주대학교 교수),

허남식(한국ESG교육협회 이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2025. 4. 4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 한 광 식



Contents



I.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II. 지자체와 대학의 효율적 협력

III.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로컬과 로컬크리에이터

Chapter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1 현재 우리나라는

- ☑ 2020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함
- ☑ 인구구조의 역전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국토의 11.5%에 불과한 수도권에 약 52%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 현재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2 대학의 상황

인구감소와 대학의 위기

- 대학 입학정원 감소
-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의 어려움

고등교육기관의 양극화

- 지역간 양극화 : 수도권 VS 비수도권
- 고등교육기관간 양극화 : 일반대학 VS 전문대학
- 계열간 양극화 : 인문사회계열 및 공학계열의 낮은 충원율

3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 ① 기회발전특구(ODZ) : 지방주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 ② 교육발전특구 : 지역-대학 동반 성장
 -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 ③ 도심융합특구 :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 역세권 요지에 '지방板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 ④ 문화특구 :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지역콘텐츠 브랜드 육성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4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구역 (8곳)



4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구역 (6곳)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출처=산업부 보도자료)

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현황 (1)

☑ 1차 지정현황 (31건)

유형	신청단위	지정(안)	지자체명
1 유형	기초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 (강원) 춘천, 원주, 화천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 (충남) 서산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 (전남) 광양
2 유형	광역지자체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 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아산) - 경북 (안동-예천) -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계	31건	

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현황 (2)

☑ 2차 지정현황 (25건)

유형	신청단위	지정(안)	지자체명
1 유형	기초지자체	21건 (21개 기초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 (충북) 보은 - (충남) 공주, 금산 - (전남) 순천 -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 (경남) 남해
2 유형	광역지자체	1건 (1개 광역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3 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건 (3개 광역, 19개 기초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계	25건	

NIS - RIS - LIS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 중앙RIS센터

- 광역RIS센터

- 특례시

- 대도시

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 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
- ☑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모두 확대됨

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4대 성과목표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 사업

지·산·학·연
협력

직업·평생
교육

지역현안
해결

국가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산업
지역특화산업
향토산업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7 전국 17개 시도 RISE 추진체계 현황

시도	지역 라이즈센터	담당 부서
서울	서울연구원	경제정책과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교육협력담당관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혁신과
강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교육법무과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대학혁신지원과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청년정책담당관
충남	충남연구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북	충북연구원	RISE 추진과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대학정책국
경북	경북연구원	교육협력과
부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지산학협력담당관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대학청년지원단
경남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인재과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성장과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교육정책관
전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대학혁신과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교육협력추진단

- 테크노파크(7개)
- 광역연구원(5개)
- 경제과학진흥원(1개)
- 광역평생교육진흥원(3개)
-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1개)

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

사업목적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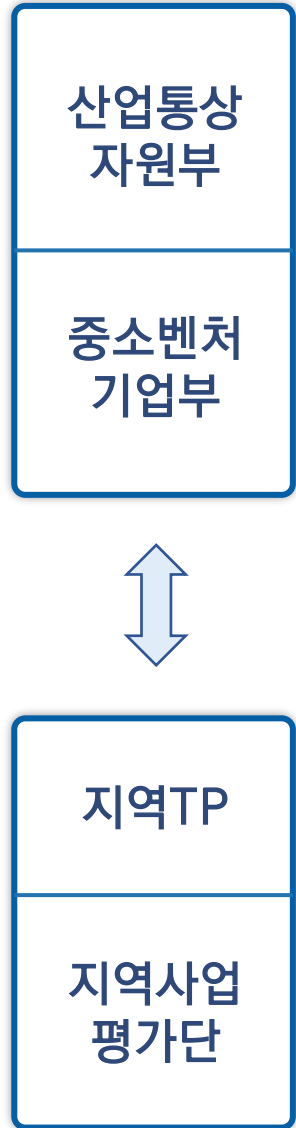
-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①플랫폼 구축을 통해 ②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핵심분야를 선정, ③‘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 과제 수행을 지원

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자체	핵심분야	대학	국비지원
광주·전남 (‘20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 목포대 등 17개 대학	480억 내외
울산·경남 (‘20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ICT 저탄소 그린에너지 스마트공동체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등 15개 대학	480억 내외
충북 (‘20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약바이오 화장품·천연물 정밀·의료기기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14개 대학	300억 내외
대전·세종·충남 (‘21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 	충남대, 공주대 등 24개 대학	480억 내외
강원 (‘22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의료 스마트수소에너지 디지털헬스케어 	강원대, 연세대 미래, 강릉원주대 등 15개 대학	300억 내외
대구·경북 (‘22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보기기 미래차 전환부품 	경북대, 영남대 등 22개 대학	480억 내외
부산 (‘23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항만물류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친환경 스마트선박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14개 대학	300억 내외
전북 (‘23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수송기기 농생명·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10개 대학	300억 내외
제주 (‘23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바이오 지능형 서비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제주대 등 3개 대학	300억 내외

9 비수도권 지역별 주력산업 (14곳)

지역	주력산업 (주축산업 / 미래신산업)
부산	초정밀소재부품,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 전력반도체, 수소 저장·운송
대구	전기·자율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센서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소재부품 / 산업활용·혁신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서비스로봇, 정밀의료바이오헬스 /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울산	전기자동차부품, 가스연료선박기자재, 기능성화학소재 / 전기·수소차, 수소 저장·운송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차세대 고성능 센서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생, 반도체첨단패키징
충남	디스플레이부품·장비, 탄소저감자동차부품, 고기능성그린바이오 /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첨단패키징
전북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수전해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전남	환경·에너지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헬스케어 / 도심항공교통(UAM),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경북	첨단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유전자·세포치료
경남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수소 저장·운송
제주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 수소 저장·운송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 데이터·AI 보안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시도평생교육
진흥원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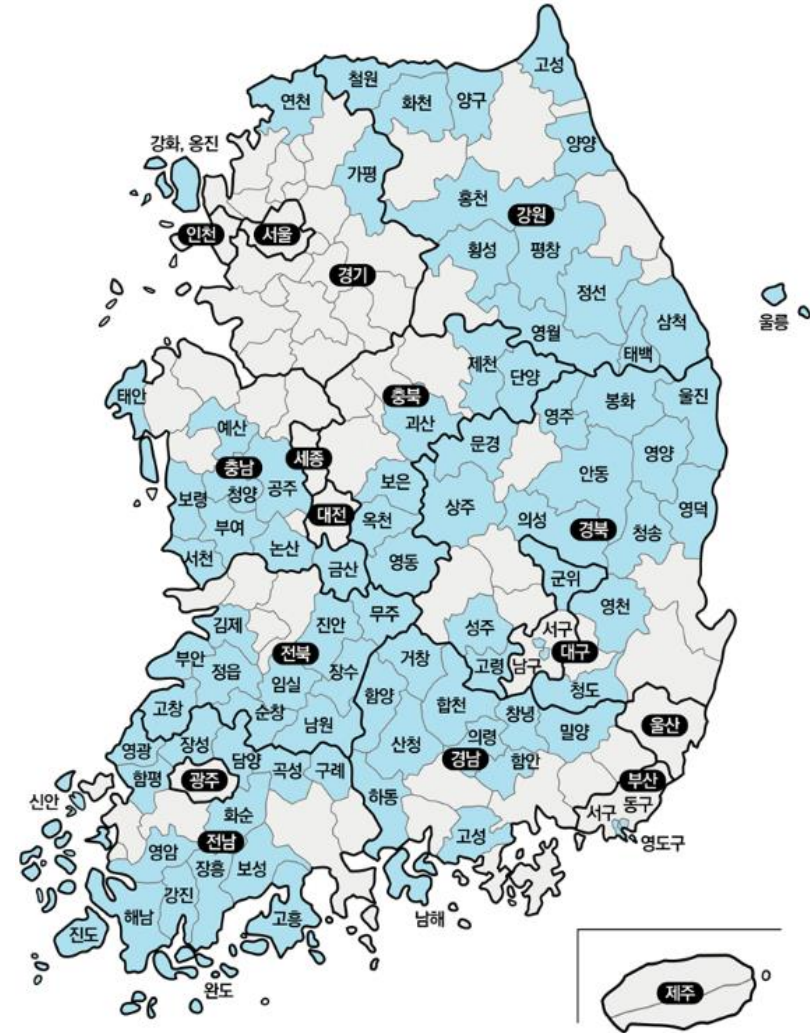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

11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107곳)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관심지역 18개 (5%, 375억)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배분 (90%, 2,250억)	▶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재정자립, 인구밀도 등을 고려·배분 (10%, 250억)	

12 인구감소지역 (89곳)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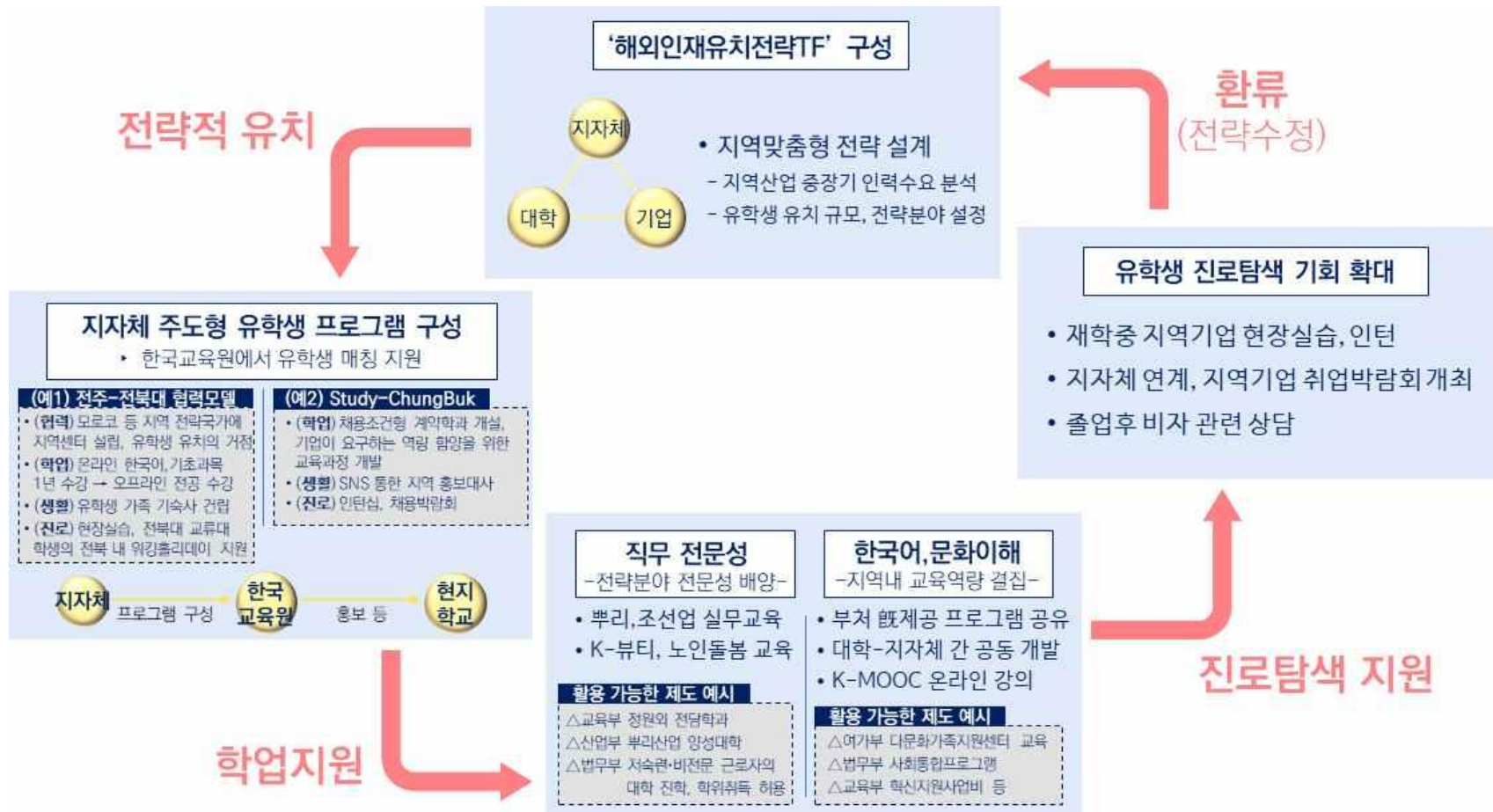


13 지방소멸 관심지역 (18곳)

시도	시군구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경남	사천시, 통영시

14 유학생 유치·양성 협력모델(안)

☑ Study Korea 300K (교육부)



Chapter

지자체와 대학의 효율적 협력

1 대학-지역 협력의 장애요인 (Goddard, 2011)

요인	내적 장애요인	외적 장애요인
기관 목표	연구성과 산출에만 집중함에 따라 연구 및 지식 개발 활동이 지역발전의 목표와 유리됨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음
연계 채널	대학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며 참여활동이 산발적이며 분절화됨	대학과 지역의 단체 및 기업을 연결하는 브릿지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재정지원 소스	대학은 지역발전보다 연구비 등 재정지원 수혜에 유리한 분야에 집중하게 됨	기업의 R&D 투자여력 부족, 단기 성과 위주의 투자
운영 원리	대학은 스스로를 지역발전의 행위자로 여기기보다는 비판적 관찰자로 여김.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보다는 학계 명성을 더 중시	학문분야의 용어나 작업 패턴이 공공 및 민간분야와 다름. 대학이 지역과 함께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산업 특성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내용이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음	지역경제가 쇠퇴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연관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음
체계간의 연계	대학은 전국 단위의 고등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적 요구의 부응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	국가의 혁신전략과 지방 발전전략과의 괴리, 정책결정에 있어 지역의 목소리, 자율성, 리더십 등 부족
협업 역량 및 기능	대학 교원의 지역 프로그램 참여 시간 부족, 외부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능력 부족, 변화 주도 능력 부족	지역내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부족, 각자 도생 및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에 대한 합의 미흡

2 방안(1) 지자체-대학 협력시스템 구축

지자체

+

대학

-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확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 가능

+

-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2 방안(2)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학 활용

지자체

+

대학

- 교수들의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해 보다 전략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 대학은 이론적 전문가 집단으로 정보의 양과 질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네트워킹 가능

2 방안(3) 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자체 활용

지자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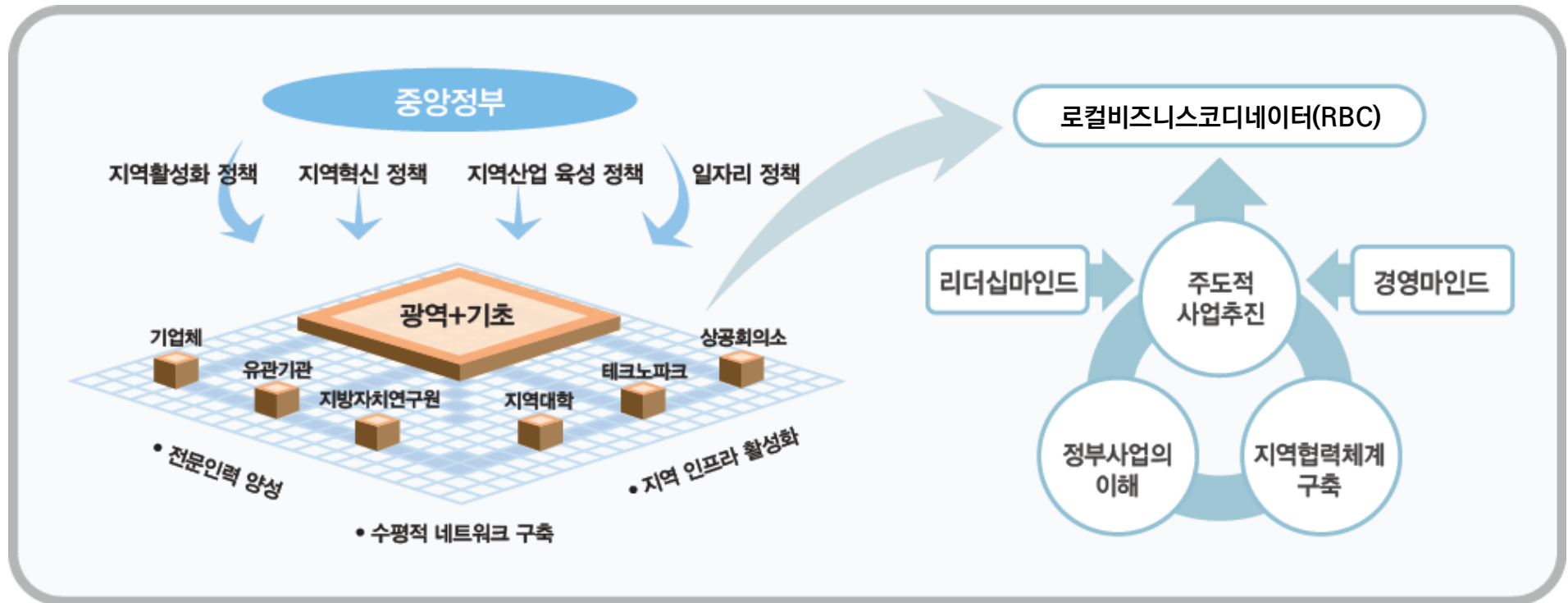
대학

- 중앙정부와 더불어 기초·광역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유관기관 및 전략사업기획단, 지방자치연구원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3 지역사회-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대학의 노력)

-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며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 대학의 주기능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으로 가시화(可視化)
- ☑️ 대학 학생들의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확대

4 지자체-대학 협력 모델 (대학 차원의 로컬비즈니스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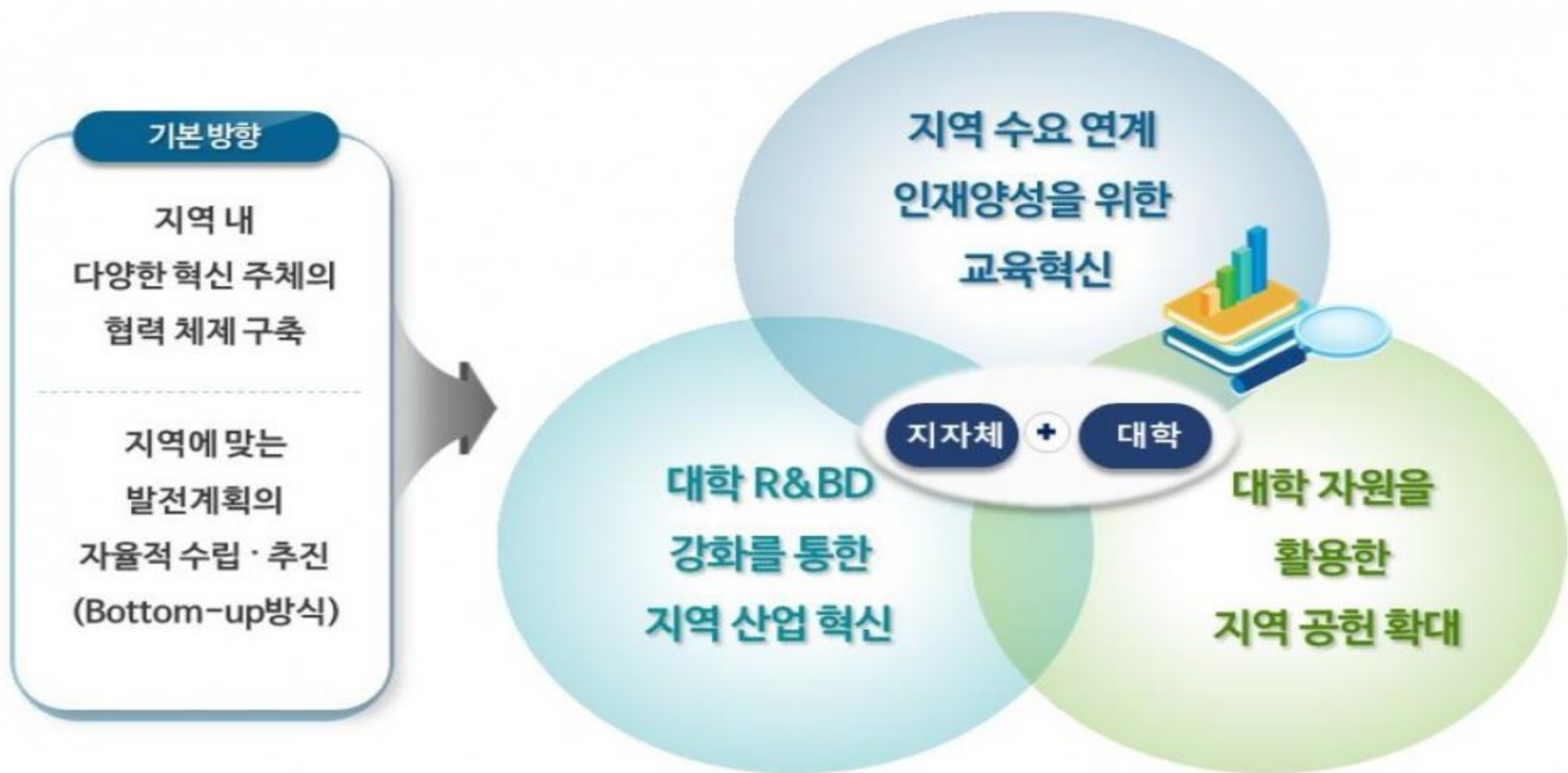
☑ 로컬비즈니스코디네이터

지자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전문가가 포함되어 지역문제를 공동해결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조율·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

5 지자체-대학 혁신 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주요내용



7 지자체 지원을 위한 대학의 협력시스템 마련 관건

지자체



- ☑ 대학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활용
- ☑ 전략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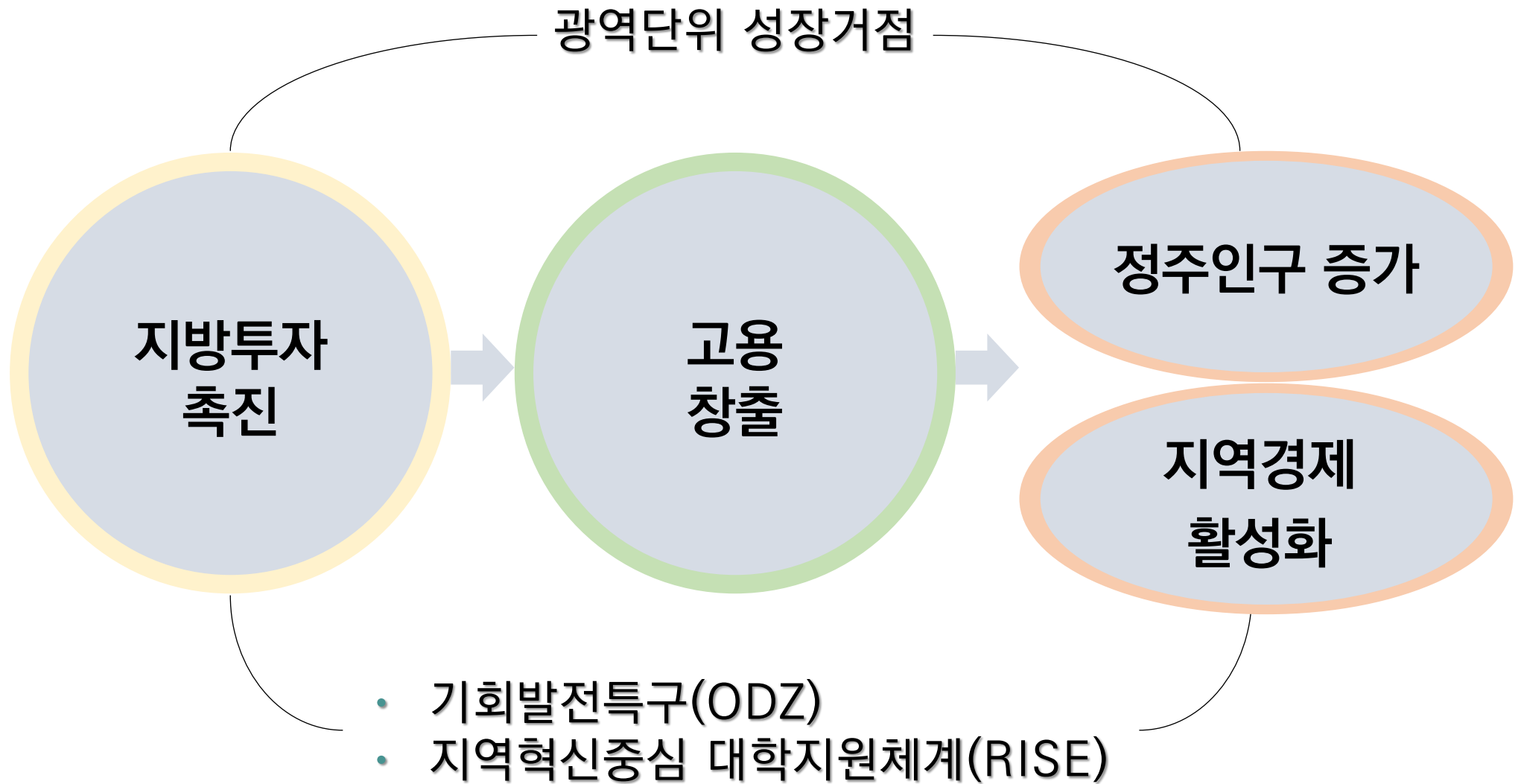
지자체와 대학의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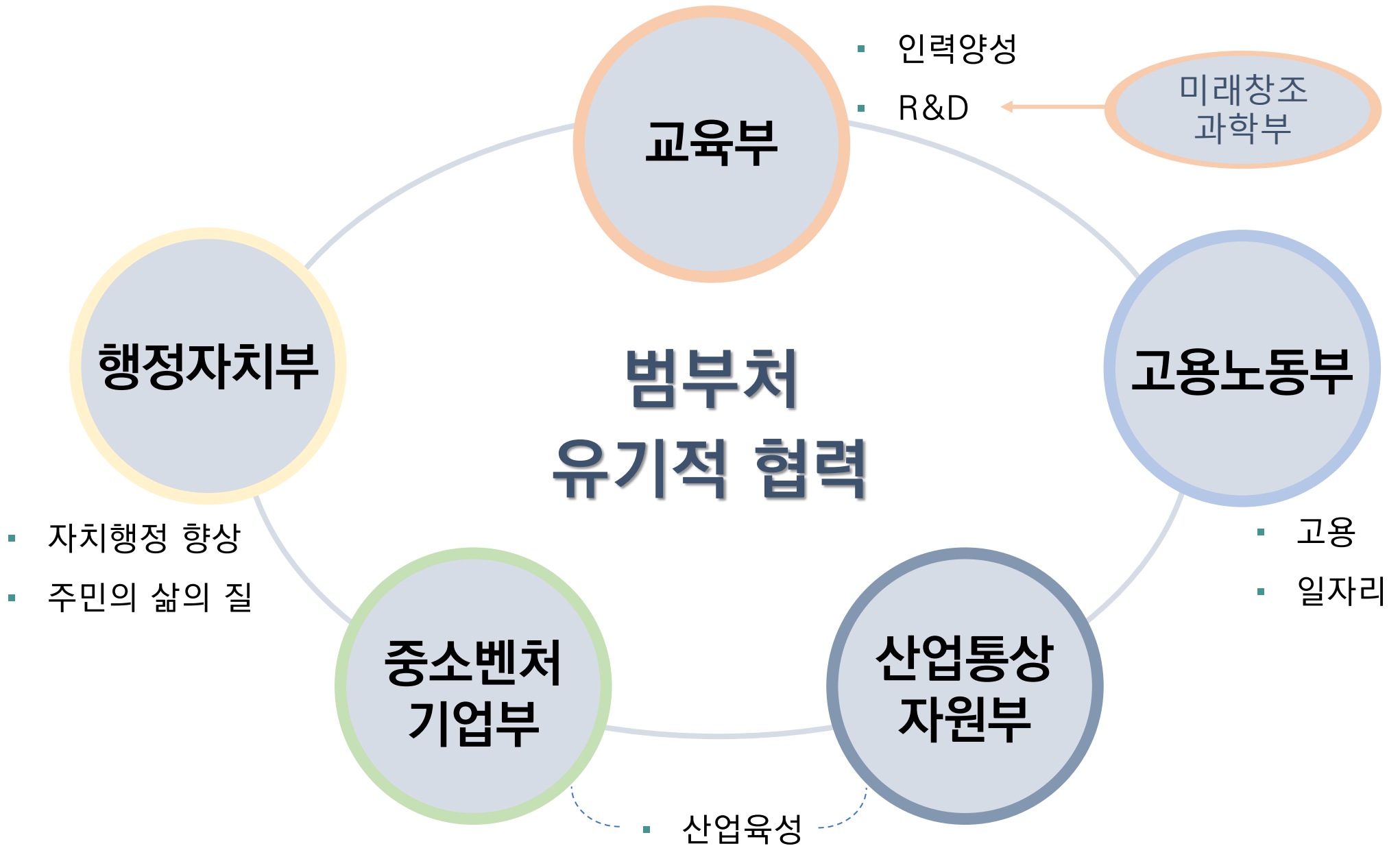


- ☑ 지역에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
- ☑ 다양한 자원 확보 담당

8 범부처 유기적 협력 (1)



8 범부처 유기적 협력 (2)



Chapter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로컬과 로컬크리에이터

1

로컬의 개념과 이해

1 지역, 지방, 로컬의 개념



지역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특례시, 대도시)



지방

- 수도권 제외



로컬

2 로컬의 의미 (1)

- 전통적인 지역의 개념은 지리적 기준이나 행정적 기준으로 구분한 공간
- 지역이라는 용어는 '지역' 외에도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 다양한 용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지역의 의미는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독립적인 지역으로 보는 것
- 최근의 로컬의 개념은 지리적 지역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공유하는 사회적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음

2 로컬의 의미 (2)

장소 (Place)

- 물리적인 공간(장소)를 의미

잠재적 가치 (Resource)

- 지역이 지닌 문화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잠재적인 가치

2 로컬의 의미 (3)

의미 1

현지
(사물이 현재 있는 곳)

의미 2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지방과
변두리

사용 예

- 로컬맛집 : 현지맛집
- 로컬방송국 : 중앙방송국의 상대적인 개념
- 로컬병원 : 동네병원

2

로컬크리에이터의 개념과 이해

1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성장사회의 도시정책

물질, 효율, 기능, 속도
하드웨어 중심

공급자(행정, 전문가) 중심



성숙사회의 도시정책

사람, 건강, 일상, 공존
소프트웨어 중심

수요자(시민) 중심

2 로컬크리에이터의 필요성

라이프스타일의 가치 다원화	행복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자신에게 의미있는 삶에 대한 추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상상공인
지역의 가치 재인식	대도시화, 광역화보다는 소도시, 작은 골목, 친근한 동네를 만들어가며 지역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흐름
지방소멸대응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공동화에 대한 개선이 어려움. 대규모 산업 중심의 변화보다는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강화 정책

3 로컬크리에이터란?

- 로컬(Local) +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
- 로컬은 '지역이 지닌 문화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잠재적인 가치'를 뜻하며, 크리에이터는 '창의적인 기획자인 동시에 생산자'를 의미함
- 지역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 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

3 로컬크리에이터란? (김혁주, 2020)

- 로컬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의 주체
- 지역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자로 창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함
- 골목상권 등 지역 시장에서 지역 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소상공인

[도움사이트] 비로컬 (belocal.co)

BE LOCAL

비로컬 비:테이스트 비:커넥트 비:트립 비:팝업 파트너스 미디어

Better Experience for the LOCAL

비로컬

더 나은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를 위해
로컬 브랜드의 새로운 경험을 제안합니다.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
로컬을 위한 더 나은 경험, 비로컬이 함께 합니다.

로컬 커넥트 스타트업 비로컬의
다양한 BE:프로젝트를 만나보세요.

로컬 소식이 궁금하다면? >



4 로컬크리에이터 (종합)



5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

- 지역 이해자 : 지역이 담고있는 지역성, 역사의 의미, 지역민의 소망 파악
- 지역 활동가 :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자 : 지역 자산이 의미있고 새로운 것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
- 지역브랜드 기획 홍보자 :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기획
- 지역 비즈니스 실천가 : 지역 내 사업분야 관련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과 상생하는 사업방식 운영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가, 중개자 :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커뮤니티에서 양성과정 교육

6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가치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 로컬푸드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 지역기반제조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 지역특화관광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6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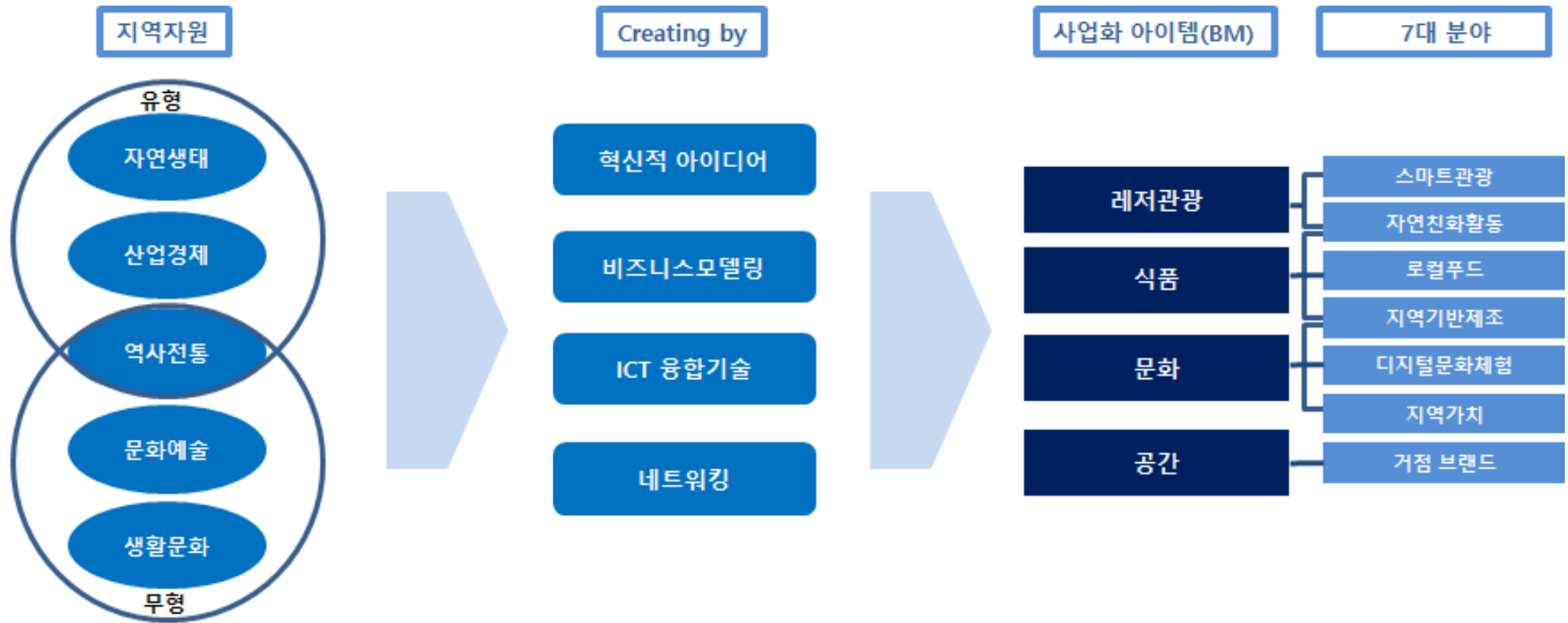
- **거점브랜드**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서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 **디지털문화체험**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 **자연친화활동**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7 로컬크리에이터 도출 프로세스



※ 자료출처: 이창영 외(2020),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8 현 정부 국정과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관련 공약	교육 기초 공약	민간 주도형 단기 특정기술 학위제 활성화	
		맞춤형 인재 양성할 기업 대학 설립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창업 지원	
실천 과제	연번	실천과제명	주관부처
	1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중기부
	2	로컬 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	중기부
	3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중기부
	4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행안부
	5	지역 주도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투자협약 활성화	국토부
	6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국토부

9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방안 (국정과제)

-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양성
-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닌 다양한 형태의 창조성이 뿌리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함
- 시설과 공간을 보유한 지역대학이 ‘지역혁신 양성기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빠른 기술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짐

9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방안 (국정과제)

- 대학이 미래사회의 먹기리를 책임지기 위해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함.
대학과 혁신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함
- 지역화에 따라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역여건에 맞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필요

10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부처

교육부

중소벤처
기업부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
식품부

11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정부 추진 대표사업

○ 로컬콘텐츠 중점대학(14개)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 강릉시)	경상국립대학교(경남 진주시)	경희대학교(경기 용인시)
계명대학교(대구 달서구)	목포대학교(전남 무안군)	동명대학교(부산 남구)
목원대학교(대전 서구)	부산외국어대학교(부산 금정구)	서울예술대학교(경기 안산시)
재능대학교(인천 동구)	전주대학교(전북 전주시)	청운대학교(충남 홍성군)
충남대학교(대전 유성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 조치원읍)	

○ 로컬콘텐츠 생태계 구축

-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6개 부처)

12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2.19)

[시행 2024. 2.19.] [경상북도조례 제5001호, 2024. 2.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3 보도자료 - 동아일보(2024.5.28)



전문대,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나야

입력 2024.05.28. 오전 3:06 · 수정 2024.05.28. 오전 9:08 기사원문

 유재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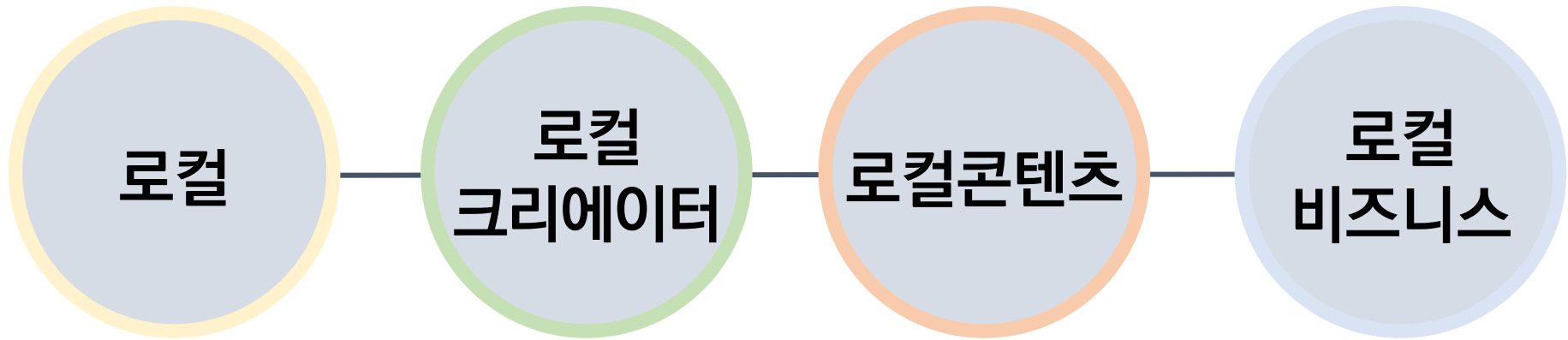
일반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전문대가 주목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에 혁신을 불어넣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 등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자연, 문화적 자산 등에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을 맡는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 지역 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가 그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할 교육 기조 공약으로 3가지를 내세웠다. 여기에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창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 '지역 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은 실천 과제에서도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기사 일부 발췌)



14 선순환 체계 구축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ESG 연계 방안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정책 수단인 환경·사회·거버넌스(ESG)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효율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ESG 적용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환경(E) 진단 지표에는 기관이 친환경 자동차 구입과 운행,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생수 사용, 쓰레기 배출 감소 등 환경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기존 업무와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항목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실행방법을 모색하는 등 ESG의 균형 있는 진단과 평가가 전제되어야만 사회복지기관의 실효성 있는 ESG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ESG 적용과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E) 항목은 신규 내용을 발굴해 적용하고, 사회(S) 항목은 다른 영역의 기관과의 차별성을 위해 내용을 부각시키고, 거버넌스(G) 항목은 기존 항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ESG, 사회복지기관, 경영실적 평가

사회복지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ESG 연계 방안

양세훈¹⁾

I. 서론

산업화에 따른 문명의 발달은 인간 세계의 풍부한 삶의 여유를 부여했다. 반면 자본주의 발전 못지않게 그에 따른 역기능 현상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물질문명의 혜택이 불균형을 보이면서 국가별 빈부 격차는 물론 인종 갈등, 전쟁으로 인한 파괴 등으로 혼란이 시작되었다.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에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 안전사고, 인권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승자독식의 경쟁과 희생으로 얼룩진 양면의 그늘과 그림자 현상이 지구 공동체의 분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인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생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한계를 보였다.

이에 175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과 확산에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17개 SDGs 주요 내용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SDGs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UN이 환경·사회·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를 기업투자 기준으로 권고했다.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경영 활동의 관점에서 보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UN이 기업투자에 ESG 실천을 고려해달라는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ESG 정책이 세계 최대의 투자사 대표가 2020년 초 기업 CEO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 전환점으로 작동되었다. 블랙록(BlackRock)의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이 던진 안내 메시지다. ESG를 실천하지

1) 한국ESG전략연구원 원장

않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ESG가 들불처럼 번져갔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주춤거리는 양상이 되었다. ESG라는 단어와 정책이 진보나 보수냐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양세훈 외, 2023) 래리핑크 회장이 ESG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를 중시하는 지도자와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지도자와의 갈등으로 번져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발병은 우리 사회에 청결 등 환경의 문제, 안전과 인권의 문제, 병원균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유 등 ESG 실천이 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 등 공공영역에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특히 감염병을 우려한 사회활동의 단절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해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파급력과 영향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실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어려움이 증폭된 기간이었다.

2020년 봄부터 촉발된 기업 세계의 ESG 적용과 확산은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로 발전하고 ESG를 적용한 복지경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ESG의 ‘S’ 영역과 사회복지는 이미 연계되어 있어(이종아, 2023), ESG와 사회복지는 매우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ESG 중 사회적 책임인 ‘S’는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되면서 주로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복지와 자연스럽게 연계된다(김희연 외, 2022). 무엇보다도 ESG의 이슈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ESG를 복지분야에 도입, 실천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김희연·김민재, 2023).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ESG의 사회(S)와 거버넌스(G) 영역이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 반면 생산시설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환경(E)에 대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E) 부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내용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ESG 적용 여부로 인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사례연구(case study)로 천안시복지재단의 경영과정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에 2023년부터 ESG 진단항목이 추가된 상태에서 천안시복지재단은 2023년~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가’ 등급을 받

았다. 2022년도 까지 ‘나’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천안시복지재단이 ESG 적용과 대응을 통해 경영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천안시복지재단의 홈페이지와 천안시가 시행한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ESG 적용이 미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ESG 적용으로 인한 사회복지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ESG 정의

1) ESG 등장과 정의

환경·사회·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의 출발은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시작되었다. 그만큼 SDGs와 ESG의 관계는 밀접하며, SDGs가 지속 가능한 조직의 발전을 위한 목표라면 ESG는 발전을 촉진 시키는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세계적 의제로 등장한 시기는 1987년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²⁾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ECD)³⁾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하의 문서인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였다. 이 보고서는 당시 WECD 위원장을 맡은 할렘 브룬트란트(Harlem Brundtland) 노르웨이 총리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세계 지속가능발

2) 1972년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을 바탕으로 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 공식 국제 기구를 말하며, 환경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추진, 유엔 기구의 환경 관련 활동 및 정책 작성, 세계의 환경 감시가 주 목적이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유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설립된 위원회, 1987년 10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처음으로 정의, 도입되었다.

전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이 열렸다.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이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다.

UN-SDGs 채택 이후 환경부는 한국 상황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DGs)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변화를 견인할 2030년 청사진 마련과 국민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에 따라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국장급 협의체와 실무 차원의 과장급 K-SDGs TFT를 운영하였다. 또한 SDGs 목표별 민·관·학 공동 작업반과 국가 SDGs 포럼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국민 참여 거버넌스를 운영하였다.

2004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⁴⁾ ‘WHO Cares Win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 보고서에서 ESG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2006년에는 유엔 책임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⁵⁾ 6가지 원칙에 따라 ESG를 투자 결정과 자산의 운용에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원칙 발표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SDGs 또는 ESG 관련 이슈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는 2017년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가 프랑스 국제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환경보호 동력이었던 ESG도 빛을 보지 못했다.

〈표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등장 배경

연도	ESG 등장 연혁 및 배경 내용 ⁶⁾
1987년	- UNEP·WCED, 브룬트란트 보고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적 의제로 제시
2004년	- UNGC, ‘WHO Cares Win’ 보고서 발표 : ESG 용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
2006년	- UN PRI(책임투자 원칙) : ESG를 투자 결정과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

4)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그 운영 및 경영전략에 내재화시키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다(시사상식사전).

5) UN PRI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협력으로 설립되었고, 전 세계 수천 개의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가입, ESG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과 실행에 반영하고 있다.

2009년	-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자본주의 4.0 논의 본격화
2019년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논의 본격화 - 코로나19 팬데믹 과정 기후 변화,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ESG 이슈 관심 증가
2020년	- 자산운용사 Blackrock : 투자이사 결정에 있어 ESG 중요성 강조

2015년 유엔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는 2016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법 제정을 시작으로 확대되었다. 회원국은 자국의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시작했다. UN 보고를 위한 SDGs 실천 내용 관련 자발적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현재의 법으로 발전된 것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 전염병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통을 겪게 되면서 ESG 관심과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ESG를 통한 탄소배출 제로(zero)를 지향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정권마다 정책변동을 보이는 미국, 화석연료 중심의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국가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와 정치환경 등 대립적인 가치 간의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G 확산은 꾸준함을 보인다.

2) 공공영역의 ESG 도입

UN이 권장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ESG)가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시스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영역의 기관들까지 ESG를 도입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가칭 「ESG 기본법」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국회

6) 한국거래소,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200/ESG_01010200.jsp

ESG포럼’을 구성했다. 이렇듯 공공기관에서의 ESG 경영은 ‘할 수도 있는 것’, ‘하면 좋은 것’에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사득환, 2021).

ESG는 국정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통해 공공부문의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ESG 경영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하며(오수길, 2021),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조직에서도 ESG 도입에 따른 활성화가 논의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응과 실천이 중요하다. ESG 정책 역시 시민과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ESG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양세훈 외, 2023). ESG를 실천하는 단계는 가족이란 작은 공동체부터 국가, 지구 글로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영역이다(양세훈 외, 2024).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홍형득 외, 2024),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처럼 행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공공서비스 업무라는 관점에서 ESG의 이해 및 인식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LIO)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ESG 내용이 추가되었다.

ALIO 공시 항목 중 환경(E) 부문은 대기환경(온실가스 감축 실적, 저공해 자동차 현황), 자원환경(에너지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보호(녹색제품 구매 실적, 환경 법규 위반 현황) 등 7가지 진단 항목이 있다. 사회(S) 부문은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개인정보보호), 사회공헌활동, 인권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동반성장 평가결과, 장애인 고용현황, 구매실적(혁신조달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등 12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거버넌스(G) 부문은 이사회(이사회회의록,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ESG 운영위원회), 자체 감사부서 현황, 청렴

도 평가결과 등 5개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SG 관리목록 현황표

구분	세부지표	ESG	ESG 관련 내용	
경영관리	리더십·전략	경영층의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S: 기관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문제해결 E: 친환경 경영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전략 및 혁신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를 반영한 경영원칙의 반영 여부(경영계획 등) 사회적 책임 및 ESG 집행 노력과 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추진 활동의 노력과 성과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 등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준수 여부
		윤리경영	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의 노력 및 성과 인권경영 체계 실행·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 절차 제도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채용 비리 방지의 적정성
		재무관리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관리 등(지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기준 준수 여부, 회계담당자 전문성 공사채 발행절차 및 승인목적 사용여부 적정성 타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사회적책임	안전 및 환경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적절성 안전사고건수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 친환경 경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우선구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친환경차량
		지역상생·협력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경제 공헌 노력과 성과(지역기업ESG 경영지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프로그램, 무료감면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의 위한 노력과 성과 산불, 수해, 감염병 등 재난구호 지원 노력(가점)
		소통·참여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및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 및 유지
	경영성과	주요사업	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별 상이(철도, 개발, 관광, 시설, 특정, 환경 등)
		고객만족성과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권장정책성과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경영공시 업무 매뉴얼 등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충실성, 공공데이터 활용, 잡플러스, 사전정보공표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혁신구매(0.6점)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지역상생 이행실적(사회적기업 등 물품구매, 상생결제 등) 장애인의무고용 및 청년의무고용,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 	

자료: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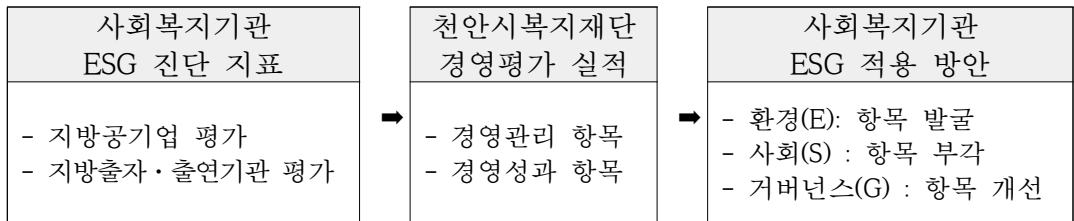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이원 체계다.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있고 2014년 제정된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평가 방식은 행정안전부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천안시복지재단의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3) 연구 분석 틀

본 연구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ESG 적용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의 ESG 관리목록을 참고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인 천안시복지재단의 2023년도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의 평가결과를 통해 ESG 적용과 확대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했다.

<그림 1> 연구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에서 ESG 행정의 확산 과정에 공공영역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ESG 적용 여부를 보고자 함에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ESG의 사회(S) 항목 내용과 가장 유사한 업무

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ESG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거버넌스(G) 항목에서는 공시, 만족도 결과 등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환경(E) 항목의 경우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ESG 실행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G 항목은 발굴, S 항목은 부각, E 항목은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의 ESG 적용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Ⅲ.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

1. 천안시복지재단 현황

1) 재단 소개와 ESG 도입

천안시복지재단은 2016년 개소식을 마치고 동년 10월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기획재정부 제2016-155호), 12월에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 15개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7년 12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외 1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2월은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외 1개소와 업무협약, 2019년은 충남한마음포럼 외 1개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0년은 SL홀딩스 외 1개소, 2021년은 동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외 5개소, 2022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외 11개소, 2023년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2024년 9월 기준으로 천안YWCA 외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달성했다(천안시복지재단 홈페이지, 2024).

재단은 상임이사 산하에 정책경영팀 3명, 행복천사팀 3명, 복지지원팀 2명을 운영하고 있다. 8명이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계약, 정보공개, 기본재산 관리에서부터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생계,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에는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천안시민⁷⁾과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해당하며,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

7)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단,

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이 있다. 복지시설지원사업에는 복지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공모사업, 복지시설 기능혁신사업, 행복키움지원단 맞춤형복지지원사업이 있다. 지정 후원 및 특화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제로 긴급지원, 브릿지 맞춤형 특화지원⁸⁾, 복지기관 맞춤형 포털지원을 한다. 정책사업은 천안형 복지 조사 연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힐링문화활동 지원, 천안시복지재단 홍보 및 공공성 확장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재단은 2022년에 「사회복지기관 ESG 경영 및 실천모델 연구」를 통해 ESG 경영을 준비했다. 연구보고서는 2021년 12월 지속가능경영재단에서 발표한 ‘ESG 경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3대 범주, 15개 영역, 43개⁹⁾ 지표를 소개했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의 서울 사회공헌 대상 우수프로그램 시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포럼 등 사회복지기관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파타고니아, 테슬라, 필립모리스, SK텔레콤을 목적이 조직을 이끈 사례로 들었다. 미쉐린타이어의 타이어관리 서비스, 다이슨의 손 건조기, 이니스프리의 진정성 있는 마케팅, 펩시의 일관된 철학과 진정성, 이루다의 다양성, 신뢰 확보, 공헌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한 미국 밀가루 회사, ESG를 담다 Win-Win하는 SK텔레콤의 글로벌 사회공헌, 영국 샌드위치 전문점 프레타담제의 기부 및 직거래, 이삭토스트의 상생 경영, 천주교 수원교구의 탄소중립 선포 등 부서의 사업방향 전환이 혁신을 이끈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ESG 경영 사례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목원관리원의 ‘ESG 경영 선포’, 서울에너지공사의 공정무역실천 통한 ESG 경영, 한국전력기술의 ‘ESG 경영’ 강연 수강 등 ESG 비전 선포를 사례로 들었다. 대학의 사례로는 대학 최초로 ESG 위원회를 신설한 건국대, ESG를 대학 정책과 학사운영 핵심의제로 도입한 건양대, 법인에 ESG 위원회를 설립한 한림대와 한림성심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을 발족한 중앙대, ESG 선도대학 선언한 삼육보건대, 숙명 2030 비전을 선포한 숙명여대를 소개했다. 그리고 기업시민 활동 사례로 펩시와 포스코의 활동을 안내했다. 그러나 대부분 ESG 이해를 돕기 위한 초기 단계의 실천 내용에

1인은 120% 이하

8) 저소득청소년문화예술지원 / 출산율 향상 지원

9) 43개 지표는 조직거버넌스 13개, 환경 8개, 사회 22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머물고 있어 사회복지기관의 ESG 적용 방법론 제시에는 한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천안시복지재단의 ESG 이해관계자(Stakeholder) 분석을 적용했다. ESG 전략으로 임직원(E), 사회(S), 투자자(I), 고객(C), 파트너(P) 등 다섯 가지 이해관계자(SPICE 모델)을 고려하여 ESG 전략을 설정하고 ESG 경영을 잘 추진했을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중간 결과들이 이해관계자마다 창출된다(천안시사회복지재단, 2022). 또한 재단의 ESG 경영상태를 환경(E), 사회적 책임(S), 투명 경영(G) 등 3가지 평가 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적용 지표로 행정안전부 지방출연기관 평가 지표, 중소기업부 평가지표, 대한상공회의소 평가지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복지기관의 ESG 평가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았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제공한 자체 진단표를 통해 살펴본 천안시복지재단의 ESG 경영 수준진단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ESG 핵심이슈별 전략방안을 수립했다.

<표 3> 천안시복지재단 ESG 경영 수준진단 분석결과¹⁰⁾

구분	배점	특점	평균	진단	수준	수준해설(연구를 위해 임의 설정한 수준임)
G(투명경영 /거버넌스)	150	135	89.3%	우수	1	1수준: 우수 80% 이상 2수준: 양호 60~79% 미만
E(환경)	85	75	88.2%	우수	1	3수준: 보통 40~59% 미만
S(사회)	460	411	89.3%	우수	1	4수준: 미흡 20~40% 미만
계	695	620	89.2%	우수	1	5수준: 매우미흡 20% 미만

천안시복지재단은 윤리인권경영선언에 이어 2016년 11월 10일에는 임직원행동강령, 2023년 8월 17일에는 ‘ESG경영 선언’을 했다. 지속 가능 경영실천을 위한 천안시복지재단은 ESG경영 실천이 현 시대 실천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각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적극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① 우리는 ESG경영실천이 우리 복지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핵심가치임을 인식한다. ② 우리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예방 등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다. ③ 우리는 윤리·인권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④ 우리는 천안시민과 협력 기관

10) 천안시복지재단(2022). 「사회복지기관 esg 경영 및 실천모델 연구」 제4장 천안시복지재단 ESG 경영 사례 분석, p. 61.

에게 신뢰받는 복지재단이 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천안시복지재단 경영실적(2023년도)

천안시 산하 출자기관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천안제6산단 주식회사 등 2개다. 출연기관은 천안사랑장학재단,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천안시청소년재단 등 6개 기관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천안시복지재단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인 ‘가’ 등급(S등급)을 받았다. 2023년 평가에서 ESG 진단 항목이 중요한 지표로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를 토대로 한 실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안시복지재단은 기관 경영평가 결과 90.96점으로 ‘가’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2024년 평가에서는 전년대비 1.53점 상승한 92.49점으로 나타났다.

<표 4>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등급

등급	가	나	다	라	마
점수기준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비율	10%	30%	40%	15%	5%

자료: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1) 경영관리

① 우수한 점

ESG 경영을 위해서 복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례를 공유, 나눔문화¹¹⁾ 확산을 위해서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였다(천안시,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및 농업법인 물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영유아 교육기관 나눔인선 교육 10건, 지역아동센터 학용품 지원, 지역축제 6회 참여,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2회 등 공익사업을 추진했다.

2023). 재단은 매년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충실히 구축하고 있다. 체계적인 조직관리¹²⁾와 외부전문가 참여비율¹³⁾ 등 경영관리, 기본재산과 기금 관리방안 등 운용계획¹⁴⁾을 수립했다. 의견 반영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정책사업이나 행복키움지원단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 적용하였다.

특히 다양한 교육¹⁵⁾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¹⁶⁾을 구축¹⁷⁾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 등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¹⁸⁾되었다. 재난발생시 대응체계도 명확¹⁹⁾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의 모습을 보였다.

② 미흡한 점

조직 내 전략경영체계, 윤리경영계획 등 다양한 계획 마련,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통한 경영전략 등의 연계성이 낮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²⁰⁾이다. 최근 3개년의 인건비 인상율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초과²¹⁾, 의견수렴 방법의 활용이 미흡²²⁾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부족²³⁾했다. 특히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가

-
- 12)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고, 연차휴가 사용, 휴가 분할사용 등의 제도적 지원과 건강증진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 13)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인사를 80% 포함시키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인적사항 요구,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00%로 구성되었고 외부전문가 참여로 시행,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 14) 자체 수입액이 이전 3개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복리후생비 집행액도 직전 3개년도보다 높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 15) 청탁금지법 설명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2회, 인권 교육, 임직원 행동 강령 교육, 청렴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전직원의 예방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고충상담원 2명을 지정하고 운영하였다.
 - 16) 부조리 통합신고, 청렴우체통 등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였다.
 - 17)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공개하고 있고, 조달계약 비율도 만점 기준을 충족, 조달계약의 성과가 높다.
 - 18)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 개정 권고사항 3건도 성실히 이행하였고, 윤리경영 3단계 환류시스템을 실천하고 있다.
 - 19) 재난안전 유형별 매뉴얼 마련, 재난안전관리 기본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사고가 전무 했고, 유도조, 응급처치조, 복구작업조, 상황조 등 재난 발생시 총괄지휘 및 분반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 20) 전반적인 재정운영방향과 재정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 21) 3개년의 인건비 인상율이 모두 가이드라인을 초과했다.
 - 22) 비정기적인 간담회, 티타임 등을 통해 편안한 소통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3) 재난 상황에서 유관기관 리스트와 비상연락망만 제시할 뿐 기관 내의 대응체계와 외부기관과

승진과 임용시 당사자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²⁴⁾는 지적을 받았다.

③ 개선 의견

조직구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체계도 작성이 필요하며, 운영 계획간의 연계²⁵⁾와 정합성 확보, 객관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전 직원 만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천안시 복지재단²⁶⁾만이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차별화된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경영성과

① 우수한 점

코로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물품지원 사업,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지원, 지역소비 및 투자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²⁷⁾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부금품 접수성과²⁸⁾를 제고하기 위해서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체계²⁹⁾를 구축하여 후원금품 모집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설환경, 기관 서비스, 기관 직원의 친절도 및 업무처리, 향후 이용 정도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 중 4.72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② 미흡한 점

사업간의 불균형으로 사업간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며,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³⁰⁾를 위한 시스

의 협업체계가 제시되지 못했다.

24) 전 직원의 만족도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여성임원이 전체 이사 17명 중 3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만족도 조사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 만족도 조사 역시 광범위한 고객층에 대한 정기적 조사라기보다 사업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다.

25) 조직진단과 연계되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지역상생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노력과 친환경찰향 구매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

27) 천안시복지재단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15,070명으로 3년 기준치 대비 616%, 복지기관 지원 건수는 646건으로 234% 초과 달성하였다. 복지문화 프로그램은 목표대비 900% 초과 달성, 복지분야 프로그램 평균 만족도는 96점으로 집계되었다.

28) 기준치 대비 119.2% 달성하였다.

29) 지역기관과의 간담회, 네트워크 회의 등 복지교류가 이루어졌다.

템이 취약하다.

③ 개선 의견

예산³¹⁾,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간 효과적 예산배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연도간에 취약계층 지원 실적이 불규칙적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확보 노력³²⁾이 필요하다.

IV. 사회복지기관과 ESG 연계

1. 사회복지기관의 ESG 경영 도입

ESG경영의 도입과 추진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자원고갈, 빈부격차 확대, 윤리경영부재 등 전통적인 자본주의가 한계에 이르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ESG가 각광을 받고 있다(황규일, 2023). 기업부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책임경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이익을 넘어 정부, 공공기관까지 ESG를 적용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김희연·김민재, 2023). 기업의 ESG 적용에 이어 행정 등 공공영역에도 ESG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지방공공기관인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도 정책변화에 대비한 경영평가 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ESG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ESG 경영원리 등 평가요소 반영 및 관련 항목의 지속적인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ESG 지표관리, 통합경영공시, ESG 관련 항목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지표에서 경영층의 리더십(5점, 정성) 지표는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실천 노력과 성과를 위해 도입되었다. 전략경영

30) 복지대상자의 사업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1)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준수하는 방향으로 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2) 최종 복지수혜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수요조사의 강화가 필요하다.

(5점, 정성) 지표는 윤리·인권·친환경 등 ESG 및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신규로 추가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조직 운영의 가치 제고와 사회복지사 실천의 기준으로 윤리경영을 추구했다.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선 현장의 선도적 노력과 인지도에 따른 봉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여파로 2년여 동안 복지시설의 폐쇄 또는 제한적 이용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위기론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전염병 확산뿐만 아니라 매년 정도가 심해지는 폭염 현상, 폭우로 인한 재난 등 기후 후 위기로 인한 다양한 현상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도 발생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한 사회복지시설장들은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Z세대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의 관심 주제인 기후위기 대응, 참여, 사회복지시설 대상자의 권리보호 등을 사회복지실천과 연결하기 위해 ESG 경영 도입을 고민하게 되었다(김희연 외 2022). 사회복지기관의 ESG 경영의 관심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ESG 적용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쪽이 더 많다. 주로 생산시설이 아닌 서비스 활동을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환경(E) 부문에 대한 실행방안이 무엇인지, 사회(S) 부문은 기존에 사회복지기관의 핵심 가치로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고, 거버넌스(G) 부문도 후원을 받거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현실에서 투명한 보고 등 운영을 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경우 행정으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진단 등급에 따라 계약조건이 달라지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간단체의 경우도 ESG를 실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시설 이용자와 관계기관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S) 부문 실천 파트너를 찾는 빈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사회복지기관이 ESG 경영에 참여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사회복지기관의 ESG 적용 방법론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복지관 ESG경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해설서(2021)’에 따르면 환경(E)은 환경경영의 목표, 활동 및 성과, 강화와 투자, 환경 관련 법/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S)는 노동관행, 안전보건, 인권, 이용자 권리, 청렴윤리, 지역상생,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해당된다. 지배구조(G)는 ESG 관리체계 구축, 운영위원회(이사회) 구성 및 활동,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회계 투명성 법규 준수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이옥재 외, 2024).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은 지역사회 공헌과 투명 경영을 표방하고 운영하는 맥락에서 ESG의 사회(S)와 거버넌스(G)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의 해설서 기준에 따른 환경(E)의 진단항목이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형식 및 제도에 치중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지표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로 다룬 천안시복지재단의 경우 2022년에 「사회복지기관 ESG 경영 및 실천모델 연구」를 통해 ESG 경영을 준비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했다.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ESG 모든 항목에서 우수 진단을 받았다. 2023년 8월에는 ‘ESG경영 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실천에 매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23년도와 2024년도 천안시 산하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인 ‘가’ 등급(S등급)을 받았다. 2022년 보고서에 기재된 ESG 평가지표와 천안시로부터 2023년과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ESG 지표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기관의 ESG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V. 결론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현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기존의 방법론에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ESG 경영으로 난국을 풀어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ESG 경영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한층 더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0년대부터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시작,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를 거쳐 현재 글로벌 ESG 경영으로 확산되었다(이종아, 2023). ESG 경영이 ESG 행정의 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는 사회복지기관의 ESG 적용은 선택의 단계를 넘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사회복지기관 ESG 경영 및 실천모델 연구」에서 천안시복지재단의 ESG별 배점을 환경(E) 85점, 사회(S) 460점, 거버넌스(G) 150점 등 총 695점으로 구분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사회(S) 부문의 업무가 가장 많고, 환경(E) 관련 점검 내용의 부족을 반영한 수치다. 그러나 사회(S) 부문의 과도한 점수 배분은 ESG 활성화 방법에 편중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된다. K-ESG 등 다양한 ESG 평가기관의 지표 배점에 있어 대부분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를 4:3:3으로 정하거나 대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배점을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다. 2024년 제2회 한국 ESG대상의 선정 결과를 발표한 한국ESG학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E) 40점, 사회(S) 30점, 거버넌스(G) 30점,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ESG를 하는 흉내만 내는 등 ESG Washing을 하는 기관에 감점을 부여하였다.

현재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환경(E) 진단 지표에는 기관이 친환경 자동차 구입과 운행,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생수 사용, 쓰레기 배출 감소 등 환경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기존 업무와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항목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실행방법을 모색하는 등 ESG의 균형 있는 진단과 평가가 전제되어야만 사회복지기관의 실효성 있는 ESG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ESG 적용과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E) 항목은 신규 내용을 발굴해 적용하고, 사회(S) 항목은 다른 영역의 기관과의 차별성을 위해 내용을 부각시키고, 거버넌스(G) 항목은 기존 항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1).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LIO),

<https://www.alio.go.kr>

- 김용길(2023). 「ESG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인천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023년 한국복지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ESG 경영추세와 복지경영의 대응, 79-125.
- 김용길(2023). 「ESG를 기반으로 한 인천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복지경영학연구, 12(12), 75-110.
- 김희연(2022). 「복지영역의 ESG경영을 위한 탐색적 연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사례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3), 177-194.
- 김희연·김민재(2023). 「사회복지분야에 ESG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사회복지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023년 기획호, 87-111.
- 김미림(2023). 「사회복지기관의 ESG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윤리경영의 매개효과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3년 한국복지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ESG 경영추세와 복지경영의 대응, 55-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사득환(2021). 공공기관의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 2021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사득환(2023).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정책방향,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성대학교.
- 사득환·김상봉·양세훈·오수길·윤종한·이정석·황기식. (2024). 「기후변화와 ESG 시대의 환경정책과 행정」, 서울: 윤성사.
- 산업통상자원부(2021). 「K-ESG 가이드라인」
- 양세훈·김현정·김성균·고광용·마희정·지선진·김연·안수지·박금옥·박연숙·박명분. (2023). 「11개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지방정부 ESG」, 파주: 한국학술정보(파주: 이담복스).
- 양세훈·사득환·오수길·홍형득·박보식·김성균·김현정·지선진·박명분·마희정·고광용·허남식·김연·박금옥. (2024). 「지역정책 ESG 전략」, 고양:대영문화사.
- 오수길(2021). 「ESG경영의 중요성과 공공부문 활용방안」, 2021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욱재·한은영·방준호(2024). 「ESG는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한 흐름이 될 것인

가?: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6(3), 29-55.

이종아(2023). 「사회복지분야 ESG 활용방안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산학협력 세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740-749.

중기이코노미, <비재무적 관점 성과지표에 관심 적은 중소기업-ESG 경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325>(2021.08.14.)

천안시(2023).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장) 2023년도(22년 실적) 경영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맥스컨설팅, 72-119.

천안시복지재단(2022). 「사회복지기관 ESG 경영 및 실천모델 연구」,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89.

한국거래소(KRX)(2023).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 esg.krx.co.kr

한국ESG학회(2024). 「2024 제2회 한국ESG대상 선정결과」, 2024.12.09.

황규일(2023). 「사회복지기관에 적합한 ESG경영 전략도출 및 성과관리방안 : 천안시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6(3), 165-184.

홍형득 · 박보식 · 사득환 · 양세훈 · 오수길. (2024). 「공공부문 ESG 전략」, 고양:대영문화사.

현장활동가를 위한 사례연구 및 작성방법

2025.4.4

이영철(전남대학교, 행정학과)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여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잘 남길 수 있게”

1. 글쓰기의 어려움

2. 사례, 사례 보고서

사례 바로보기; 사례 보고서의 기본

3. 현장 활동보고서 작성: 지침

- 짧은 글: 예시 + 분석해보기

- 활동보고서 써 보기

좋은 보고서 쓰는 **비법?**

비법: *비법은 없다.*

다만, 세 가지 조언

- 1) FOWG: 글쓰기 공포증
- 2) Give me a KISS: 간단+명료
- 3) Training: 꾸준한 연습

FOWG?? 글쓰기 공포증

(Fear Of Writing Good)

-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

* 받아 적기와 적자생존하는 나라

평준화 시대의 초상

--> 차이와 창의(創意)의 시대: 글로 표현하라

- 글쓰기? 멋진 문장으로....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Anna Karenina, 첫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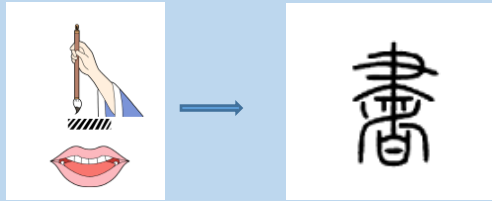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M. Mitchell

서언 (pre-face) 序言, 緒言

글? 書? write (scribe)?

글: 굽다 - 글; 그리다

서 書



刻 각 새길 각

write - scribe 찢다 굽적거리다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간단 + 명료

- 만연체 문장;

멋진 문장에 대한 오해; 한국어 문장

- 보고서 쓰는 목적: 가) 현안, 상황 보고 나) 해결 방안 제안

- 의미 전달 (+ 감정 전달)

→ <간단 + 명료> 할 수록 좋다.

Just Do It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비틀거리는 여수국가산단, 지역사회가 관심을

/이정록(대한지리학회 회장 역임)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42898936653077028>

여수국가산단이 비틀거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 집적지가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구체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과잉 공급 등이 얽히고설킨 결과다.** 여수국가산단 침체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 지역경제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지역사회 과제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경고등이 켜진 지는 **제법 오래 됐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다. 국내의 공급 과잉과 중국의 자급률 성장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석유화학 '빅4(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의 2024년 영업이익은 2022년에 비해 16분의 1로 줄었다. 빅4의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사업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 빅4는 나프타 분해 설비(NCC)를 기반으로 석유제품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다. 그런데 중국이 2010년 이후 관련 설비를 증설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켰고, 자급자족을 넘어 외국에 수출까지 했다. 국내 빅4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여수국가산단도 직격탄을 맞았다.

여수국가산단은 **뚜렷한 징후를 보였다.** 공장 가동률 하락과 공장 가동 중단이 그것이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산단 내 NCC 3사(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작년 3분기까지 평균 가동률은 80% 정도로 2021년에 비해 18% 정도 감소했다. LG화학은 작년에 SM(스티렌모노머) 공장 문을 닫았다. NCC 2공장 가동도 중단했고 매각을 검토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작년 8월부터 일부 공장(PET, EG, ECA) 가동을 중단했다.

여수국가산단 침체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남도의 위상 추락이다. 전남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2년 기준)에서 울산, 충남, 서울에 이어 전국 4위다. 지방소멸의 대명사로 불리는 전남도가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표에서 꼴찌를 면하는 이유는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의 생산능력 덕분이다. 작년 생산액은 약 84조 원에 달한다. 전남도 국세 징수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런데 공장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면, 전남의 경제력은 그야말로 바닥권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여수국가산단 침체는 광양만권 도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수-순천-광양으로 이어지는 광양만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산업벨트다. 석유화학, 조선, 철강, 항만 관련산업이 안정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여수와 순천과 광양은 연담화된 단일 도시나 다름없다. 광양만권 3개 도시는 전남 인구의 39%, 전남 지역내총생산의 57%, 전남 제조업 생산액의 82%를 차지한다. 게다가 여수는 '핫'한 관광도시로, 순천은 정원생태도시로 재탄생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고, 광양만권에 기업과 재화와 서비스 유입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산단에 붙어닥친 먹구름은 광양만권이란 '지방 중추도시권' 구축에 마이너스다.

여수국가산단 침체는 **여수 지역경제에도** 치명적이다. 산단에는 GX칼텍스와 LG 화학을 포함해 27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도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여수시 지방세 수입에서 산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48% 정도다. 하지만 산단 입주업체 불황으로 지방 세수가 급감했다. 2023년 4천억 원에서 2024년 2천927억 원으로 줄었다. 전년 대비 무려 27% 감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여수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거다.

여수국가산단이 침체 늪에서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국내 석유 화학 업계 불황은 정부 산업정책 잘못이나 개별기업의 경영실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이나 전남도와 여수시 차원의 노력으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고민이 깊은 이유다.

차선책으로 전남도와 여수시 등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정되면 업체들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정 기준'을 완화한 시행령을 발표했으니 여수국가산단에 긍정적이다. 전남 동부지역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여수국가산단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문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수국가산단은 지금까지 전남 경제를 이끈 기관차였다. 광양만권 3개 도시를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성장시킨 인큐베이터였다. 그런 여수국가산단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이젠 지역사회가 여수국가산단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시론]여의도 명가수 감별법 - 경향신문

[시론]여의도 명가수 감별법

우리 민족이 노래를 즐기는 것은 옛날부터 이웃 나라인 중국에까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노래 즐기기의 최신판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너목보)라는 TV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색다른 묘미는 누가 누가 잘하나를 가리는 데 있지 않고, 온갖 제스처와 코스프레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다양한 경력의 출연자 중 음치와 실력자를 가려내는 데 있다. 화려하게 치장한 출연자 중 가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너목보>를 보며 가짜 목소리가 허공을 찌르는 한국 정치를 떠올리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정체를 알기 힘든 출연진을 가진 한국 정치, 그 총선 무대가 다가오고 있다. '너목보' 정치를 보며 가짜 목소리를 찾는 즐거움이 아니라, 짜증을 느낄 일반 시민들을 위해 진짜 실력자를 감별하는 나만의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의도 명가수를 자처하는 집단은 모두 넷이다. 자칭 보수 하나, 자칭 진보 하나, 자칭 중도 둘.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낼 기준이 많으면 헛갈린다. 둘은 부족하고, 넷은 넘친다. 딱 세 가지, 잡(job)과 집과 교육을 소개한다.

첫째, 잡(job). 일자리 창출은 모든 출연자에게 필수다. 성장, 창조경제, 동반성장,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코스프레에 속지 말자. 말의 성찬에 속지 말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한국의 대기업 집중도는 경제규모가 큰 나라 중 세계 최고다. 그런데 대기업의 투자는 고용 유발효과가 낮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이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말하다가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 동반성장 등을 곁들이는 출연자는 자신이 춤추는 발라드 가수라고 주장하는 거다. 현란한 춤사위에 속지 말자. 중소기업 살리기를 똑바로 발음할 수 없다면, 일자리 창출이란 노래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일차 탈락자다.

둘째, 집. 한국에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물건이다. 투자가치를 위한 집. 그래서 한국의 토지와 집의 가격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다. 젊은 부부가 집 사기를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고 싶고, 살고 싶은 '살 만한' 집을 제공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 부동산 투기에 과세하고, 주택 개발에 앞장서면 '살 만한' 주택을 제공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한 경기회복이란 가짜 목소리에 의존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출연자가 많이 있다. 당연히 탈락 대상자다.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지 않고, 투기 세력에 맞서 싸우며 살 만한 주택을 제공해 줄 출연자라면 그는 청중과 공감할 수 있는 실력자다. 추천 대상이다.

셋째, 교육. 친구들과 놀며 배우는 즐거운 학교는 더 이상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협동이 아니라 경쟁,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평준화 체제의 와해 등으로 한국 교육체계가 망가졌다.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의 핵심에서 열화된 교육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교육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설픈 해결책들이 변주곡으로 해석되어 유통되고 있다. 교육 문제 해결의 본 주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교육 회복이다. 본 주제가 빠진 변주곡은 감동을 줄 수 없고, 와해된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다양성, 영재교육, 특수목적 교육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출연자는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려 드는 사람이다. 공교육 회복이 빠지면 들을 필요 없다. 고음이 아니라 저음이 좋은 가수, 일부 특권층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을 향해 노래하는 이가 진짜 실력자다.

이제는 자칭 여의도 명가수 중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구분할 감별법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분께는 고민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다. 그런 감별법은 필요 없다. 선거에서는 집단만 보면 된다. 아무리 잘났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집단의 목소리를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총선 무대에 나선 자칭 명가수들에게 잡과 집과 교육, 세 가지 기준에 따라 O, X 표를 하다 보면, 그들의 거친 목소리를 볼 수 있다. '너목보'의 정치지만 우리는 이제 즐길 수 있다. **다가오는 총선,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즐기자.** 선거는 축제의 장이라 하지 않나.

Training(훈련)

“아무나 한 강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다.”

“아무나 박태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수영을 즐길 수 있다.”

→ 기본 자세/틀, 호흡법 + 남들 따라 배우기
+ 꾸준한 연습 =>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일)

1. 기본자세(지식) + 기본틀

서론 - 보오온~~~~~로오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보고서의 목적..... 사업의 경과; 무엇/어떻게/효과
요약적으로 소개

#1 여수산단: “비틀거리고 있다” 돌직구로 현황을 기술
원인-심각한 문제다

#2 여의도명가수: <너목보>와 너목보 정치;
흥미 유발 + 논의구조 소개

본론: 쓸거리/주장: 내용요소 - 연결

- 문제에 대한 조사와 사색의 결과물을 정리
주장과 증거 제시

#1 여수산단: 1) 경과 - 현황 소개

2) 미칠 영향: 전국적 위상 추락

광양만권 경쟁력

여수지역 경제

3) 탈출 가능? 가능 조치

본론:

#2 여의도 명가수

정당의 정체성 판별 기준 제시 + 논의

1. 잡 ; 2. 집 ; 3. 교육

각각의 주제를 간략히 논의하되, 예능프로에 빗대어 춤사위, 발라드, 가짜 목소리, 청중과의 공감, 주제와 변주곡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호소

결론: 마무리, 2가지 형식

가) 간략 요약하며, 주제를 재강조

나) 요약보다 추가적 요소를 제시하며 마무리

결론, #1 여수산단(가형)

여수국가산단은 지금까지 전남 경제를 이끈 기관차였다. 광양만권 3개 도시를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성장시킨 인큐베이터였다. **그런 여수국가산단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이젠 지역사회가 여수국가산단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결론, #2 여의도 명가수(나형)

이제는 자칭 여의도 명가수 중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구분할 감별법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분께는 고민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다. 그런 감별법은 필요 없다. 선거에서는 집단만 보면 된다. 아무리 잘났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집단의 목소리를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총선 무대에 나선 자칭 명가수들에게 잡과 집과 교육, 세 가지 기준에 따라 O, X 표를 하다 보면, 그들의 거친 목소리를 볼 수 있다. '너목보'의 정치지만 우리는 이제 즐길 수 있다. **다가오는 총선,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즐기자. 선거는 축제의 장이라 하지 않나.**

현장 사례에 대한 보고

** 사례, 사례연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 통계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연구라는 오해
- 사회현상은 몇몇 변수로 바꾸어 표현하기 어려워;
현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드러내 주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분석 방법인 사례 연구가 더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어;
- 어차피 사회현상의 특수성은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
깊이 있는 분석이 일반화보다 적실성과 사회적 의미를 지님

- 문제는 좋은 사례보고를 하느냐의 여부

현장활동가의 **좋은 사례 보고서**는 ...

-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의도한 바(활동의 보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좋은 보고서의 **골격을 튼튼히**

무 - 어 - (누) - 효

무: 무엇을 했느냐/ 보고 대상의 활동
사업 목표, 정책목표,

어: 어떻게 했느냐, 활동을 수행한 방법,
사업 수단

누: 누가 했느냐, 정부, 민간, 준공공단체
거버넌스(네트워크)

효: 효과를 거두었느냐; 효과 판단의 기준

작성을 위한 지침:

가) 분석틀의 모방은 죄가 아니다.

- 좋은 보고서의 틀을 따라해 본다.
- 작가, 미술가 : 거장의 글 필사, 베껴 그리기
→ 자기 것으로, 자기 주제에 맞게 활용하라

나) 우선 순위를 매긴다.

- "머가 중한디?" 다수의 목표 추구할 때
- 단순 나열을 피하고, 비중을 준다/개념화 한다
- 요소들간의 관계를 구조화한다.

다) 적절한 자료를 수집한다

- 보고서의 생명은 이야기다(narrative); 수치나 그래프 등의 자료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든다.
- 특히, 효과를 논의할 때 자료가 중요하다

라) 이야기를 구조화 한다

-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소제목**을 붙인다.
- 상상력을 발휘하여 호소력을 높인다.
(한강과 박태환을 가상의 경쟁 상대로 삼는다.)

사례보고서의 일반적인 모습

1. 서언:

* 이 보고서의 목적은 (무엇/사업)이 (어떻게) (누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거둔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는데 있다.

* 이 보고서는 무-어-누-효의 보고를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업 경과*를 포함시켜도 무방

2. 본문:

* 무-어-누-효 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소제목 부여

* 자료 포함

사업의 전반적인 소개

사업의 진행

사업의 성과

3. 결론 (혹은 마무리 -조금 비공식적인 경우)

- * 요약정리,
- * 혹은 잘한 점, 부족한 점(앞으로 하고 싶은 점),
해야할 점

보고서 사례 – 골격 따라 재구성 해보기

지역(Local)을 재생(Rise)하다, '로컬라이즈 군산'의 도전 스토리

<https://skinnonews.com/archives/119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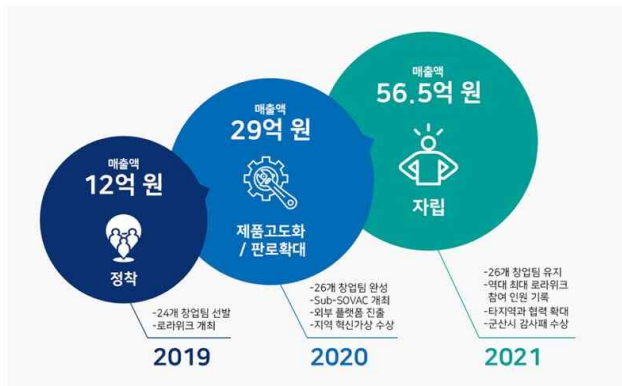
지역(Local)을 재생(Rise)하다, ‘로컬라이즈 군산’의 도전 스토리

2022.06.30 | SKInno News
<https://skinnonews.com/archives/119082>

군산은 한때 자동차, 조선 중심의 산업도시로 위세를 떨친 도시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급격하게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지역 소비 위축, 청년 인구 유출 등의 위기를 겪습니다. 2018년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2019년, SK E&S는 군산을 대상으로 로컬라이즈(Local:Rise)라는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도시가스 자회사인 전북 에너지서비스가 위치한 익산의 이웃 지역이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대상지이기도 한 군산에 다양한 로컬 기업 창업과 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SK E&S가 만들고 지역사회,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창업가가 함께 뚝 ‘로컬라이즈 군산’의 3년을 소개합니다.



로컬라이즈 군산이 일군 3년 간의 성과

2019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든 가이드라인, 창업팀의 지역 정착 및 창업 모델의 구체화에 힘써”

2019년 당시 군산은 경제의 활기를 잃고 청년층을 포함한 순 유출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공동체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군산은 여전히 문화, 역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수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주민과 지자체 역시 지역 활성화를 향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SK E&S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지역 소득 창출'을 로컬라이즈 군산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SK E&S는 직접 지자체, 소상공인 대표, 지역 신문사 등을 찾아다니며 선발할 팀의 가이드라인을 세심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매력보다는

지역 재생에 대한 의지와 열정, 목표에 대한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24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2020년도 2개 팀 추가 선발로 로컬라이즈 창업팀, 로컬라이저(LocalRiser)는 총 26개 팀으로 꾸려집니다.



26개 로컬라이즈 창업팀, 로컬라이저

프로젝트 시행 초기에는 창업 모델 구체화 및 지역 정착에 힘썼습니다. 군산 지역 전문가를 만나고 광주, 시흥, 강릉 등의 지역 재생 사업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창업팀 육성을 위한 최고의 전문 파트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Work(공유 오피스), Stay(거주 지원), Learn(코칭), Play(페스티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로컬라이즈 창업팀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한 페스티벌, ‘로라위크(로컬라이즈워크)’를 개최해 하루 1천여 명의 방문자를 이끌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민과의 친밀감을 높였다는 면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로라위크는 이후로도 매년 개최되며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합니다.

2020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팬데믹 위기 극복, 창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 일궈"

2020년은 창업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대한 한 해였습니다. ‘로컬라이저(Localriser)’라고 불리는 26개 창업팀은 당해 총 245개의 신규 제품을 개발했고, SK 스토아, 네이버, 쿠팡, GS홈쇼핑 등의 온라인·방송플랫폼에 상품을 입점시키는 등 실질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프로젝트 운영에 제약이 생기기도 했

지만,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로컬라이즈 군산’을 알리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군산을 포함한 타지역의 로컬제품과 여행지를 소개하는 ‘로컬시티展’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를 점검하고자 온라인으로 특별히 진행된 ‘Sub-SOVAC*’ 행사를 직접 기획·운영하여 로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 SOVAC(Social Value Connect)는 국내 최대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으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소통하는 장입니다.

2021년, "프로젝트 진행 3년, 단 한 팀의 낙오도 없이 진정한 지역 재생 및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다"

2021년, 판로 확대 및 그에 따른 수익 상승으로 로컬라이저는 지속가능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례로, 롯데백화점 등 서울 시내 주요 오프라인 매장 40곳에 입점한 로컬라이저 ‘리디브’는 ‘봉화정 꿀스틱’ 상품으로 단품 매출 1억 원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 리디브의 협력 파트너인 양봉업체의 소득 역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부산, 광주 등 대형 콘텐츠 페어에 초청된 군산 지역 캐릭터인 ‘떡방이와 친구들’은 약 30개 지역 업체와 180개의 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출처 : 떡방이와 친구들 공식 인스타그램

군산 특산품인 맥아를 활용해 부산, 인천 등 타지역의 수제 맥주 브랜드와 공동으로 팝업스토어를 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팀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만든 19개의 군산 시그니처 상품 및 패키지가 모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며 로컬라이즈 군산의 사업성을 보다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로컬라이즈 군산, 지역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다

초기 목표대로 로컬라이즈 군산은 군산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로컬라이즈 군산의 전체 창업팀이 만든 매출액은 총 100억 원에 달합니다. 2019년 12억 원, 2020년 29억 원, 2021년 56.5억 원 등 코로나19 등의 위기에서도 매년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팀의 낙오 없이 26개 팀 모두가 생존한 것은 곧 로컬라이즈 군산의 성공을 증명합니다. 창업 3년 차, 평균 생존율이 39% 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로컬라이즈 군산의 ‘생존율 100%’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이에 따라 ‘로컬라이즈 군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 주도 지역재생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SK그룹에서 주관하는 수펙스(SUPEX)추구상을

수상하는 한편 2021년에는 군산시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잼버리 공식 캐릭터 제작사 선정,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공한 지역재생 모델의 벤치마킹을 위해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이 방문하기도 했고, 실제 ‘청년 Stay 주거 지원 사업’ 등 주요 정책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3년간의 물질적 지원은 마무리되었지만 SK E&S는 향후에도 ‘로컬라이즈 군산’이 대한민국 지역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도록 군산시 창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SK 멤버사들 및 지자체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타 멤버사 및 지역으로 지속해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미니 인터뷰] SK E&S ESG 기획팀 최은정 매니저

=====

Q. 2022년 수펙스(SUPEX) 추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로서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직접 참여하셨는데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청년 벤처 기업이 오롯이 자립하는데 보통 3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데스 벨리(Death Valley)’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창업 초기에 인력, 자금 문제 등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창업팀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로컬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팀의 중도 탈락 없이, 26개 창업팀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Q. 3년여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애로사항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 프로젝트 초기에는 지역사회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지는 대기업에 대한 경계와 편견과 맞서야 했습니다. 로컬라이즈 군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SK E&S의 진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꾸준한 소통의 결과, 지역사회는 로컬라이즈 군산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Q. 로컬라이즈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이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 로컬라이즈 군산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SK 그룹 내 외부로 공유해 지역 재생의 확산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미 ‘SK머티리얼즈’의 ‘영주 경제 속으로’와 ‘SK넥실리스’의 ‘조인 정읍(Joy’n 정읍)’ 프로젝트가 로컬라이즈 군산을 벤치마킹하여 탄생했습니다. SK E&S의 도시가스 자회사인 전북 에너지서비스를 통한 익산 지역 연계 창업가 육성 사업 추진에서도 로컬라이즈 군산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G 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 대응

- 시장경제 친화적 지방정부 ESG 구상 -

2025. 4. 4.(금)
오후 15:10~16:30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고려대 행정학 박사수료

123



Table of Contents

1. ESG 조례 및 입법 동향(기본법 등)
2. 시장경제 친화적 지방정부 ESG



Part 1

ESG 조례 및 입법 동향

1. ESG 기본 개념 및 이슈

ESG는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지표

Environmental (환경)

기업의 친환경 경영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 에너지 효율
- 책임있는 구매, 조달 등

Social (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고객만족
-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 지역사회 관계
- 공급망 관리
- 근로자 안전 등

Governance (거버넌스)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
- 뇌물 및 반부패
- 로비 및 정치 기부
- 기업 윤리
- 컴플라이언스
- 공정경쟁 등

2. 국내외 ESG 전개 상황

○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 회사인 블랙록(BlackRock)의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

- 2020년 글로벌기업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SDGs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인 ESG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 이후 글로벌기업 중심의 ESG 폭발적 성장
- 2023년 래리 핑크 회장은 ESG 경영의 정치 쟁점화를 지적하며 ESG 단어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
- 미국 공화당 부정적, 트럼프 전 대통령 파리기후협약 탈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기후협약 재가입
- ESG는 미국이 아닌 EU가 지속가능경영을 견인하는 형국,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스탠스 관건

○ 한국 2025년부터 단계적 실천을 통해 2030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이 ESG 정보공개 의무

- 수출기업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의 ESG부터 제품판매를 하는 유통기업까지 준비를 해야 함
- 전 과정의 기업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압박 확대
- 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투자에 집중할 만큼 단기적으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실에 발을 빼는 형국

3. 지방자치단체 ESG 활성화

- ESG를 실천해야 하는 대상이 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 현실에서 ESG 정책의 확산 한계
 - 관련 법률 제정 등 민간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공공영역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기
 - ESG 정책과 관심도에 있어 중앙정부는 소극적,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음

- 2024년 8월 8일 기준으로 ESG 조례 제정은 100건(17개 광역 시도, 74개 기초시군구)
 - 교육청(전남, 충남, 강원, 인천)에 이어 부산은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까지 제정
 - 조례 대상은 대부분 민간기업이고 지자체 산하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 조직이 빠져 있음
 -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 이외 전남 완도군은 공무원 포함 완도군 전체를 대상
 - ESG를 이해하고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해야 될 정책 공급자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필요
 - ESG 평가지표도 민간기업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조직의 ESG 지표 개발 및 확산 필요
 - 공공부문 ESG 확산위해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지표) 평가에 반영되어야 작동

4.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ESG 기본법(안)

○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시작은 UN이 정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출발

- ESG 이해와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DGs의 출현과 시대적 배경과 설명이 필요함
-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WSSD), 한국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실천 모범 사례 소개
-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 2018년 12월,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
-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기후와 환경에 초점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1.4. 제정

- 국무조정실,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 모색 초점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본법」(ESG기본법) 초안 발표, 2023.7.20. 국회의원회관
- 대통령령(제3456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략국) 제3항 제5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5의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2024.6.27 시행)

5.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ESG 조례 제정 현황

ESG 조례 제정 수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특별시	14개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성동구, 영등포구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부산광역시	2개	-	-	사하구, 중구
대구광역시	2개	-	북구, 달서구	-
인천광역시	4개	-	남동구, 서구	계양구, 미추홀구
광주광역시	4개	-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대전광역시	2개	-	유성구	서구
울산광역시	1개	-	-	동구
경기도	14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강원특별자치도	2개	-	-	원주시, 속초시
충청북도	3개	-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
충청남도	1개	-	아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6개	-	고창군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
전라남도	12개	-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광양시, 신안군, 진도군, 나주시(1), 나주시(2)
경상북도	3개	-	구미시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4개	-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합계(비율)	74개(32.7%)	6개(2.65%)	36개(16%)	32개(14.1%)

※17개 광역시도 ESG 조례 제정 수 포함하면 91개 지방자치단체에 100개(2개 이상 포함) 조례 (2024.08.08.기준)

6. 지방의회 ESG 관련 활동 현황

지방의회 구분	의원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보고서 발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ESG 의원 콜로키움 (colloquium)	지자체 ESG 정책 마련, 서울ESG 경영포럼 후원	2023년 8월 발간 10개 자치구 11명 의원 구성
	서울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의회 의원 포럼(ESG 서울포럼)	서울ESG의원 콜로키움 2023년 10월
	서울연구원 주관	서울 ESG 경영포럼	2024년 6월(8회 예정)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ESG 연구 포럼	경기도민 ESG 실천 방안 연구	2023년 9월 발간 2024년 7월 우수 의원연구단체
경상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탄소중립사회 실천을 위한 'ESG 경영 실천 아이디어도출' 민·관 협력 토론회	2022년 2월 개최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연구회	ESG 분석 및 지원방안, 핵심 이행 과제	2023년 2월 발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實里會	생활밀착형 ESG 기반정책 및 활성화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서초ESG실천연구회 ESG-건강복지연구회	ESG 기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증진방안	2024년 2월 발간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ESG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원시 혁신 방안 연구회	ESG 인식조사 및 인프라 구축 방향을 모색	2023년 11월 발간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ESG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연구회	ESG 평가 기준 벤치마킹 연구, 제도 마련	2023년 11월 발간
경기도 평택시의회	ESG연구회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활성화	2023년 11월 발간
강원도 춘천시의회	춘천ESG 실천 연구회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국내외 사례, 기업경영 등 환경 중심의 실천사업 발굴	2024년 4월 발간 2024년 8월: 종이 없이 131

7. ESG 행정 지방정부 정책사업 추진 방식

ESG 정책사업 추진 방식	기초지방자치단체
ESG(행정) 전략 수립	완도군, 금정구
ESG행정 추진(이행) 체계 수립	봉화군, 양평군, 광주시, 군산시
ESG행정체계 구축(수립)	수영구, 김해시
ESG정책 제안	은평구
ESG (종합)계획 수립	부안군, 경주시
ESG행정(정책) 도입	종량구
ESG행정협의회 구성	(여수시.순천시.광양시) 협약
증평 C+ESG정책 수립	증평군
하수도 공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	안성시
기업 ESG 대응 지원 기본계획 수립	창원시

성동형 ESG 실천 사업 공모(서울 성동구), 자양전통시장 ESG 실천(서울 광진구), ESG 실천도시와 관내 친환경 관광 가치 실천 ESG 캠페인(동해시), ESG 실천 '업사이클링 캠페인' 전개(청주시), ESG 공동 실천 협약(충남 공주시와 아주자동차대학교와 협약), ESG실천 청각장애인 동행 축제 진행(횡성군), 충남 도민숲 ESG 예금 간부공무원 단체 가입(홍성군), ESG를 위해 전 군민 버스요금 무료 정책 실현(전천군)

8. ESG 행정 지방정부 정책사업 사례

지방자치단체	ESG 실천 내용	
광주광역시 서구	월별 기후행동 프로젝트 수립· 시행	일회용품 멀리하기, 이제는 용기내, 삼삼오오 나무(식물)심기, 사랑한자 우리 농산물, 오늘은 안쓸거야! 물티슈, 육식 NO 채식 YES, 칠월에는 부채들고, 팔에는 텀블러, 구백미터는 우리 발로, 십시일반 모아봐요, 십일월은 차를 비우고, 십이월은 메일 비우기
경기도 부천시	하수처리시설 미활용 열에너지를 국내 최초 캐스케이드(열에너지공급 직렬배열) 방식으로 활용하여 지역난방에너지로 공급하고, 스마트 주차시스템, 모빌리티 전용주차장 설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건립 추진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전 세계 평균기온 1.5°C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설치하고, 시청사 화장실에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 캠페인, 전국 최초 탄소중립 마을 추진	

9. ESG 조례 발의주체별 비교

조례 발의 구분	ESG 조례 명	소속 정당
집행부 조례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신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여야 공동발의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무소속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무소속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무소속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무소속
	나주시 관광·문화·환경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무소속

10. 소속 정당별 ESG 조례 제정 현황

소속 구분	발의 건수	소속 구분	발의 건수
더불어민주당	65건	국민의 힘	28건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	2건	무소속	5건

- 2024년 8월 30일 기준 ESG 관련 조례 제정 100건 중 의원발의(94건), 단체장 발의(6건)
- **지방자치단체장 발의 6건**은 서울 1, 충북 2, 전북 2, 전남 1건임
- 경기도 17건 조례는 100% 지방의원 발의 조례(집행부 발의 없음)
- 일부 ESG 조례는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의회, 전통시장, 시민단체, 문화체육관광 등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제정
- 대부분 ESG 조례 대상이 지역 내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방정부 ESG 조례는 **시민+행정+의회+기업** 등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 필요
- 최초 **ESG 집행부 발의 + 전 시민이 참여**하는 ESG 조례 제정 홍보

11. ESG 법률(안) 내용 및 구성

법률발의(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 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발의연월일	2023. 9. 1	2023. 11. 9
발의자	이원욱 대표발의(25인)	조해진 대표발의(10인)
의안번호	제2124164호	제2125328호
제안이유	기업의 <u>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u> 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 규제가 아닌 <u>기업의 순조로운 ESG체제로 전환</u>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정하는 등 <u>실효적 기반을 마련</u>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u>수출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u> 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u>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u> 하기 위한 <u>컨트롤타워를 설립</u> 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를 마련
제정안	총 9개 장과 55개 조문, 1개 부칙 구성	총 6개 장과 35개 조문, 1개 부칙 136

12. ESG 법률(안) 내용 및 구성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 등 1)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3)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태조사 4)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가. 총칙 1)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책무 등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업무 1) 금융기관의 책무 2) 공공금융기관·연금기금 우선적 자금공급 및 투자 등	나.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1) 국가, 지방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계획 및 추진 계획
다.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공시 등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 의무공시기업 및 자발적 공시기업 2) 환경정보 공개 등의 의제	다. 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및 인 1) 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및 우수기관 인증 등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2. ESG 법률(안) 내용 및 구성 (2)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p>라. 검증기관 및 평가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증기관의 등록 등 2) 평가기관 등 3) 검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p>라. 환경·사회·거버넌스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위원회의 설치 등 2) 지방 환경·사회·거버넌스위원회의 구성 등 3)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등
<p>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참여 기업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운영·금융상 지원 2)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조달상 지원 3)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4)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p>마. 사회 전반의 환경·사회·거버넌스 확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정책의 조사 및 공표 등 2)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 등
<p>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2)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한 소비문화 확산 등 3)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통계사업 등 4)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센터 지정 	<p>바. 보칙</p>
<p>사. 보칙 및 벌칙</p>	

13. ESG 법률(안)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주요내용	조해진 의원안(2125328)	이원욱 의원안(2124164)
ESG 공시 의무화	민간기업을 포함한 '기업등'의 공시 의무화 (민간기업의 범위 미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무공시기업에 한하여 ESG 공시 의무화
컨트롤타워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 위원회(대통령 소속)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기업 지원	'기업등'에 대한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조달, 조세, 부담금 상 혜택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공공시설점용, 금융, 조달 및 조세 상 혜택
공공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관련규정 부재	ESG 경영 선도 기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우선적자금공급
연금기금의 우선 투자	관련규정 부재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등 연금기금의 우선투자
ESG 경영공시 기반 마련	검증기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기준 요건 마련	ESG 경영 검증기관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 표준평가지표 공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등 평가체계 마련
ESG 경영 지원기관	ESG 경영지원 전문기관	ESG 경영촉진센터
벌칙	관련규정 부재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검증보고서 거짓 작성, 비밀누설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검증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자율적인 ESG 경영환경 조성

- 민간 주도 ESG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 정부의 ESG 지원 필요
- 기업/산업 특성 미고려 ESG 경영에 대한 규제 위주 정책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나친 강조 시 기업경영 장애 및 기업투자 위축 초래

친환경적 ESG 혁신환경 조성

- 기술/생산에 대한 친환경적 혁신 촉진 필요
- 친환경적 ESG기업 이미지로 기업브랜딩 및 소비자 공략
-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원전(+SMR) 믹스 필요

ESG를 통한 기업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

- 기업 이윤창출 극대화 방향 추진(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주주이익 극대화)
- 기업의 태양광 및 풍력산업 진출 혹은 RE100 달성 지원 필요



Part 2

시장경제 친화적 지방정부 ESG 전략

1. ESG 요구 확대와 지방정부

-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ESG 정책 도입 확대
- 지역 내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기업 지원 필요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 요구 증가

2. 지방정부의 ESG 역할

- ESG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및 조례 제정
-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 대상 ESG 교육·컨설팅 지원
- 민관협력 ESG 프로젝트 추진

1. 환경(E):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인프라 구축

2. 사회(S): 공정 노동, 지역사회 상생, 사회적 기업 지원

3. 지배구조(G): 투명 행정, 시민 참여 확대, ESG 평가체계 구축

1. ESG 행정 체계 구축

- 지방정부 내 ESG 전담 조직 신설
- ESG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실행 계획 수립
- ESG 공시 및 평가제도 도입

2 친환경 정책 강화 (E: 환경)

-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시행
- 친환경 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정책 강화

3.3 사회적 책임 확대 (S: 사회)

- 공정노동 및 지역사회 상생 지원
- 사회적 기업 및 ESG 우수기업 육성
- 주민 참여형 ESG 거버넌스 확대

3.4 투명한 행정 운영 (G: 지배구조)

- 지방정부 ESG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
- 시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
- ESG 기준에 맞는 공공조달 정책 도입

ESG 관점의 지역경제

- 각 지방정부는 도시정부의 경우 더 큰 경제규모 및 인구를 갖기 위해,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과정에서 많은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시 법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규제를 지켜야 하며 동시에 기업들로 하여금 탈탄소 요구와 압박이 커지고 있음
-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과 ESG 분리 생각 어려운 세상
- 지방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 당면한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일자리 위기 등의 문제를 기업과 협업해 해결하고 지역성장의 새로운 돌파구 필요
-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 지원과 역할 강조

E 관점의 지역경제

- 환경적 관점: 신안군과 같이 지방정부 주도로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에너지융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마을에 발생한 수익을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탈탄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지향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지정 및 확대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경과 지역경제를 함께 보는 것이다.

E 관점의 지역경제 사례: 제주 가시리마을

- 제주도 가시리마을은 재생에너지 사업 유치 모델로 주민공동체 주도 풍력 자산화 민관협력 모델로 모범적 사례다. 제주도는 2009년 1월, 제주에너지공사 주민주도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가시리 마을은 500가구 1,2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제주도의 바람과 너른 평원을 자연자원을 활용해 공동목장에 풍력발전을 유치했다. 가시리풍력단지는 부지면적 약 3만m², 한진산업 1.5MW 터빈 7기, 유니스·효성 705kW 터빈 6기가 있는데, 연간 약 3.4만 MWH의 전력 생산에 따라 계통한계가격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및 주민참여형 추가 REC를 포함하면 전력판매수익으로 30억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가시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첫째,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약 3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주민 기여의 구체적 공유 방향으로 주민배당, 주민생활 편의시설 설립 및 관광자원 확충, 마을만들기 등에 지역에 이익을 재환원하고 있다. 아울러 2년 이상 거주한 마을주민들에게 가구당 월 2만원 수준의 전기료/TV수신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어르신들에게 복지수당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S 관점의 지역경제

- 사회적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보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열악한 고용관계 개선, 노동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이 해당
- 노동.일자리 측면: 근로의 근본원칙과 권리, 노동관행 측면에서 고용과 고용관계, 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근로 보건과 안전, 직장 내 인적 개발과 훈련
- 공정 측면: 반부패, 공정 경쟁, 가치사슬내 사회적 책임, 기업/주민 재산권 존중
- 소비자 권익 측면: 공정 마케팅, 사실+정보 공정 계약 관행, 소비자 보건과 안전 보호, 지속가능소비,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필수서비스, 교육과 인식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측면: 고용창출과 기능 개발, 지역 내 자원 및 전문인력 활용 기술 개발, 지역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 사회적 재투자

S 관점의 지역경제 사례: 거창 승강기 벨리

- 거창 승강기벨리는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 데 성공한 사례
-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들이 거창기능대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열망에 시민대책위 구성, 서명운동 끝에 거창군에 승강기 산업 유치. 노동부로부터 거창군이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받아 한국승강기대학 설립 유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부설기관인 승강안전기술원을 거창으로 이전 유치.

S 관점의 지역경제 사례: 거창 승강기 벨리

- 거창 승강기모델의 핵심적 특징은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 경상남도와 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승강기 벨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 약속 중소기업 유치
- 2021년 기준, 37개 중소기업 유치, 7백여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을 거두었다. 또한, 산(승강기벨리기업)·학(한국승강기대학)·연(승강기안전기술원 승강기 R&D센터)·관(경남도·거창군)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산학연관 승강기 산업클러스터, 지역 내 기업간 연계와 지방정부 간 정책적 협업 바탕 지역 최대 부가가치 창출 및 GRDP 기여 산업 육성, 사회적 투자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군민 우선 고용 등 지역사회 재투자 사업 의미 높음

G 관점의 지역경제

- 지방정부가 지역기업들로 하여금 회계투명성 및 정보공개, 관급사업 지역기업 간 이권거래(부패/뇌물) 금지 및 감사기구 운영, 1기업-1공무원제/기업규제 해소,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ESG기업 우선 유치 등 정책적 기초 및 예산원칙 정립
-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경제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형성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
- 지역의 전통적인 토착지배세력이 지방정부 간 유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 과실을 독점적으로 나눠 먹는 구조 차단 및 공정경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형성

G 관점의 지역경제 사례: 한국ESG 대상 전북 고창군

- 고창군과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26일, 한국ESG학회 주최 '2023 한국 ESG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뉴스1 2023년 12월 26일자)
- 심덕섭 군수는 '친환경 ESG 기업유치'를 핵심공약이자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전북 최초로 '삼성전자 최첨단 물류센터(스마트 허브단지)' 유치에 성공
- 2023년 8월 1일, '고창군 기업 ESG 경영확산 및 지원 조례(이하, 고창군 ESG 조례)'를 제정/운영. 1)군수의 책무(제3조) 2)ESG 추진계획수립·시행(제5조), 3)ESG경영 지원 사업(제6조-기업인 ESG 경영 홍보/교육, ESG 경영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4)ESG경영 협력체계 구축(제7조), 5)포상(제8조-ESG 경영확산/지원 공로자) 등 규정

G 관점의 지역경제 사례: 한국ESG 대상 전북 고창군 6가지 정책/사업

- 1)허가팀 신설 및 인허가 관련 원스톱서비스 제도 도입
- 2)규제개혁신고센터 창구 개설 및 홈페이지 원클릭 배너 운영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애로사항 해소 추진 및 매월 규제혁신의 날 지정 운영, 규제혁신 운영.우수사례 상시적 벤치마킹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 3)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군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4)청년정책협의체 설립/지원
- 5)반부패 청렴 공직문화 조성, 부정청탁.갑질신고센터 운영 1부서-1청렴 시책 추진
(인허가/재.세정담당공무원 소통/공감데이트,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방안 수립 추진)
- 6)ESG 인권경영, 공무원 비위발생 예방 연대책임제 시행, 인사청탁 공무원 기록관리 등 불이익조치 시스템 마련

ESG 측면	지방정부 (시장)경제친화적 ESG
환경(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지역경제 성장의 수단화(지역주민 참여 기반 에너지융복합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 및 한국전력거래를 통해 수익 창출, 발전사·주민간 이익공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지역 중심의 전력에너지 공급과 수요 밀치 및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사회(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시민사회의 지역사회발전 참여 및 기업의 사회공헌, 행정과 지역사회 간 관계(커뮤니티), 주민 고용과 인권, 노동권 ·지방정부의 지역기업에 대한 환경보전, 인권 및 노동권 신장 사회적 가치 추구 독려 ·공정한 조달과 계약, 재산권 존중 ·지속가능한 소비 구조 및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아울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지역사회 재투자 및 이익환원
거버넌스(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주체 간 동반성장 및 ESG 구현을 법·조례, 제도 등 각종 제도적 설계 ·반부패 및 처벌, 감사기구 운영 ·회계보고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공무원 및 주민들과 정책/예산결정 시스템, 의사소통 채널 구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인사철락 금지, 부정부패 방지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안수지 / 지방정부ESG연구회 부회장

안수지

- 디자인학 박사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전공
현, (주)아라이엔지 디자인연구소장 / 팝아티스트

서론

마인드셋

개념이해

1. 공공디자인의 이해
2. 디자인의 정의
3. 업사이클링의 정의
4. 관련 법규 현황
5. 업사이클 시장동향

사례조사

1. 업사이클링 사례
2.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사례
4. 업사이클링 시스템

제언/결론

1. 재활용법제현황
2. 아모레퍼시픽+삼표
3. 락앤락
4. 업사이클링 시스템

Mind Set

사고방식, 마음가짐, 태도, 자세 등을 의미하는 단어

PUBLIC DESIGN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Design

**Design is to design a Design to produce
a design**

-John Heskett, 로고와 이쑤시개, 2005-

디자인이란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Design

Design = System

공공분야에서의 디자인은 시스템(조직, 체계)이다.

업사이클링 (재활용)의 정의

업사이클링 (Upcycling : Upgrade + Recycling, creative reuse)

“재활용”이 기존의 폐기물 자원순환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재활용”은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더하여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

국내에서는 우리말로 해석한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

• 1994년 리너 필츠가 업사이클링 개념을 정의

- 기존 제품의 가치를 높여 더욱 유용하고 독창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창의적인 활동
- 창의성 증진 : 자신만의 스타일로 제품을 만들어 개성 표현
- 환경 보호 : 폐기물 발생 감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환경보호에 기여
- 경제적 가치 창출

업사이클링 (재활용)의 정의

업사이클링 (Upcycling : Upgrade + Recycling, creative reuse)

└─> 기존의 폐기물 자원순환을 지칭하는 개념

업사이클링 vs. 리사이클링

└─> 재활용 과정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개념

새활용(업사이클) 법제 현황

정부 및 지자체의 새활용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을 추가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재활용) 산업’이 추가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2021년 4월 13일부터 개정·시행됨

환경산업 정의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내용을 포함

새활용 관련 법령을 통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지자체는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문화 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활용 관련 조례 제·
개정을 추진 중

새활용(업사이클) 법제 현황

정부 및 지자체의 새활용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경기도 △강원도 △제주 △충남
총 9곳(52.9%)이 새활용 관련 조례를 보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광명, 여주, 여수, 춘천 등 총 226곳 중 22곳(9.7%)이 보유

지자체가 보유한 새활용(업사이클) 관련 조례

-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새활용 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업사이클 (재활용) 관련 법규

(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25.3.18)

- 제2조(정의) 3항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활용플라자(센터) 설치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새활용 시장 동향

새활용 트렌드의 확장

예술 분야뿐 아니라 식품업계, 패션·뷰티업계 등 다양한 산업 시장의 범위까지 확대

소재 중에서도 폐플라스틱부터 폐섬유,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해 새활용 제품 품목이 더 확장되고 있는 추세

- 패트병부터 재고 의류, 폐기 원단, 커피찌꺼기 등은 의류 에코백, 건축 자재, 화장품 등으로 재탄생

새활용 시장 동향

새활용 제품 소비자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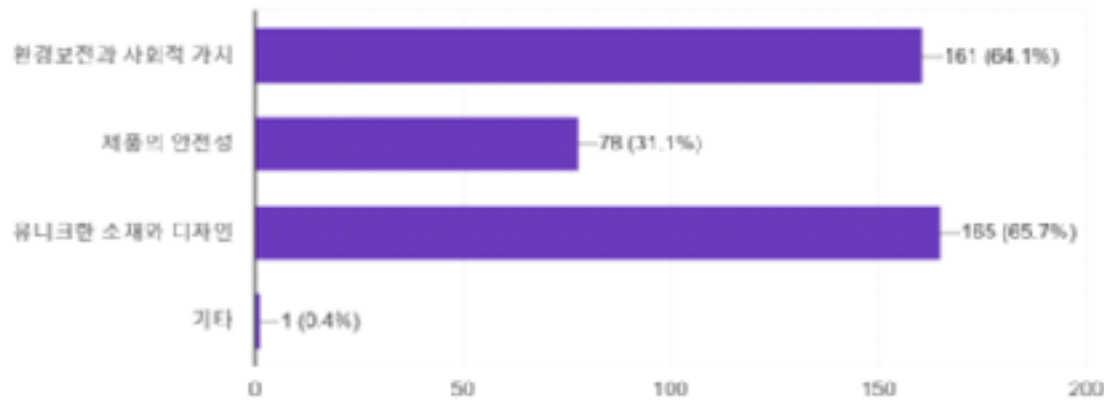
정부 및 기업의 새활용 정책 추진에 비해 새활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새활용 제품의 사용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새활용 제품 홍보방향) 새활용 제품에 대한 홍보방향에 대해서도 환경보전과 사회적 가치, 독특한 소재와 디자인 항목 외에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
- (새활용 제품 시장 접근성) 소비자들은 새활용 제품 구매 시,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나, 시장 접근성은 낮다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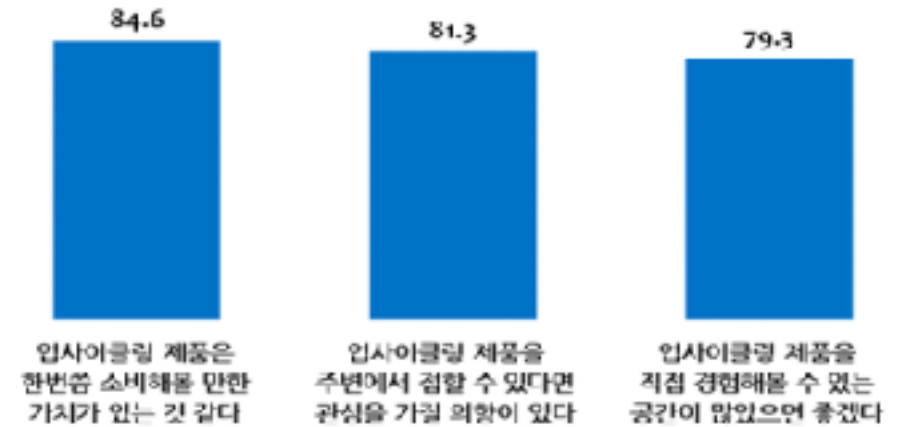
새활용 시장 동향

새활용 제품 소비자 이슈

〈그림 6〉 소비자가 인식하는 새활용 제품 홍보방향(n=251) (2023년 기준)



〈그림 7〉 새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인식 수준 (n=1000)(2021년 기준)



업사이클링 사례

안전벨트/트럭방수천 업사이클링

프라이탁

마커스 프라이탁과 다니엘 프라이탁이 만든 회사 스위스의 업사이클링 가방 브랜드



길가에 버려진 자동차 안전벨트,
화물차 방수포, 천막

이 튼튼한 천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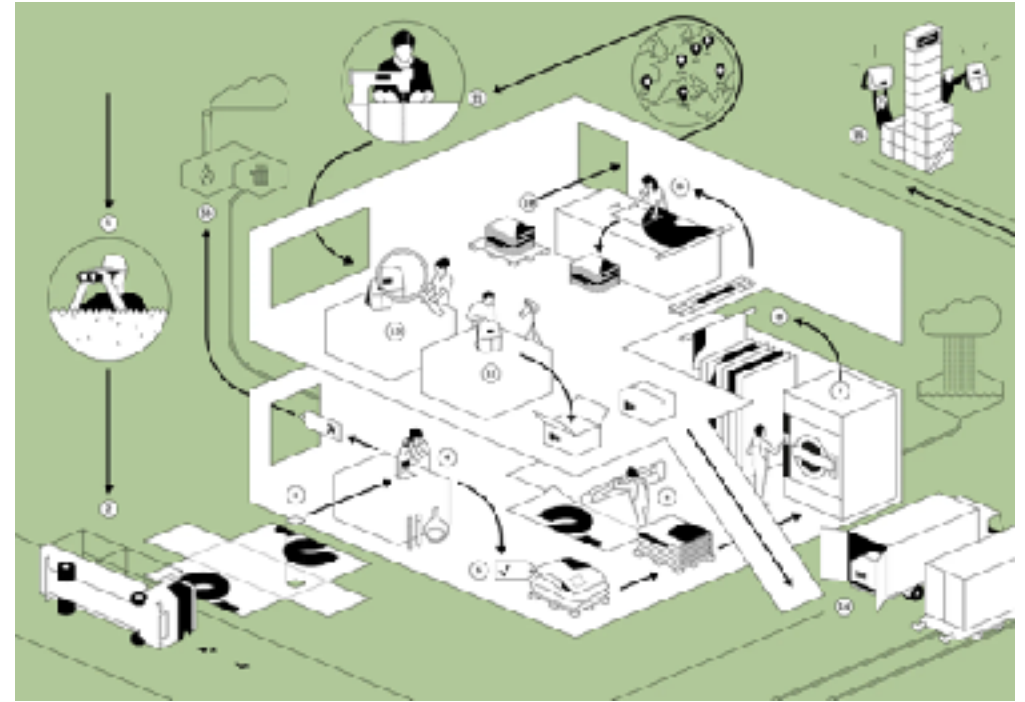


업사이클링 사례

안전벨트/트럭방수천 업사이클링

프라이탁

세상에 없던 가치의 탄생
업사이클링으로 정의된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출처 프라이탁몰 캡처 >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사례

플라스틱 재활용한 건축자재

아모레퍼시픽+삼표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사례

플라스틱 재활용한 건축자재

아모레퍼시픽+삼표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사례

플라스틱 재활용한 건축자재



친환경 ESG경영 위한 업무협약, 힐스테이트 조경 시설물에 '뷰티업사이클링' 자재 적용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사례

Waste Plastics + Concrete(UHPC)



Waste Plastics

재활용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종류(잡색)를 별도의 화학적 가공없이 시적과 분쇄만으로 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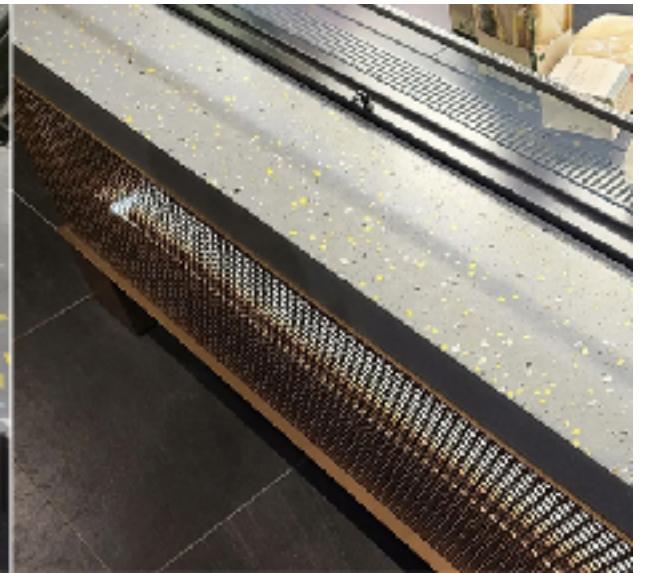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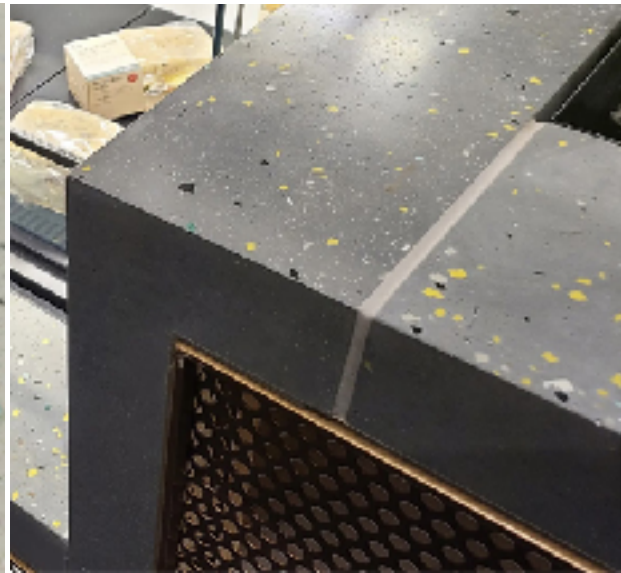


Concrete (UHPC)

높은 강도의 내구성,
동결융해 저항성, 내염해성, 내부식성 등
목의환경에 강한 성능을 지닌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사용



폐플라스틱 플레이크



업사이클 패널, 스타벅스 경동 1960점



Upcycle bench-B, 서울역 공항철도



Upcycle planter, 네이버 판교 신사옥



<이미지 출처>
라디오비 <https://www.radio-b.co.kr> 177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사례

플라스틱 재활용한 공공시설물

락앤락



자원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Love for planet)’을 운영
수거한 오래된 밀폐용기로 제주올레와 함께 업사이클링(재활용) 진행
제주 올레길 2코스와 21코스에 ‘모작(MOJAK) 벤치’ 8개 제작 설치

모작 벤치 : 매듭이라는 제주어
사물, 사람, 자연은 모두 연결돼 있으며 자연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사람
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

락앤락과 제주올레는 이번에 새롭게 설치한 모작벤치를 포함해 현재
까지 업사이클링을 통해 총 41개의 모작벤치 설치

모작벤치 1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약 16kg의 폐플라스틱 사용
모작벤치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 : 460ml 용량 플라스틱 식품보관용기
기준 5945개

러브 포 플래닛 캠페인 :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수거해 생활용
품, 공공시설물 등으로 재탄생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wnews.co.kr>)

업사이클링 공공시설물 사례

플라스틱 재활용한 공공시설물

락앤락



업사이클링 시스템구축 사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Precious Plastic



프레셔스 플라스틱은 오픈 소스로 공개된 도면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가공 기계를 제작해 누구나 쉽게 폐 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에 참여하도록 하는 글로벌 커뮤니티

분쇄기, 압출기, 사출기, 압축기 등의 작업 기계 도면을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에서 재료 및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을 거래하거나, 서로의 노하우 공유



Starterkits

Shredder

Extrusion

Sheetpress

Inj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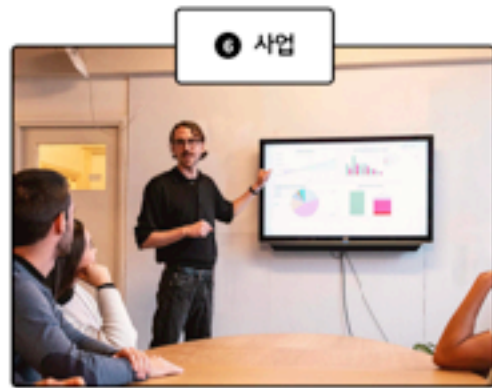
Mix

Collection

Community

Machine Shop







MAP

프리서스 플라스틱 지도 100

등록순 - 전체 -

작업공간

폴릭스 (Polix)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42
기안대역로
010-7157-1631
폴릭스 2024-10-02

작업공간

alice upcycling jewelry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길 34-6
02-4367-8973
알릭스 2024-03-05

작업공간

reoplasic (수거 및 작업공간)

직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1로1길 49
01091386209
리어플라스틱(REERPLASTIC)
2025-12-01

작업공간

[ETIRE] Upcycling jewelry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재천로4길 9-2
09338 2023-11-07

수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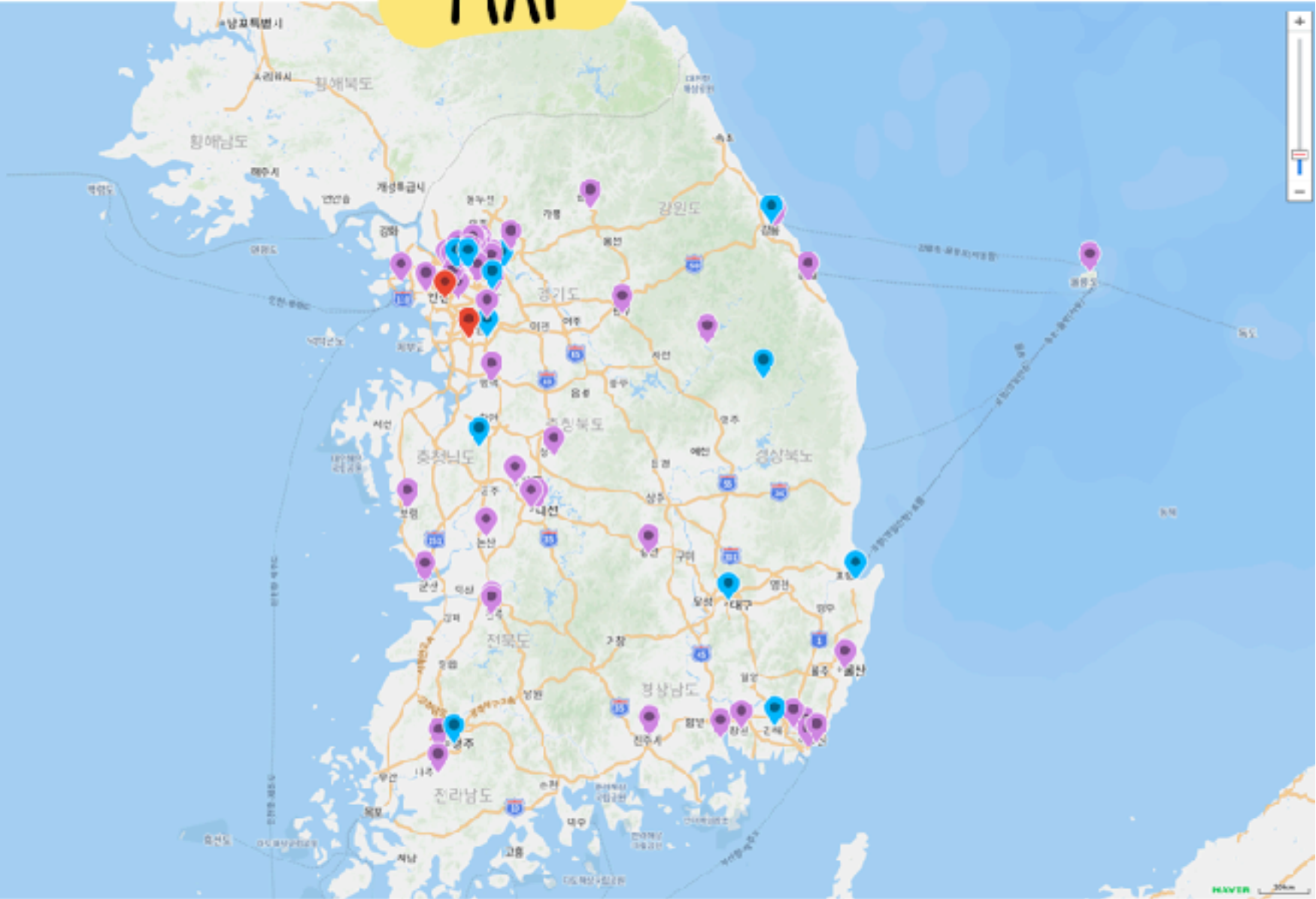
책방초록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1길 16
010-4344-1895
책방초록굴 2023-09-12

수거공간

물품공작소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1길 14
0507-4177-8821
물품공작소 2023-07-06



ht



업사이클링 공공디자인 시설물 확산 정책

지방정부의 업사이클링 관련 정책 및 법제 수립 확대

새활용 관련 조례와 더불어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에 업사이클링(새활용)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 추가

- 지방정부는 지역 기반 새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 지방정부는 지역기반의 업사이클링(새활용) 공공시설물 생산 기업 지원 정책 마련

Design is to design a **Design to produce
a design**

Design = System

↳ 업사이클 법제/정책

감사합니다.

새로운 물의 시대, K-water의 ESG 전략

- Water Positive를 중심으로 -

2025. 4. 4(금)

신성장전략단장 조 은 채





발표 순서



새로운 물의 시대 돌입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



K-water의 ESG 전략



새로운 물의 시대 돌입

물문제는 국제사회의 오래된 난제(Wicked 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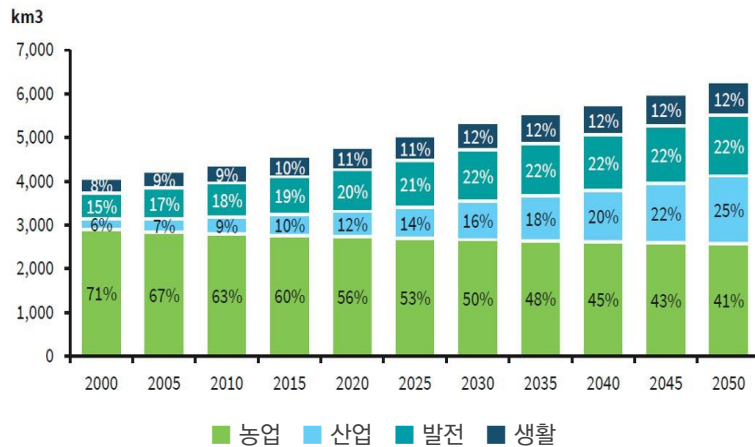
물관리는 자연계와 인공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맞닥뜨리는 특성상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물문제를 해결하면 2개의 노벨상 수여해야 한다”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 이후 대표적 난제로 인식

UN은 물수급 격차 확대에 따라 2018년 물(SDG 6)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선결과제로 지목

전세계 물수요 전망

전세계 물수요는 매년 1%씩 꾸준히 증가

* 산업부문 물수요가 향후 30년간 3배 증가 전망



출처 : OECD(2012), Barclay Research(2021)

“Anyone who can solve the problems of water will be worthy of two Nobel prizes, one for peace and one for science.”
- John F. Kenne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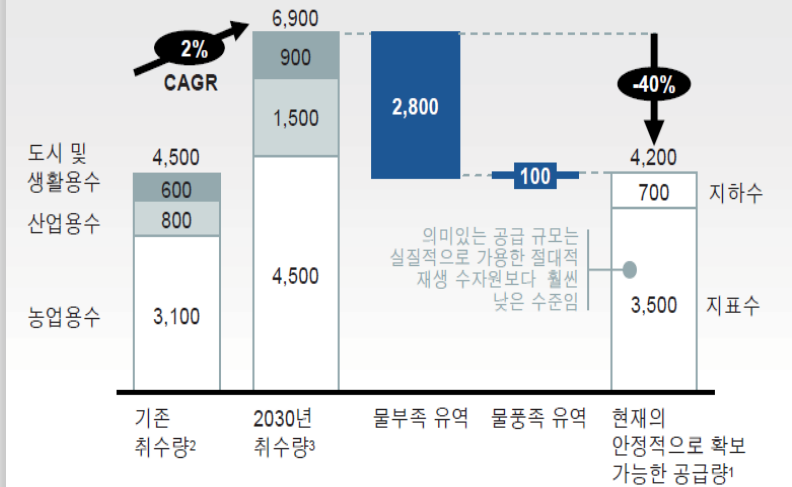
인프라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 생태 훼손, 수질 오염, 도시화, 산업화, 자원 부족, 인구 증가

이미지 출처 : 미국 지질조사국(USGS)

전세계 물수급 격차 전망

2030년 전체 물수요의 40% 공급 불안정

km³, 143개 유역/지역



출처 : 2030 Water Resources Group(2009)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물의 시대 돌입

물그릇이 부족한 상태에서 첨단산업 물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영향이 맞물려 국제사회에서 물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 이에 UN은 2023년 3월 46년 만에 두번째 'UN Water Conference' 개최하였고 2026년 등 3년마다 개최 예정

글로벌 물위기를 복합적 난제(Super Wicked Problem)로 인식하여 '임무지향적 혁신' 요구

극한기후와 물부족 심화

- ✔ 전세계 가뭄 장기화, 메가홍수 빈발
- ✔ 산업 물수요는 30년간 3배 증가 전망
- * 상장기업 69%가 심각한 물 리스크 직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 ✔ 미·중 갈등 및 첨단산업 입지 재편
- * 오프쇼어링 →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 ✔ Water Security와 RE100 요구



하이테크 물산업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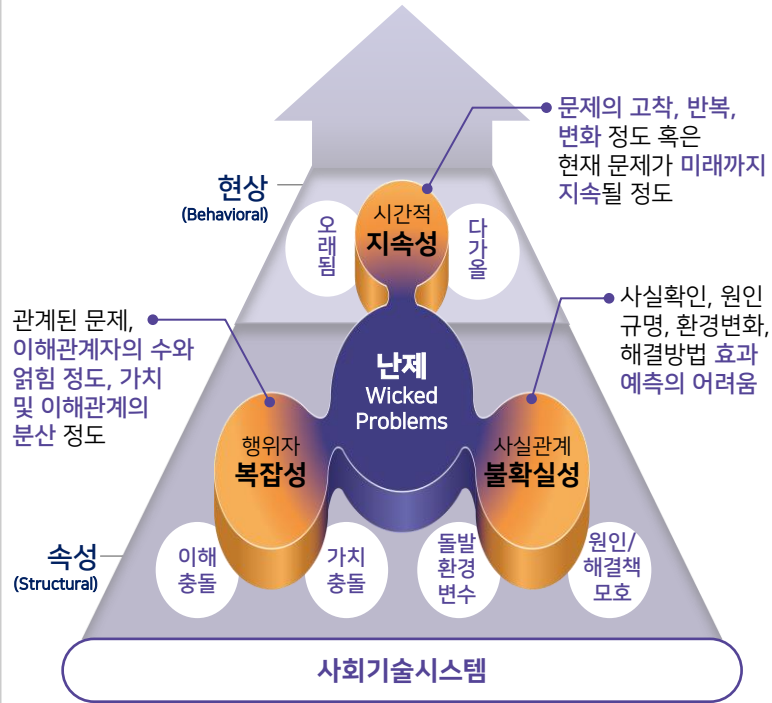
- ✔ 테크 중심의 물기업 성장 가속화
- ✔ 스타트업 주도의 혁신기술 사업화
- * the Next-Big Thing으로 언급



난제의 특성과 최고 난제 분류기준

그간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붕괴, 전쟁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고의 난제로 분류, 2023년 3월 제2차 UN Water Conference를 계기로 **글로벌 물위기**가 새롭게 **최고 난제**로 자리 매김

난제의 대표적 특성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최고 난제 분류 기준

- 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고,
- ② 문제를 해결할 중앙 통제기관이 제대로 없으며,
- ③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자들이 결국 그 문제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 ④ 마지막으로 현재의 정부 정책은 이 문제가 가져올 불행한 미래를 비합리적으로 과소 평가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낮음

출처: 존 엘킹턴, 그린스완(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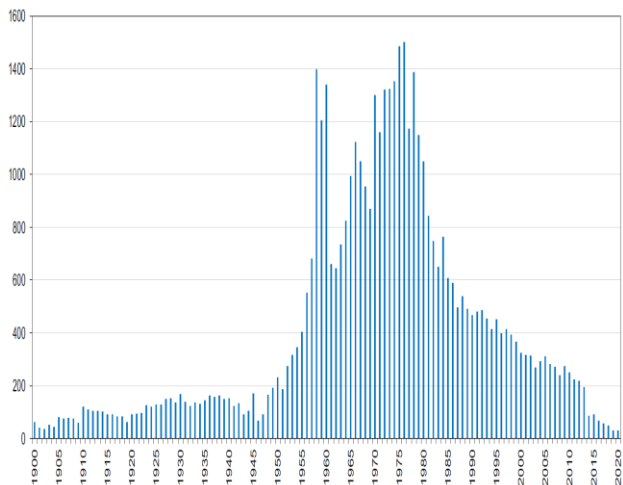
전세계적인 물그릇(Water Storage) 부족현상 심화

신규건설 부족, 기존 인프라 노후화, 기후변화 영향 등이 맞물려 수요 대비 물그릇 절대부족 현상이 심화, 댐이 지난 50년간 전세계 물그릇 확충에 크게 기여했으나 노후화에 따른 용량 축소는 글로벌 리스크로 지목

물그릇 니즈 홍수예방 + 환경보존 + 생공용수 + 에너지 + 농업용수 vs **물그릇 운영** 자연적 + 인공적 + 하이브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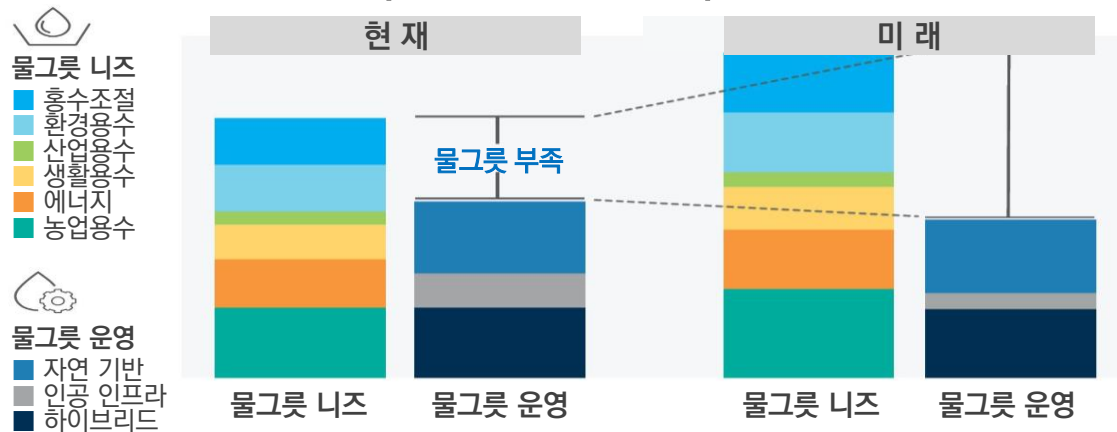
연도별 대형댐 준공 현황

➤ 많은 댐이 1950~80년대 건설, 노후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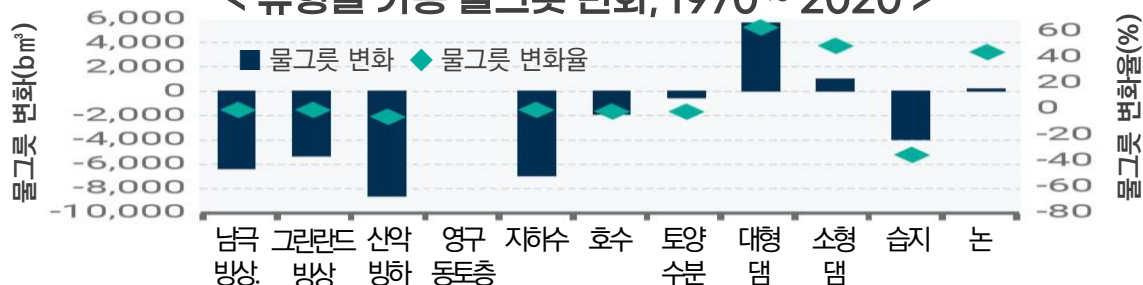


출처: 세계대댐회(2020)

< 전세계 물 수요량 대비 물그릇 부족현상 심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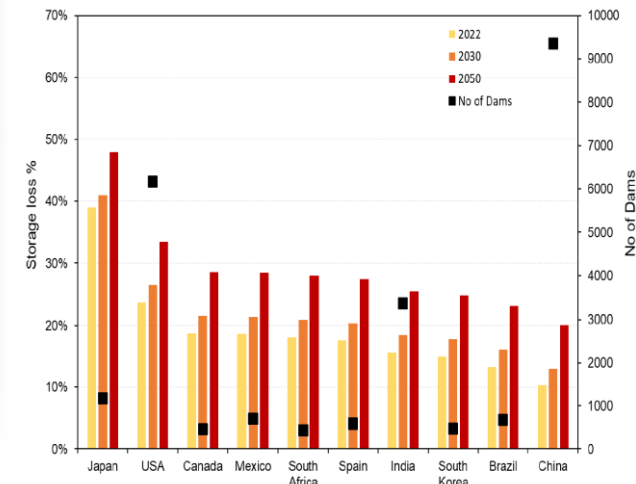
< 유형별 가용 물그릇 변화, 1970 ~ 2020 >



출처: 세계은행(2023)

노후화로 대형댐 용량 축소 전망

➤ 댐내 퇴적으로 2050년 평균 26% 축소



출처: UN대학 물환경보건연구소(2023)

디지털·AI 전환 가속화에 따른 신규 물수요 발생

첨단산업의 급성장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입지 재편, 생성형 AI의 폭발적 확산 등이 맞물려 만성적 물그릇 부족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된 대규모의 신규 물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

미국의 경우 1975년 이후 디커플링된 경제성장(GDP)과 수자원 취수량의 관계가 다시 커플링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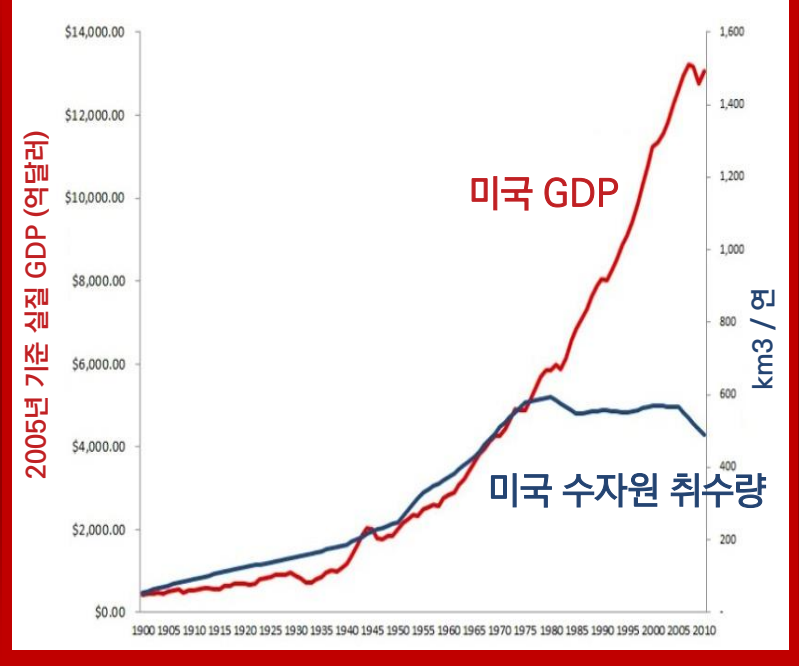
첨단산업 성장과 물수요 급증

공정의 복잡화·미세화로 물사용량 지속 증가



출처 : 파이낸셜 타임즈(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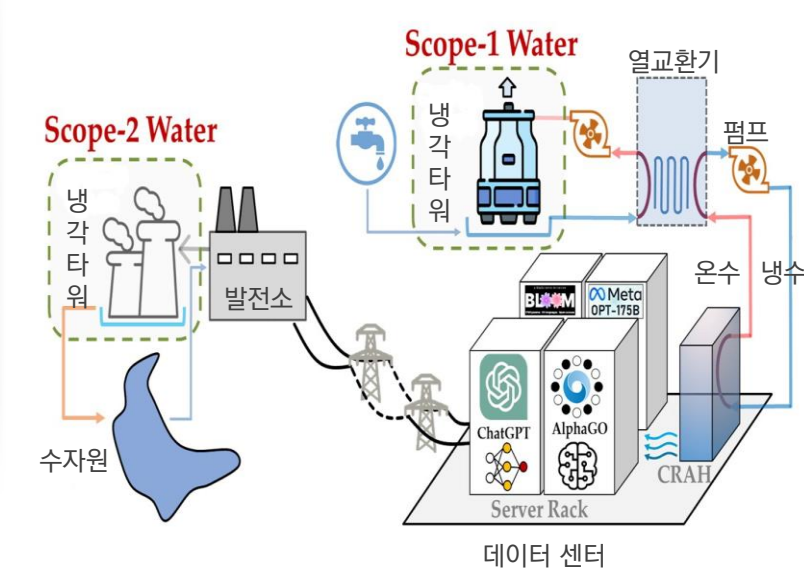
- 미국 경제는 Big Tech 위주로 전환
- Big Tech 기업은 생각보다 많은 물 사용



출처 : P.H Gleick(2014)

생성형 AI가 불러온 신규 물수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운영에 많은 물 필요



출처 : Shaolei Ren(2023)

기후변화 완화에도 많은 물이 필요

청정 에너지 전환과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등이 수자원의 가용성에 크게 의존, **물분야 역시 탄소감축이 필요**, UN은 물과 기후변화 완화 간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완화에 필수적임을 강조

물은 기후변화 완화의 핵심 자원(Enabler), 2050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서는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

물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

▶ 2030년 기준 연간 9천억m³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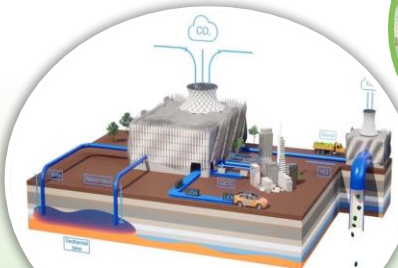
리튬 채굴 및 배터리 제조, 바이오연료 생산, 원자력 발전(SMR 포함) 냉각, 그린수소 생산, 태양광·풍력과 연계한 양수발전 운영 등



탄소 포집·저감에 물이 유용

▶ 물과 인프라, 부지를 탄소 감축에 활용

공기 중 탄소직접 포집(해수담수화 등 연계), 탄소 저장, 첨단산업 공정의 탄소배출 저감, 수변 생태벨트 조성 및 탄소 흡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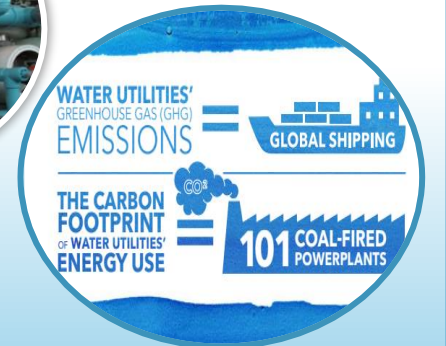
탄소직접포집 (DAC)



물분야의 탄소배출 감축

▶ 글로벌 해운산업 만큼 온실가스 배출

첨단 수처리(담수화, 재이용 등)는 에너지 다소비, 온난화에 따른 수질 오염 등으로 수처리 비용 증가, 탄소중립형 상·하수도 시스템 전환 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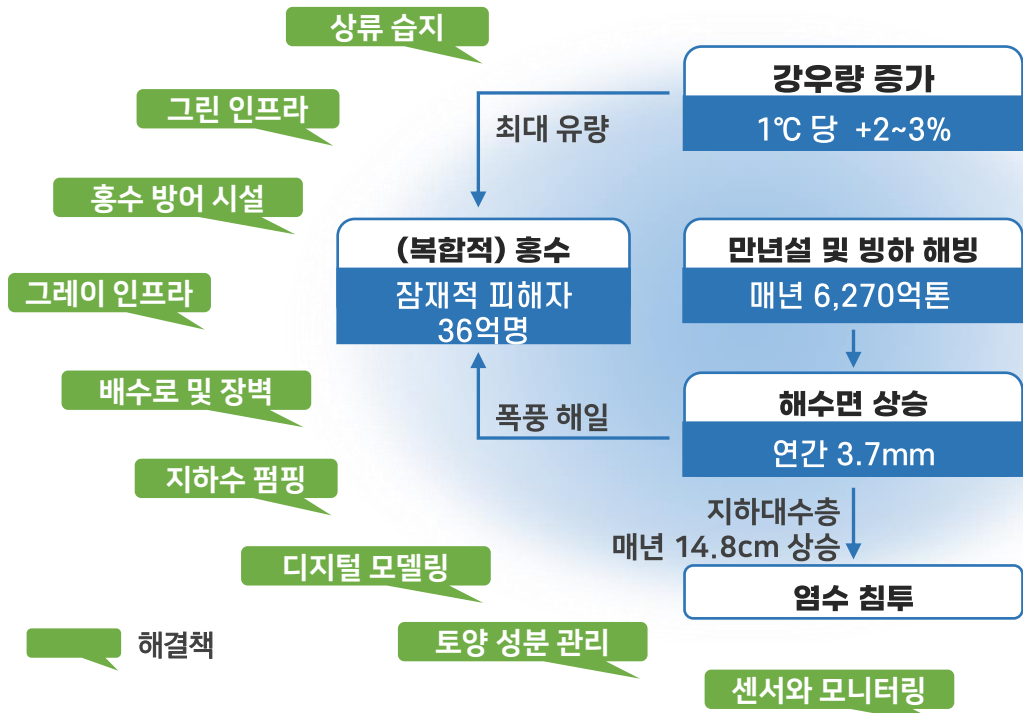


물관리 전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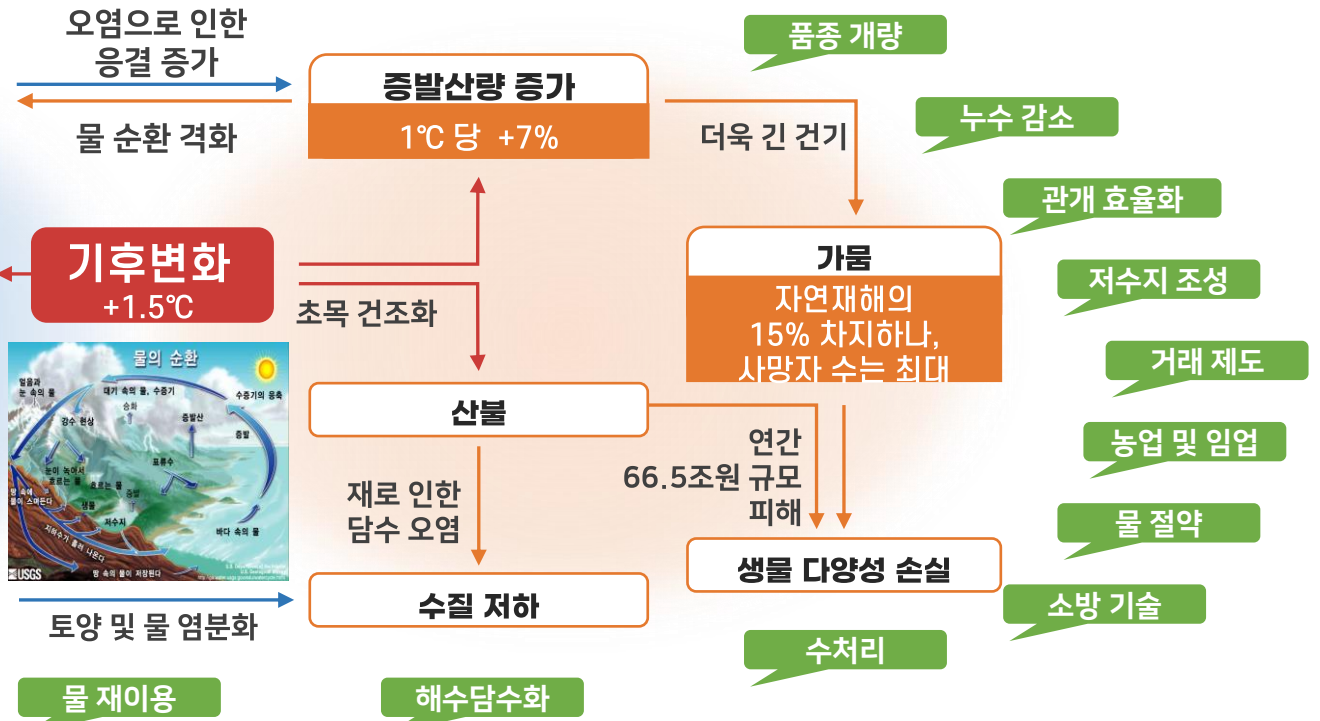
현재 수준의 기후변화(지구평균 기온 1.5°C 상승) 만으로도 전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홍수가 발생 중,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물관리 전반에 걸쳐 거대한 도전과 혁신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전망

지구 온난화·열대화 → 지구의 물순환 변동 (① 증발산량 증가 → 가뭄 확산, ② 대기 중 수증기 증가 → 홍수 증대)

극한 홍수 (WET EXTREMES)



극한 가뭄 (DRY EXTRE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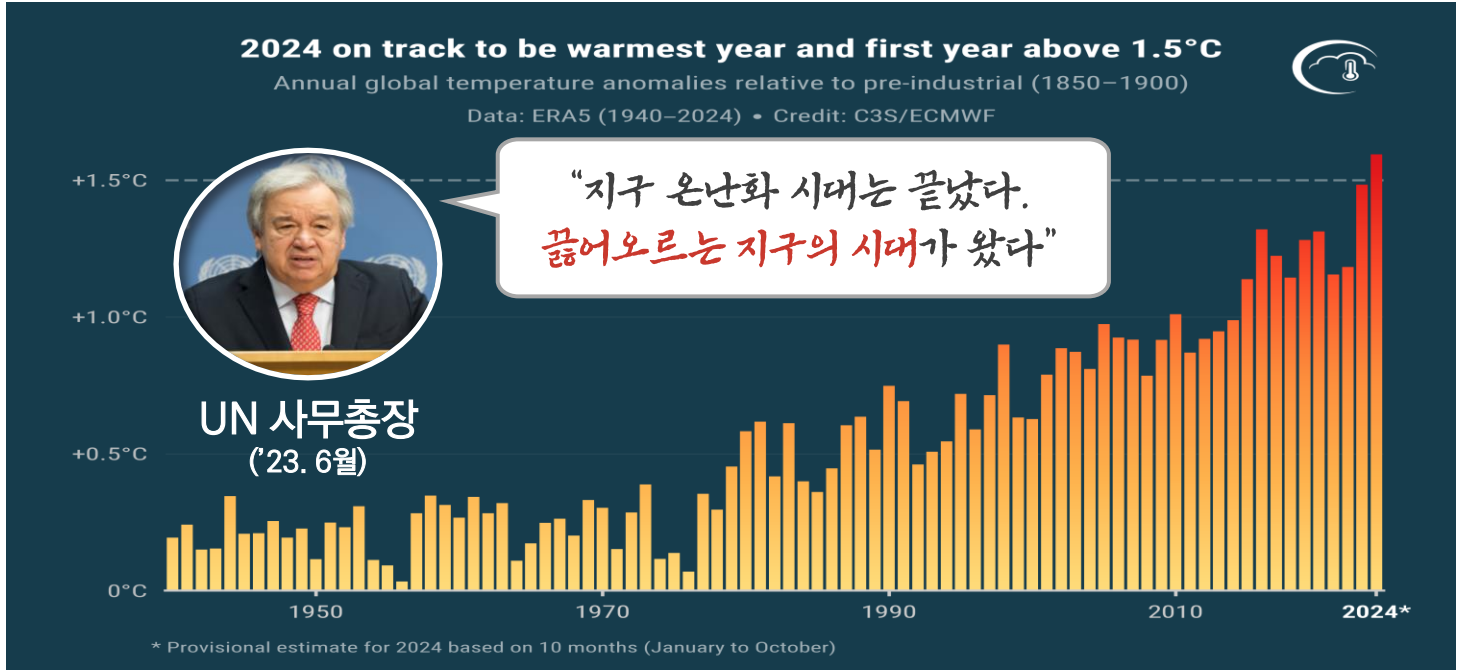


출처: Global Water Intelligence & XPV Water Partners (2024)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홍수 빈발

산업화 이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지목한 1.5°C에 근접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기록적 홍수 역시 빈발

물은 대기, 수권, 빙권, 지표 등 기후시스템의 모든 요소와 연계되어 있는 기후변화의 매개체이자 중요한 영향 인자



전세계 상장기업의 69%가 물 리스크에 직면

CDP(탄소공개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세계 상장기업의 69%가 물부족, 홍수, 수질오염 등 심각한 물 리스크에 직면,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물 리스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전세계 상장기업의 물 리스크에 따른 잠재적 재무적 영향은 3,920억 달러(한화 550조원) 규모로 추산, 갈수록 증대

- 글로벌 기업의 물 리스크 피해 발생 사례 -

태국 ('11년)



- + 70년 만의 대홍수로 공장 침수
- + 52조원 산업·재산 피해 발생



대만 ('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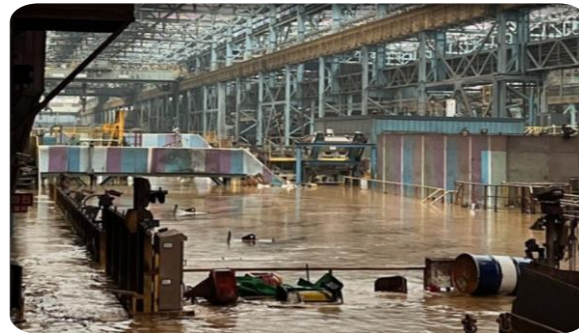
- + 56년 만의 대가뭄 발생
- + 공장 섯다운 위기, 공급망 다각화



한국 ('22년)



- + 태풍 힌남노로 하천 범람 및 침수
- + 사상 초유의 공장 가동 중단(134일)



한국 ('23년)



- + 50년 만의 광주·전남 대가뭄 발생
- + 16개 대기업 공장 가동중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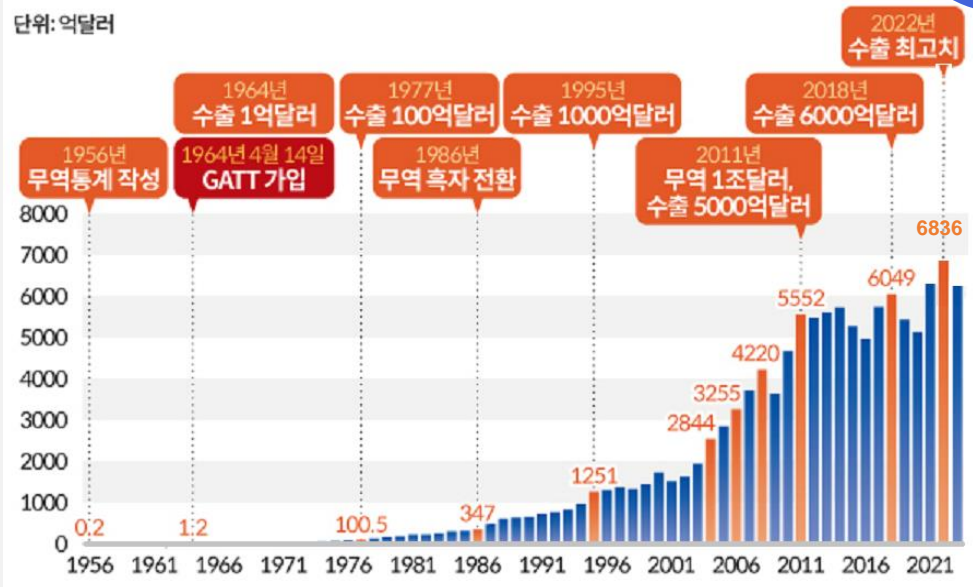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글로벌 트렌드 수용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그동안 해외수출과 해외건설 수주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해왔으며, 국내 100대 기업(매출액·시가총액 기준 모두)의 전체 매출액 5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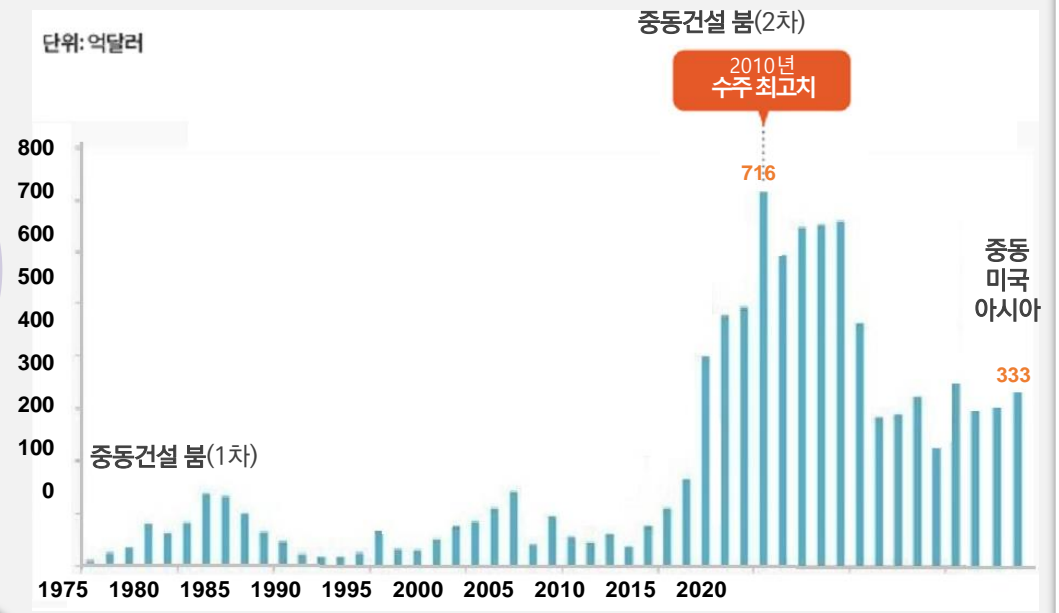
2023년도 기준 해외수출은 대한민국 GDP의 35.7% 차지, 실질 경제성장의 86.1% 담당

▶▶ 해외수출 현황(1956~2023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해외건설 수주 현황(1975~2023년)



출처 : 해외건설협회

해외시장 개척

대한민국 물안보 수준은 세계 38위

UN-Water의 'Water Security' 기준에 따라 10개 항목의 수준을 종합하여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대한민국의 물안보는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안전(Secure)에 못 미치는 보통(Moderate) 수준으로 평가**

물의 가용성과 경제적 안전(홍수·가뭄 위험)이 3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기후대응댐과 대체수자원 등 물그릇 확충 시급

국가별 물안보 수준 진단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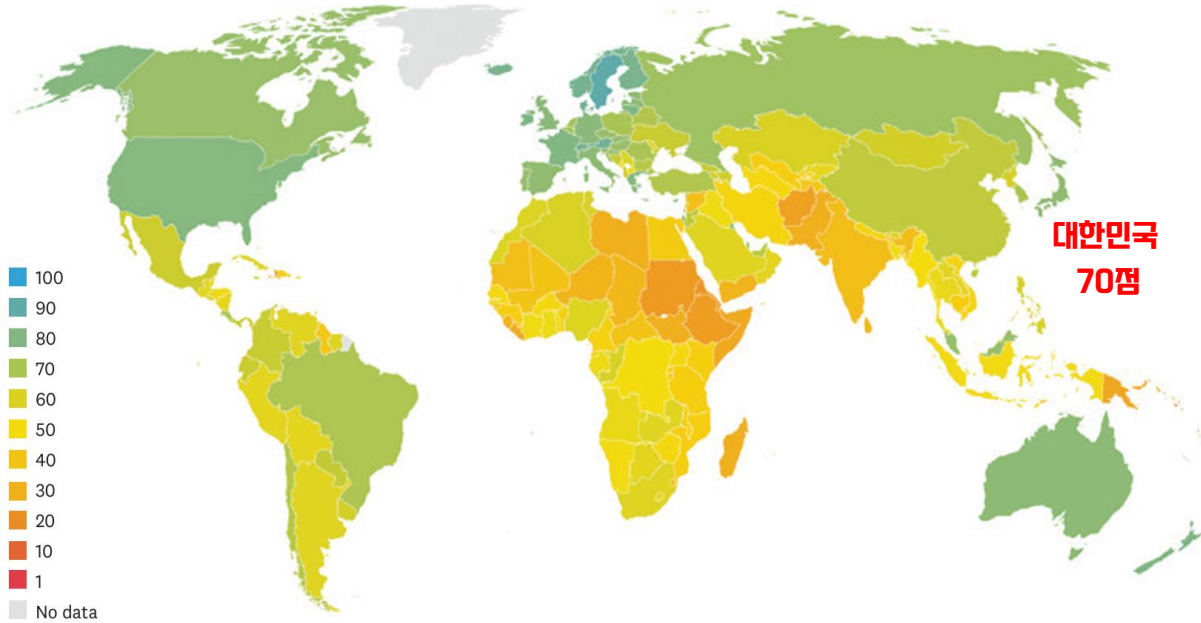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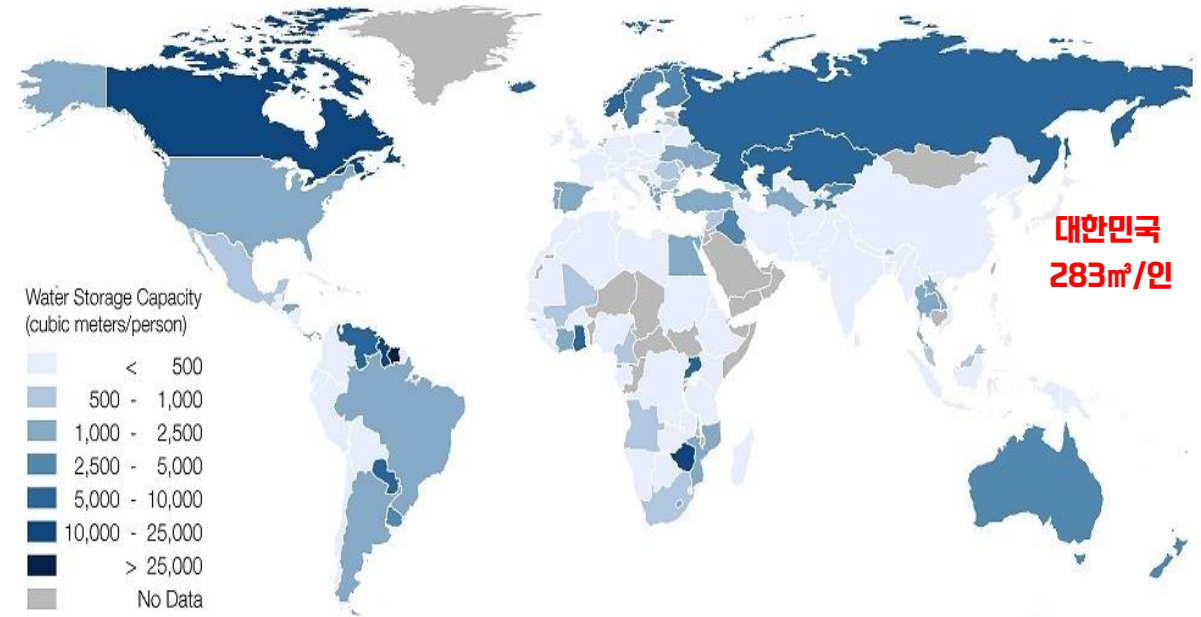


Figure A. National water security mapped globally, based on a score of 1-100.

출처: UN대학 물환경보건연구소(2023)

국가별 1인당 댐 저수용량 비교 (2015년 기준)



Dam storage data from Global Reservoir and Dam Database -- dates vary. Population data are 2015 estimates from the United Nations.

출처: Circle of Blu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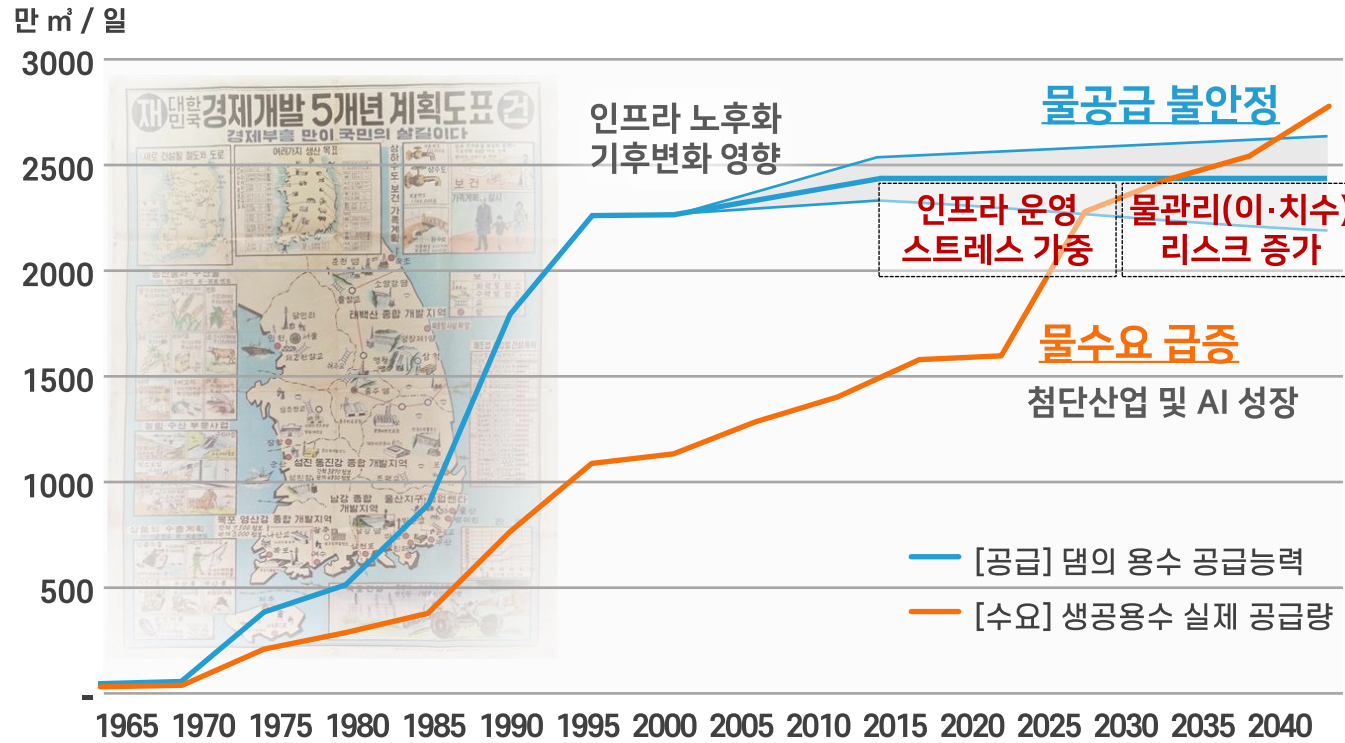
국가 차원의 물위기 대응 시급

대한민국의 물그릇은 개발도상국 단계에 국가 주도의 계획에 따라 1960~1990년대 대대적으로 확충되었으나, 기존 인프라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공급 충격과 첨단산업 급성장에 따른 물수요 충격이 맞물려 위기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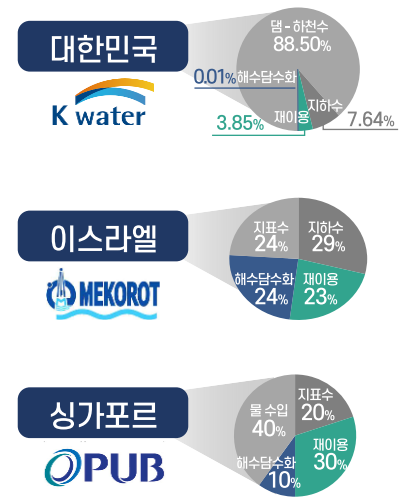
기존 인프라에 가중되고 있는 운영 스트레스를 신규 물그릇 확충과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해 조기에 분산 필요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 ▶ '27년까지 기업투자 550조원 달성
- ▶ 15개 국가산단 및 첨단특화단지 지정
- ▶ 물·전기 등 인프라 적기 구축 지원



첨단 수처리 기술로 물안보 재확립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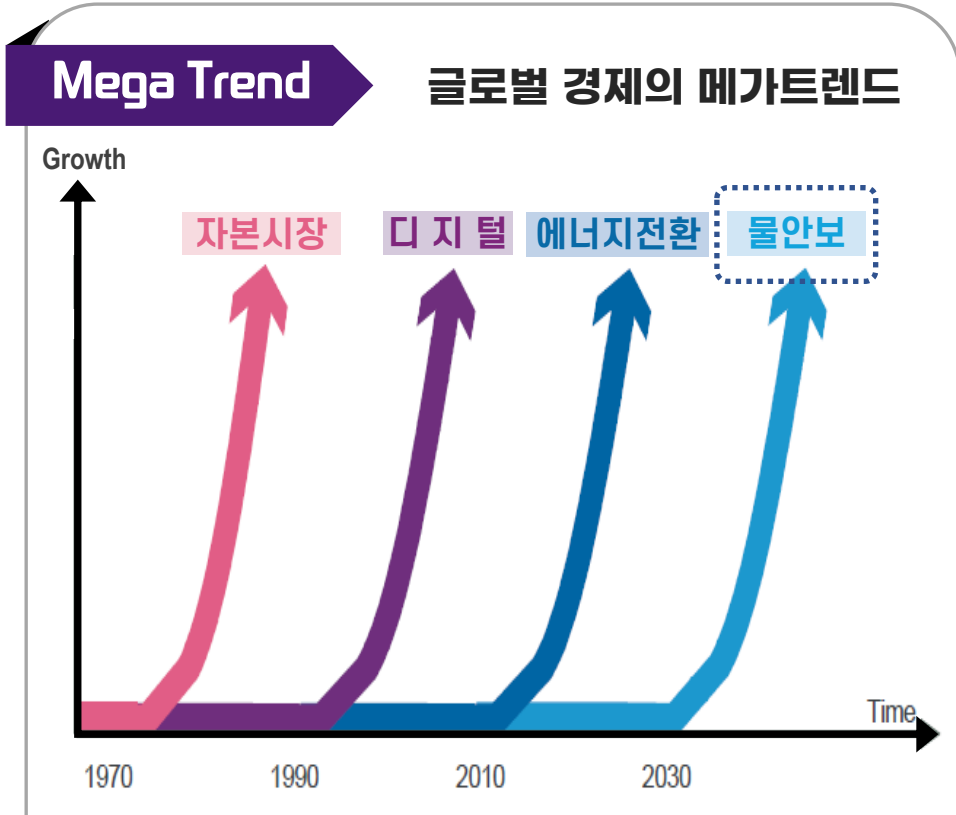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

워터테크 기반의 광범위한 투자와 혁신 필요

물안보(Water Security)가 203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좌우할 네번째 메가트렌드로 지목, 산업용수와 솔루션·테크 등 워터테크 기반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물산업 전반의 혁신 리딩 전망

글로벌 물산업은 이미 거대한 규모(전세계 GDP 2%)이며, 새로운 물의 시대를 맞아 본격적 기술혁신 및 산업적 성장 기대



출처: GWI & XPV(2024)

Bill Gates

\$42 Billion Holdings

- Microsoft \$14.37 Billion
- CN \$6.89 Billion
- WM \$6.31 Billion
- CAT \$2.17 Billion
- ECOLAB \$1.03 Billion

Note: The holdings mentioned are the Top 5 Holdings of Bill Gates.

Elon Musk

CEO SpaceX and Tesla Inc.

"The cost of desalination is very expensive. Therefore, we need to limit individual consumption of water. We need hydro-connect facilities so that water is not simply wasted on the ground. We also need technologies that can minimize evaporation."

미래 10년 전망

물안보에 천문학적 투자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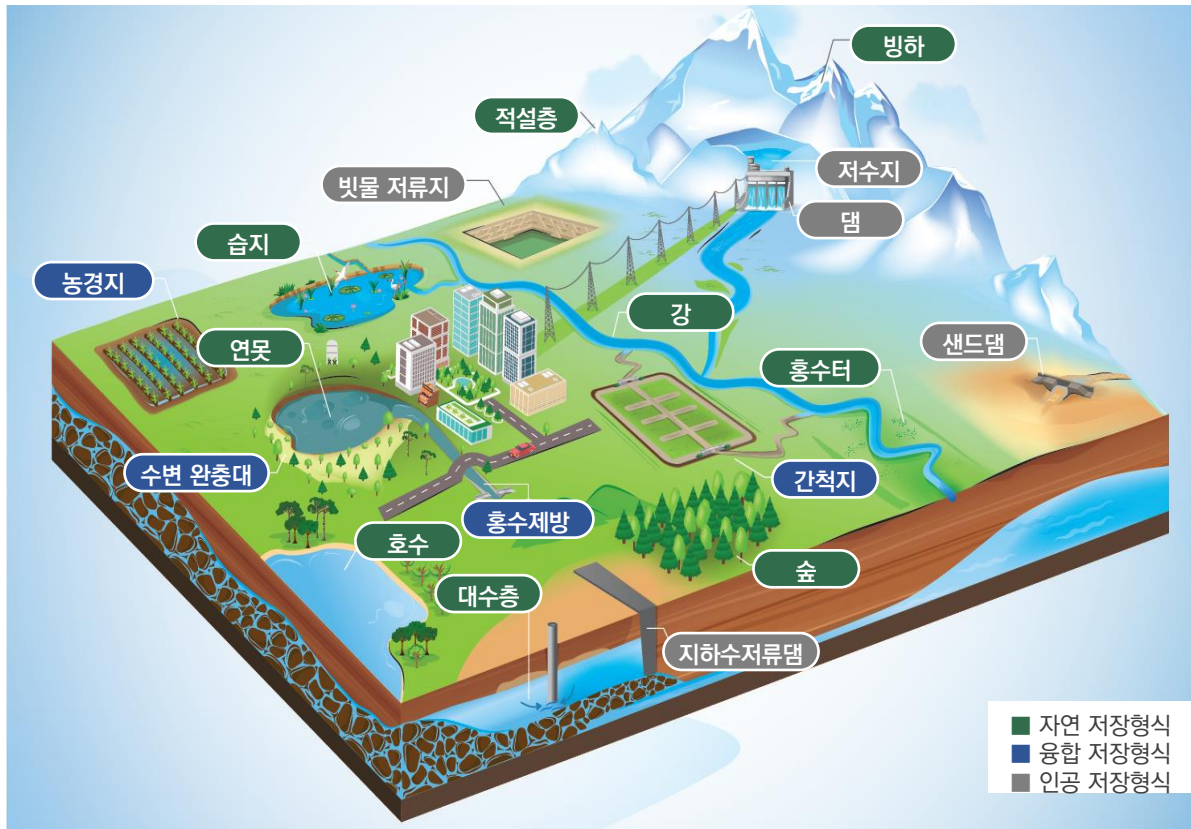
구분	물안보 확보 자산		성장전망
	2024년	2034년	
공공자산	3,990조원	7,581조원	1.9배
민간자산	425조원	2,393조원	5.6배
산업용수	-	4,256조원	-
솔루션·테크	386조원	1,862조원	4.8배
임팩트펀드	-	133조원	-
농업용수	278조원	505조원	1.8배
합계	5,080조원	1경 6,730조원	3.3배

출처: GWI & XPV(2024)

종합적인 물그릇 확충 촉구

세계은행은 ‘새로운 물그릇 패러다임(New Water Storage Paradigm)’과 ‘5R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와 각 국 정부에 기후위기와 물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물그릇 확충 촉구

New Water Storage는 인공적(Built) 용량 만이 아닌 자연적(Natural) 용량까지 포함하여 접근 필요



구분	개념	방법(예시)
Reoperation (운영 개선)	• 관리 개선을 위해 Water Storage의 운영 방식 조정	• 기존 Storage간 연결 • Storage간 연계 운영
Rehabilitation (개축)	• 용량 유지, 기능 개선을 위한 기존 Water Storage 복원	• 구조적 보수·보강 • 퇴사 준설
Retrofitting (증축)	• 기존 Water Storage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 설치	• 기존 댐 증고 • 수상태양광 설치
Reform (개혁)	• Water Storage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에 투자	• 데이터 관리 • 재정적 인센티브
Raising new (신규 개발)	• 신규 Water Storage 추가 개발	• 신규 댐 건설 • 지하수 함양량 제고

ESG를 넘어 Net Positive 경영 확산

2019년 미국 BRT 연례회의와 2020년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ESG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회복, 사막화 방지 등 UN 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총회(COP)가 개최되어 진전 확보

UN의 3대 협약 모두 물과 직접 관련, 특히 생물다양성 회복은 새로운 물의 시대 핵심 아젠다로 대비 필요

ESG와 Net Positive 확산

- ▶ 2019년 이후 자발적 이행동력 확보
 - * 미국 대기업 CEO 181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서명
- ▶ 유럽, 미국 등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UN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 ▶ 파리기후협약 9년 만에 새로운 합의 도출
 - * 선진국 기후재원 마련, 국제 탄소시장 NDC 이행 연계
- ▶ 생물다양성·사막화방지 협약 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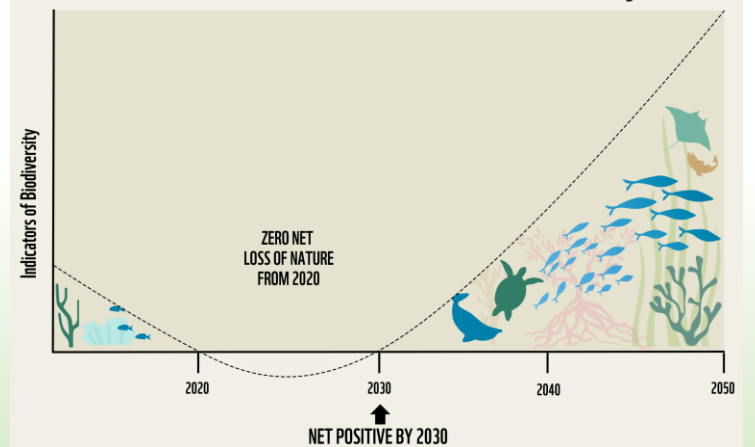


출처 : UN 3대 협약 당사국총회(2024)

Nature Positive 이행

- ▶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공동활동 합의
 - * 물의 생태계 유지 : 연간 1.5경 원(전세계 GDP의 11.4%)
- ▶ 물 사업자의 Nature Positive도 요구

Global Goal for Nature: Nature Positive by 2030



출처 : 세계자연기금(2023)

글로벌 자본시장의 Water Risk 대응 요구

글로벌 자본시장은 CDP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전세계 상장기업에게 물 리스크 식별·관리 강화를 요구, 기업의 물관련 활동은 ① Water Management → ② Water Stewardship → ③ Water Strategy로 확장

UN Global Compact가 2007년 발족한 CEO Water Mandate를 통해 240여개 기업이 유역 물관리에 참여 중

CDP 자율공시 시스템

- 2000년 CDP 발족, 전세계 시가총액의 66% 참여



출처 : CDP Benefit of Disclosure(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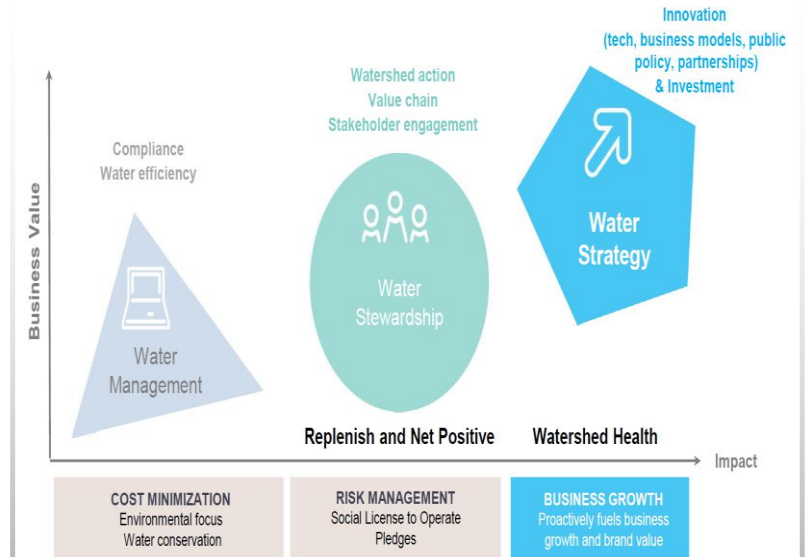
연도별·분야별 공시 참여기업 추이

- 2010년 Water 공시 도입, 참여기업 지속 증가



기업의 물관련 활동 분류

- 글로벌 선도기업의 경우 적극적 물전략까지 구사



출처 : WATER FOUNDRY(2023)

글로벌 기업들은 Water Positive 공동 이행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물 리스크 대응을 위한 ‘리질리언스 확보(= 직접 수자원 확보)’ 전략 차원에서 공급망 전체의 물 사용량 이상을 확보하여 자연에 복원하는 ‘Water Positive’ 선언 및 연차별 목표 이행 중

2007년 코카콜라가 최초로 시작, 현재는 다수 글로벌 기업이 참여, 물 복원사업의 계량적 효과 산정 표준화 추진 중

Water Positive 개념 및 5가지 실행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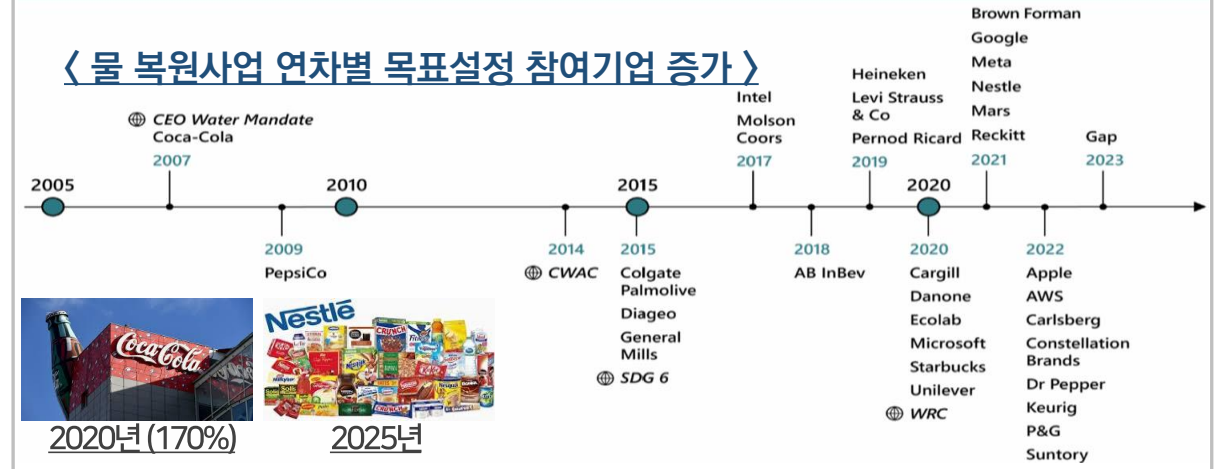


- Reduce** 물사용 감축 (Water use reduction)
- Replenish** 물 복원 (Water replenishment)
- Increase access** 물복지 실현 (Realization of water welfare)
- Innovate** 혁신기술 도입 (Introduc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 Advocate** 물정책 지원 (Support for water policy)

2030 Water Positive 선언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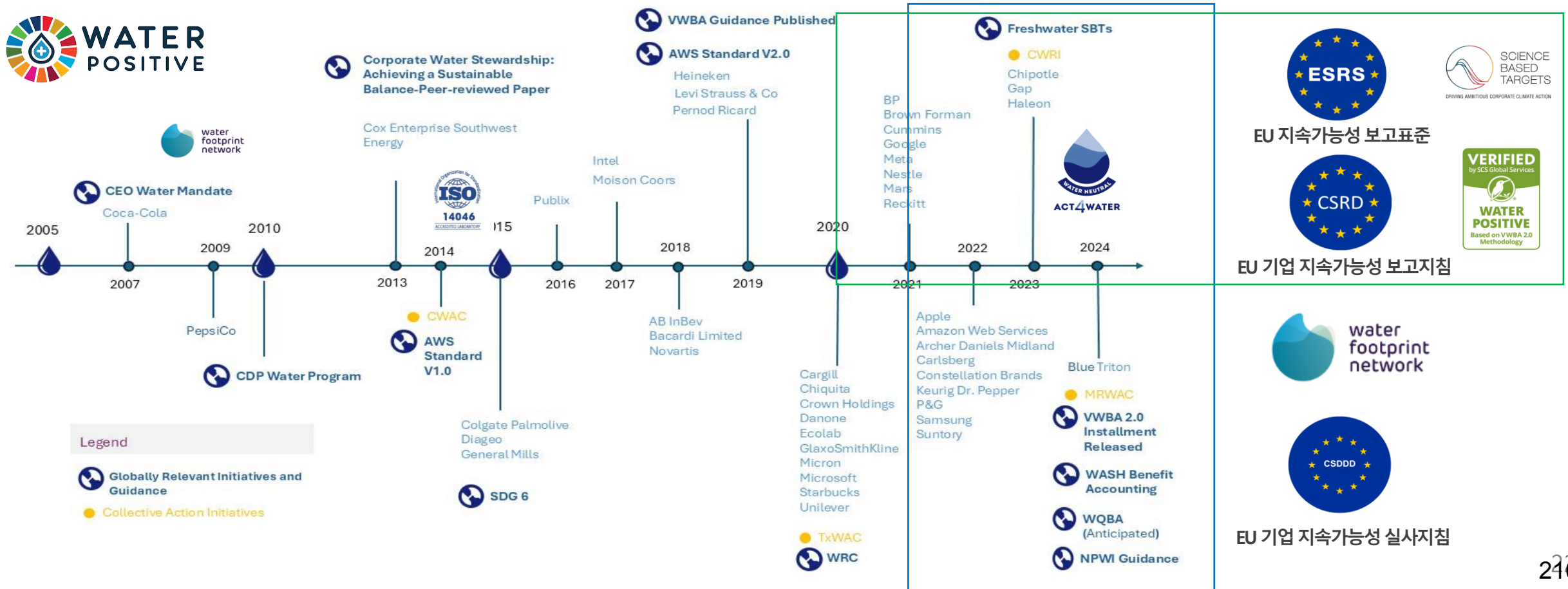
< 물 복원사업 연차별 목표설정 참여기업 증가 >



글로벌 기후공시와 Water Positive 연계

EU의 기후공시에는 다수의 물관련 내용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지침 등에 반영되어 시행 중,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기준에도 물관련 내용 포함·시행 전망

EU 기후공시 적용 : 국내 대기업은 2025년부터, 다수의 국내 기업은 2028년 공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K-water의 ESG 전략

Your True ESG Partner, K-water

국민이 체감하는 모든 경영 및 혁신 활동의 기본으로 **ESG 경영 내재화** 지속 추진 중

2005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21년 '물 특화 ESG 경영' 선언 이후 'ESG 경영원칙' 도입

전사 경영전략

기후위기, 물부족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주체로 K-water 역할 강화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미션

비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슬로건

국문 **세상에 행복을 물** 놓다

영문 **Your True ESG Partner**

- E**nvironmental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구한다.
- S**ocial 상생을 통해 사회의 공동선(善)을 지향한다.
- G**overnance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중장기 ESG 추진전략

목 표

물 서비스 전 과정에서의 Positive Impact 극대화

ESG 원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	상생을 통한 사회의 공동선 지향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전 방	 환경 가치 중심의 사업 추진 전환	 가치 사슬 전반의 ESG 성과 확산	 ESG 지향형 경영혁신 및 체질 개선
전 목	온실가스 감축 901천 tCO2	12만개 일자리 창출 60개 협력사 ESG 확산	청렴도 1등급 달성 인권·비위 ZERO
전 략 과 제	에너지 저 소비형 친환경 수도물 공급체계 구축 등	사회-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협업과 혁신 등	재무 및 투자 의사결정에 ESG 가치 반영 등
실 과	9개 과제	9개 과제	9개 과제

새로운 비전과 전략목표 설정 (2023.11)

대한민국 물안보 강화와 녹색수출 확대를 K-water 최우선 전략목표로 설정·추진 중

비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전략목표
(2030)

새로운 물의 시대를 개척하는 기후위기 대응 솔루션 구현
~2030년 Water Storage 20% 확충 및 녹색수출 20조원



목표 1 Water Storage(물그릇) 20% 확충

➤ 기존 물그릇 144.2억^m 대비 32.9억^m 추가 개발 및 활용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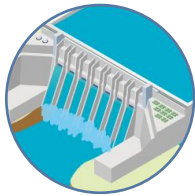
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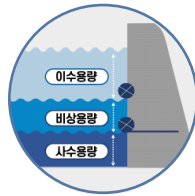
신규 댐



건설 중인 댐



발전용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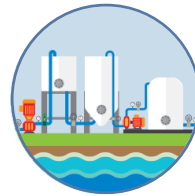
비상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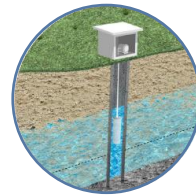
수원 연계



해수담수화



하·폐수 재이용



지하수저류댐

목표 2 녹색수출 20조원 달성

➤ 자체 해외사업 9조원, 민간 수주지원 10조원, 기업 수출지원 1조원 등

국제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물문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저출산, 지방소멸 등 거대한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도입·실행이 필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대표적 임무지향적 혁신기관, 새로운 물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역할 요구

* (대한민국)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국가 경제개발을 위한 1세대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을 수립·실행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성공사례

임무지향적 혁신 : 1~3세대

» 1세대 경제성장 추격, 2세대 국방·핵·우주에 이어 3세대는 국제사회의 난제 해결에 집중
* UN SDGs(17개)가 3세대 임무지향적 혁신과제에 해당



1st Generation
Economic catch-up missions

Examples: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catching up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e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sia and LAC in mid-20th century)



2nd Generation
Defense, nuclear, and aerospace missions

Examples: Manhattan Project and Apollo Mission

When: Mid to late 20th century



3rd Generation
Tackling grand societal challenges

Example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g., Zero Hunger, Climate Change, Clean Energy)

When: 21st century

출처 : Mazzucato and Kattel (2018)

근거 없는 믿음

민간부문에게 일은 다 하는데, 공공부문은 걸리적 거리기만 한다.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실행에 있어 시장실패 교정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시장 형성과 활성화까지 공공부문 역할이 핵심



MISSION ECONOMY
미션 이코노미

정부와 시장의 A Moonshot Guide to **담대한 혁신** Changing Capit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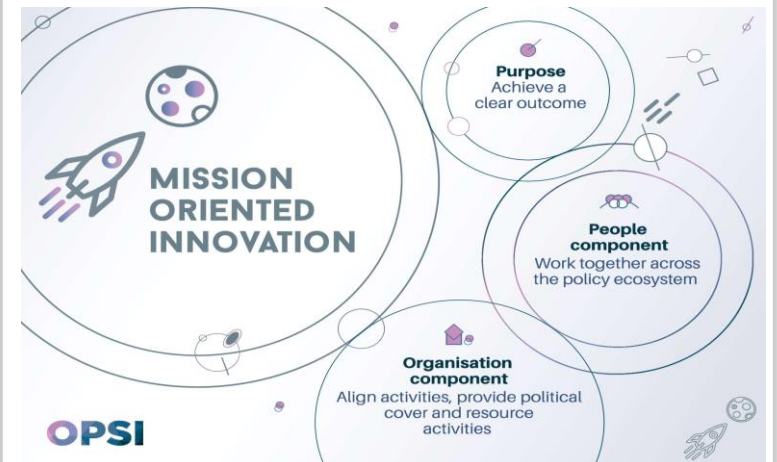
Mariana **마리아나** Mazzucato **마추카토**

이가람 옮김

출처 : Mariana Mazzucato, 미션 이코노미(2025)

임무지향적 혁신의 구성요소

» 목적 설정, 혁신정책 생태계 전반의 협업, 조직간 유기적 역할 분담 및 지원이 필요
* 범위와 참여자가 넓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



출처 : OECD 공공혁신협약체(OPSI)

K-water는 새로운 시대적 임무 인식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물순환 전반의 사업영역을 보유한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 기후변화로 글로벌 물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무지향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물의 시대 개척 선도

시대적 임무

국가경제 발전 기반 마련



국민 복지·생활 수준 향상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선도



설립 목적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추격 (도시화, 산업화,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

새로운 임무 : 국제사회의 최대 난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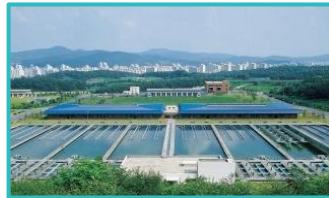
1967.11.16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창립

소양강·안동·대청·충주 등 다목적댐 건설



1988. 7. 1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

수도권·대청권, 울산 등 광역·공업용수도 건설



1974. 2. 1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편

창원·여수·구미·반월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1993.10.27 해외사업 착수

2004. 3.12 지방상수도 운영 개시

2009~2012 국책사업 수행

경인 아라뱃길, 4대강 살리기

2016. 3.24 아시아물위원회 창립

국제사회와 K-water 경험 공유·협력

2018. 6. 8 물관리 일원화

소속부처 변경 (국토부 → 환경부)

2023. 3.22 UN Water Conference

46년 만에 두번째 개최 및 정례화(3년 주기)



2023.11.16 새로운 비전 선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1974.10.15 본사 이전 (서울 ⇒ 대전)

최초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글로벌 물기업에는 최상위 수준의 소통·협력 전략 요구

글로벌 물기업은 'Net Positive' 경영을 실천할 뿐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으며, K-water가 글로벌 리딩 물기업으로 도약하려면 ESG 기반의 이해관계자 소통·협력 전략 대폭 강화 필요

베올리아(Veolia)

▶ 매출액 64조원(세계 1위), 시가총액 30조원

- * 1853년 프랑스에서 창립, 1990년대 다국적 기업 성장
- * 3개 분야 57개국 진출, 특허 5,730건, 직원 21.8만명

▶ 이해관계자들과 Resourcing Together 지향

- * 다양한 배경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과정 '+1' 운영

청취와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필요 이해, 다양한 관점 파악 • 중재를 조정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완전한 비전 수립
협력 및 솔루션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유용한 솔루션 구축 •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특정 이해관계자를 특정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
임팩트 창출에 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목적에 따라 헌신을 이행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Veolia 사업활동의 여러가지 영향 설명

넷 포지티브 경영의 5대 원칙

- 1 기업은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 2 단년 회계주의가 아닌 '장기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3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한다.
- 4 주주가치 창출은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기업 운영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 5 시스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른 회사·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



출처: Paul Polman, Net Positive(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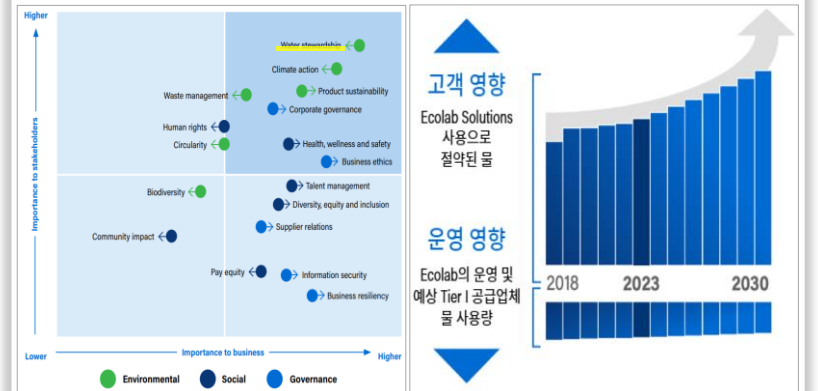
이콜랩(Ecolab)

▶ 매출액 20조원, 시가총액 100조원(세계 1위)

- * 1923년 미국에서 창립, 2011년 Nalco Water 합병
- * 170개국 3백만 고객, 특허 11,600건, 직원 4.6만명

▶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ESG 솔루션 사업화

- * 물과 탄소를 중심으로 2030 Net Positive 경영 이행



소통·협력을 전사 전략으로 격상 (2024.11)

국민·오피니언 리더 소통 확대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협력 전략 강화

2035년 글로벌 Top 2 물기업 도약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협력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채택



새로운 물의 시대 개척을 위한 K-water의 역할

K-water는 57년 간의 물순환 전반에 걸친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새로운 첨단 기술을 빠르게 무장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격차 기술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사업 역량을 발휘하여 기업들과 협력



3대 초격차 기술



DT 물관리



AI 정수장



스마트관망관리

글로벌 선도기술(확대)



해수담수화



초순수



수열



그린수소



조력



수상태양광



지하수저류댐



수자원위성



수도 자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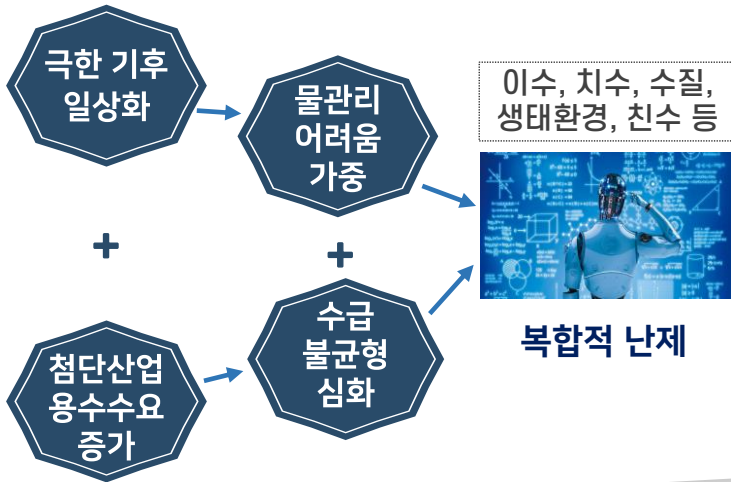
국내 대기업들과 Water Positive 공동 이행

물문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상 전형적인 난제이며, 2023년 국제사회에서 최고 난제로 급부상, 글로벌 물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물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 필수

국내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자 소통·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MOU 체결 및 얼라이언스 구성

복합적 난제 해결 필요

- 새로운 물그릇 확충 및 수자원 관리 협력
- 새로운 물사용 모델, 신기술과 혁신 중요



출처 : K-water 신성장전략단 정리

물은 생명선이나 기후변화와 과소비로 물부족 한계 봉착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 모든 회원국이 UN 물 협약에 가입하고 획기적인 물 행동 의제를 이행하길 촉구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출처 : 2023 UN Water Conference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2024년 3월,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위기 해소를 위한 MOU 체결
- * 환경부, K-water,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POSCO, NAVER, CDP Korea (총 8개 기관)



대한민국 Water Positive 협력 체계 구축

대한민국은 공공 중심의 물관리 체계임에 따라,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민·관·공 협력체계** 필요
주체별 역할을 구분하고 협력방안을 발굴하여 **새로운 형태**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실현



글로벌 물 분야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국가 물문제 해소 및 국내 기업 시장성 확보

Water Positive 실천 기업과 물 기업 간의 협력 만으로 활동하는 해외 사례와 차별성

대한민국 Water Positive 활성화 기본구상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 Water Positive 활성화로
소통 기반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



국내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AS-IS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자체 중심 • 수량 중심 물관리 • 중요성 인식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주체 다양화 • 양적, 질적 물관리 • 기업·국민 인식 개선

민·관·공이 함께하는 물관리

민·관·공 협력 사업체계 구축 및 정책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정책 수립



- 민·관·공 협력 체계 구축
- 정책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국내 맞춤형 복원량 산정기준 마련



- 물관리에 민간 참여 어려움
- 이니셔티브 지속가능성 불확실
- 복원량 산정기준 부재

대한민국 최초 물복원 협력사업 : 장흥댐 신평습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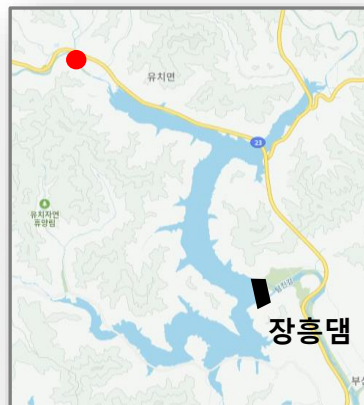
환경부 수변생태벨트



SAMSUNG 신평습지 개선사업



K water 생태미술관



대한민국 Water Positive 활동 비전

2025년 국가 R&D를 통해 정책 기반의 Water Positive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시행
대한민국 여건에 최적화된 이니셔티브 활동 추진 및 글로벌 선도사례로 확산 목표

2024년 국내 이니셔티브 활동 원년

- ✓ 민·관·공 협력 기반, **거버넌스** 구성·운영
- ✓ 국내 최대, 최소 물 복원 협력사업 발굴
- ✓ 물 분야 글로벌 트렌드 **정책연구** 수행
- ✓ 국내 기업, 전문가, 투자자 대상 홍보활동

Next Step

Future 목표

국내·외 성과 확대 및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1 선도사업 준공 및 新사업 발굴
- 2 참여기업 확대 및 성과 환류
- 3 복원량 산정 기준 마련
- 4 인센티브 등 지속가능한 제도 수립
- 5 국내·외 성과 확산 및 홍보



UN
2023 WATER
CONFERENCE



WATER
POSITIVE

**K-water는 새로운 물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업들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1위 종합 물관리 사업자



국내 1위 재생에너지 사업자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시행자



「지역의 위기와 지속가능성」

2025년 한국공공ESG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지역경제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더 큰 로컬경제의

자율성과 회복력에 대한 질문

: SDG 8을 위한 로컬의 순환경제에 관한 고찰

김성균(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생태전환위원회 위원장 / 전략경영연구원 전환사회센터장)

1. 글을 시작하며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Economy)의 어원은 가정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의 오이코스(oikos)와 다스리다는 뜻을 가진 합성어근 nem-의 합성어이다. 이 의미를 직역하면 가정관리라는 뜻으로 oikonomikos로 가정관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경제적 자급자족이 가능한 단위에서 동일한 가부장의 권위와 지배 하에서 생계를 함께 해결하는 모든 사람의 집단을 의미한다).

지금의 경제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그 의미가 다르다. 진부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경제란 무엇인가?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최고의 경제문제로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메커니즘 즉, 경제시스템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자원을 할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컬의 경제구조는 다양한 기관, 기관, 단체 및 소비자의 조합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무엇이 생산되고, 어떻게 생산되고, 누가 그것을 얻는지를 결정하지만 글로벌 수준에서 지배적인 경제 조직 형태는 자본주의 시장 지향적 혼합 경제에서 로컬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한편, 대부분 경제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그래프, 수치, 통계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경제학에서는 첫째는 경제는 돈벌이, 둘째로는 경제는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활동, 셋째는 회소성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는 합리적이라는 논조가 핵심적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경제학에서는 돈벌이, 부를 위한 생산 활동, 합리적 선택으로 정의하지만, 한편에서는 모든 사회가 회소성에 시달려왔는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지, 모든 수단은 회소한지, 회소성 있는 선택은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등에 의문을 가질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음은 현대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논의 그 자체가 다시 들러

1) 홍기빈(2020),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책세상, pp. 42~43.

다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다²⁾.

경제학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 지금의 경제시스템과 한계

우리는 경제학이 누구나 좋아하는 학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일하는 영토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은 정말 필요한가?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 down effect)³⁾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종류의 자유시장 세계자본주의 경제가 유일한 실행 가능한 선택일까와 같은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이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나누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는 기업, 정부, 개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며 구성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짧은 제품 수명, 빠른 유행 변화, 일회용 문화 등을 조장한다. 이러한 소비 중심 경제는 마치 지구가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어 온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 사용하는 주류경제학은 150년 전의 개념과 이론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원론은 중국과 칠레 등 세계 각지로 퍼졌고,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MIT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학과 대학생은 케인즈, 사무엘슨, 맨큐의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한다. 이와 같이 지금 인류사회에서 학습되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는 1950년대 교과서는 큰 변화가 없다. 심지어 지금도 1850년대 경제 이론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다. 세계는 지난 100년 동안 물질, 양적 성장 신화에 홀려 엄청난 부를 얻었다. 얻은 부 만큼 얻은 대가도 엄청 나다. 그 대가는 금융, 식량, 윤리, 인권, 기후 등 부작용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경제학이론으로는 아무 설명도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과 함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 유지’, ‘혁신 성장’을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할까는 늘 의문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물에 만족하지 못한 사회의 틈 사이에 신자유주의 경제의 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구사회는 저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는 다른 유형의 성장이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무엘슨의 경제학은 인류문명에서 20세기의 경제는 인류가 최고로 행복을 느끼는 화양연화와 같다. 시장경제라는 강력한 엔진은 물질적 생산력이 증가시켜온 것이 20세기 경제였다. <노예의 길>의 저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는 위대한 시장을 예견했다. 과연 그럴까? 위대한 시장 이면에 드리워진 세계대전, 파시즘, 공산주의, 기후위기 등의 등장이 가져온 20세기 경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2) 홍기빈(2020),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책세상, pp. 19~38.

3)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부유층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낙수 효과, 하방침투 효과를 의미한다.

사회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에릭 올린 라이트 (Erik Olin Wright)는 <리얼 유토피아>에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사회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한 특정한 방식으로 자본주의로 정의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계급관계와 경제조정 매커니즘으로 구분했다. 그가 언급한 계급관계는 생산수단이 소유되고 생산수단의 사용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는 사회관계, 자본주의의 계급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라고 보았다. 경제조정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양이 탈중앙집권적인 자유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개인과 기업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기업과 개인과 거래하고 교환한다는 것이다.

에니트라 벨슨(ANitra Nelson)과 프란스 티머만(Frans Timmerman)은 <화폐없는 세상은 가능하다>에서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은 교역을 위해 생산하는 사회체제에서 상품 교환을 위해 고안된 정교한 사회구조라고 정의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교환가치 수단이자 정교한 사회구조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화폐는 생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윤과 성장을 동반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화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끝없는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곧 권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우리사회는 가격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한 채 모든 상품은 오로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거래되고,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시장이론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핵심이다. 이 논리는 인간은 이윤만 추구를 존재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토지, 노동, 화폐가 시장경제의 주요 상품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에 대한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경제 중심의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그는 19세기의 문명은 끝났다고 보고 새로운 전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렇다고 칼 폴라니는 시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재분배, 호혜의 형태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주장한다. 일방적인 시장중심의 경제에서 시장과 사회에 초점을 두고 사회관계가 경제 체제 안에 묻어 들어갈 것에 대한 요구이다. 칼 폴라니는 인류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것은 경제가 아니라 사회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일반 균형의 매커니즘을 갖춘 자기조정시장의 기능을 갖추려면, 자연, 노동, 화폐 요소를 갖춘 시장이 완전하게 탄력적인 상품시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상품이 될 수 없는 자연, 인간, 화폐를 부동산, 노동, 자본이라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성립시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허구적 상품(fictitious commodity)이라는 것이다. 홍기빈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자연, 노동, 화폐는 상품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요소가 상품이라는 시장경제에 예속되면서 결국 시장경제는 사회적 관계를 해체를 가져왔다는 것이 칼 폴라니의 설명이다⁴⁾.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경제평론가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면서 18세기 아담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1.0시대에 이어 1930년대 뉴딜정책시기부터 1970년대 석유파동 직후까지 이어진 시기를 자본주의 2.0으로

4) 홍기빈(2020),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책세상, pp. 170~172.

분류했다. 그는 자본주의 3.0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등장할 때를 시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까지의 시기를 자본주의 3.0으로 보았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시기를 자본주의 4.0으로 분류했다. 그가 2007년 세계금융위기를 비롯하여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보면서 단순히 투자은행의 파산이 아니라, 정치철학과 경제시스템의 붕괴라고 설명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의 관점에서 경제제도를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정책과 경제전략은 새로운 실험정신과 실용주의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작지만 강한 정부 형태의 정부의 개입과 자유시장의 동반자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나톨 칼레츠키는 탄력적인 정부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입장은 기존의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출신의 미래학자인 요르겐 랜더스(Jørgen Randers)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에서 지금 상태의 성장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성장은 자원소비의 증가와 환경비용의 상승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를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인류가 그토록 신봉해 온 성장과 발전이 과연 진정한 성장이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인류와 지구사회가 생태공동체, 생태마을, 생태사회의 비전을 품고 지구적 활동을 하고 있는 가이아 에듀케이션(Gaiaeducation)의 <에코빌리지 디자인 에듀케이션(Ecovillage Design Education(2012))>에서는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가능형 경제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0년간 전례 없는 경제활동과 소비는 자원고갈을 비롯하여 전례 없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을 지적하면서 세상의 물자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로 넘는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세기에 인류가 지구에 남긴 생태발자국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로컬 중심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연계 그 자체의 풍요로움을 강조하면서 커뮤니티 및 로컬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되고 로컬과 커뮤니티의 힘이 강해지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행복의 총량과 금전의 기초하여 생각하는 GDP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로컬중심의 새로운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과정의 경제적 불합리를 언급했던 폴 애들러(Paul Adler)는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것 보다 터무니없는 낮은 수익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 애들러의 지적처럼 지금은 1%를 위한 시장경제가 지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인류가 추진 해온 초국적 기업 중심의 경제적 세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Angus Stewart Deaton)은 <위대한 탈출>에서 글로벌 성장이 가져온 소득 불평등을 언급하였다. 그의 주장은 세계화된 경제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며 그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한지는 묻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코튼(David Cotton)은 그 만의 로마클럽보고서로 평가받는 <이야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에서 새로운 경제를 위한 신경경제학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살아 있는 지구를 위한 삶의 경제에 대한 제안이다. 그는 지금의 시장경제를 돈이 모든 가치를 정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규정하는 현재의 경제학을 “가공의 부 경제학”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금융자산인 스톡, 화폐단위인 돈, 그 흐름을 증명하는 GDP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공의 부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가공의 부 경제는 가공된 부인 돈과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진정한 부 사이의 차이를 숨기면서 자산, 자본, 자원 중심의 논의에 집중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가공된 부의 경제학이 아니라, 인적·사회적·지적·물리적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신성한 삶과 살아 있는 지구를 옹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명과 의식, 돈, 그리고 인류의 문화적 진화라는 주제를 연구과제로 삼은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⁵⁾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서 고리대금에 기반을 둔 현재의 통화시스템과 관계를 상품화하고 사람들의 상호 교환 기능을 가능하게 하면서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선물경제를 지양한 결과 사회적 소외와 경쟁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찰스 아이젠스타인의 신성한 경제학은 기존사회에서 이해되어 왔던 돈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인 새로운 선물경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로컬차원에서 논의한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는 <모든 것은 땅으로 부터>, <행복의 경제학>, <로컬의 미래>에서 로컬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로컬의 미래>에서는 로컬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로컬 기반의 금융체계 확립, 성장 중심의 GDP 지표가 아닌 건강한 경제복지지표의 적용, 대기업 중심의 세금 우대정책이 아니라 로컬 중심의 세금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바이로컬(Buy Local)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경제적 세계화로부터 피해받은 로컬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그녀는 <행복의 경제학>에서 지역화(localization)을 강조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 좁히기, 지역화 된 사회화 전략, 식량경제의 지역화 및 식량주권 확보, 문화적·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지지와 격려, 지역사회지원농업 및 농지의 공동체화, 로컬머니 및 지역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연합 등을 활성화는 퍼머컬처 기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을 언급했다. 이들의 논의는 지금의 주류경제보다 보다 더 나은 경제는 무엇일까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은 경제 모델은 무엇일까

더 나은 경제 모델로 새로운 로컬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 지향적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새로운 로컬차원의 지역 경제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머니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개발분야에서 논의하는 선택적 폐쇄공간이론과 유사한 폐쇄형 루프 시스템은 자원의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경제모델로 여기는 로컬경제는 지역화(Localisation), 자연자원의 한계 존중(Valuing natural capital), 자연자원의 가치평가 정상상태 또는 제로 성장경제(Steady state or zero growth economy), 대체교환수단(Alternative means of exchange)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첫째, 지역화(Localisation)

전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역화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도구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지역화를 추진하거나,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지역화를 선택

5) <http://reconomy.org/about-reconomy/understanding-economics-new-economics/> 재구성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화는 완전한 자급자족이나 극단적인 민족주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지역화는 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 정책과는 구별되며, 로컬 경제의 재건과 사회 전환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개념이다. nef의 <Clone town Britain>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현대 사회에서 지역성의 상실은 심각한 문제이며, 지역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다.

둘째, 자연자원의 한계 존중(Valuing natural capital)

우리는 지금까지 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 후에는 폐기하는 선형 경제 시스템에 의존해 살아왔다. 이러한 선형 경제 시스템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크레이들 투 크레이들(cradle to cradle)’,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폐쇄 루프(close loop)’ 등 개념을 중심으로 자원 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순환 경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제 시스템이다. 즉, 한 제품의 폐기물이 다른 제품의 재료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활용, 업사이클링, 임대 경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 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연자원의 가치평가 정상상태 또는 제로 성장경제(Steady state or zero growth economy)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자연 환경 보호가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UNEP의 파반 수크테프 박사와 TEEB 보고서는 자연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심화시켰으며, 이것이 인류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영국 국가 생태계 평가 역시 자연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수치로 보여준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자연 자본주의 로드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 바 있다.

넷째, 제로 성장경제(Steady state or zero growth economy)

우리는 지금 성장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면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2009년 출간된 <성장 없는 번영>은 성장의 딜레마가 갖는 모순적인 상황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며 인류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정상 상태 경제 진흥 센터(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a Steady State Economy / CASSE)는 안정적인 자원 소비와 인구를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상 상태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의 부채 기반 경제 시스템은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통화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ne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을 제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다섯째, 대체교환수단(Alternative means of exchange)

전통적인 화폐 경제의 대안으로 돈 없이도 물물교환이나 협력을 통해 가치를 교환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커뮤니티 기반 화폐와 선물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모델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보완 통화, LETS, TimeBanks, 커뮤니티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REconomy Exchange System과 같은 통합적인 플랫폼을 제안하여 더욱 포괄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7목표 중에 SDG 8번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 구체적인 실천목표이다. 이를 풀어보면 모두를 위한은 로컬의 커뮤니티 주민을 의미하며, 지속적이고는 가치발굴형 로컬경제를 의미하며, 포용적이거나 사람중시의 로컬경제를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내생적 로컬경제를 의미하며,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은 호혜의 로컬경제를 의미하며, 양질의 일자리 증진은 순환의 로컬경제를 의미한다. SDG 8은 로컬, 커뮤니티, 가치발굴, 사람중심, 내생적, 호혜와 순환의 키워드를 가진 SDG라고 할 수 있다.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8	의미
모두를 위한	로컬의 커뮤니티 주민
지속적이고	가치발굴형 로컬경제
포용적이며	사람중심의 로컬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내생적 로컬경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호혜의 로컬경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순환의 로컬경제

2.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경제성장의 꽃, GDP의 딜레마

국민경제 총수요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는GDP이다. 매년 연말이면 방송에서 보도되는 GDP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GDP는 1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총액으로써 한나라의 경제적 생산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GDP는 일정기간에 여러 가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된 품목이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대하여 시장가격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최종생산물의 총량을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에 국민에 의하여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총액이 GDP이다(조순, 1995 ; 369).

경제성장의 최상의 지표로 취급하고 있는 GDP는 더 이상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주장은 현실

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경제성장 운운하는 당신은 GDP를 4%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아마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각종 규제와 규제완화로 온갖 수를 동원하여도 생태적 한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 막상 경제 성장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20세기에서 보여주었던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니면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힌 정치적 미사어구일지 모른다.

긍정적인 사회변화 옹호자이자 비상임 이사(Non-Executive Director and advocate for positive social change)인 데이비드 메이월드(David Maywald)는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Economic growth rates have been falling, and will continue to fall further...)에서 실질적인 GDP 성장률은 현 세대 이전에 비하여 절반 이상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인구성장률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전의 GDP는 경제활동의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수십 년 동안 연간 GDP가 1% 미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세계 GDP 성장률도 3%에서 1~2%로 감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호주의 중앙은행에 의하면 GDP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GDP 성장률의 둔화는 일괄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학자들도 선진국의 장기 성장 예측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3%에서 1.6%로 줄었다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2052년까지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96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 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생산성 성장률은 정점에서 현재까지 연간 약 3.2%에서 연간 약 0.6%로 80%이상 감소했다. 다양한 기술혁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호주에서는 법인세율을 꾸준히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세계의 부채는 GDP의 300%를 초과한 상황이다. 일본은 GDP의 260%, 이탈리아는 150%, 그리스는 165%, 프랑스와 스페인은 110%, 싱가포르는 122%의 공공부채가 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GDP의 소득, 이익, 성장률은 감소해왔다. 향후 수 십 년 동안 이와 같은 현상을 지속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인구성장 역시 감소 할 것이고 그 결과 취업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몇 십년동안 생산성 성장률이 연 3.2%에서 0.6%로 감소와 사상 최고의 부채 추이 등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편협한 GDP 성장 방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속가능한 웰빙과 삶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데이비드 메이월드는 주장한다.

그 뿐 아니라, 데이비드 메이월드는 “GDP(및 재무 보고)는 웰빙, 지속 가능성 또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적

6) David Maywald, “Economic growth rates have been falling, and will continue to fall further...”
<https://www.linkedin.com/pulse/economic-growth-rates-have-been-falling-continue-fall-david/>(검색일 2024. 12. 23)

합하지 않는다.(GDP (and Financial Reporting) is a Poor Measure of Wellbeing, Sustainability or Quality of Life)”에서 GDP의 평가지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GDP는 사람의 행복에 대한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GDP에 의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뿐 아니라, 인류가 지구의 자연, 사회, 인적자본을 파괴하면서 지불하는 비용도 GDP의 계정에 추가된다는 점이 큰 오류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지적은 GDP는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학자와 동일한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어 GDP의 왜곡을 설명하고 있다. 1인당 GDP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GD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한편으로 억만장자는 종종 노동자나 중산층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낸다. 근로자는 다른 선진국의 휴일과 여가 시간이 적다. 건강관리를 위해 지불되는 비용은 비싸고 비효율적 일 뿐 아니라 기대수명도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저자는 미국이 1인당 GDP에서 5백분위수에 속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지수에서는 22백분위수로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엄청나게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저자는 주목하고 있다.

GDP 성장 신화에 지속적으로 매몰된다면 앞으로 그 후폭풍은 참혹할 것이다. 현재 세대는 가계 소비자, 기업, 정부는 기후위기와 자연자원의 고갈이 분명해 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용카드에서 돈을 잔뜩 인출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보다는 주택 가격과 자산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미래세대가 한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천만국가>의 저자 우석훈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의 불확실성은 자산 인플레이션에 적용 가능한 후손과 생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맞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리하면, 경제성장 대표지표로 설명되는 GDP는 환경예산, 환경투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환경기술 개발비용,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의 변수로 설명될 뿐 경제활동과 환경보존을 위한 조정 또는 통합적인 수단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도된 국민소득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21세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표 또는 그린 GDP의 관점에서 기존의 GDP는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⁷⁾. 1972년 로마클럽이 발행한 <성장의 한계>에서는 GDP가 갖는 근본적 한계와 이 자에 이자를 붙여 복리식 관점의 경제성장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보았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극단적 양극화와 갈등, 저출생 고령화 등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너무 많기도 하며 험난하다. 이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제를 양산하는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성장과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DP와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표

존 로트트(John Lintott)는 GDP가 원래는 경제적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1930년대 케인즈 학파

7)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이 값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하다. 반면,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GDP가 영토 중심의 개념인 반면, GNP는 각 국가의 국민이 생산 주체가 된다.

의 경제학자들이 경제운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국민경제의 계산방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의 총수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케인즈 사상의 중심적 개념인 GDP는 본질과는 다르게 성장경제학자들은 GDP를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현재까지 사용해왔다(폴 에킨스, 1996 ; 61). 당시 경제학자들은 GDP의 증가는 무조건 좋은 것이며, 환경은 성장을 위해 경제적 영역에 대하여 무한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부문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처럼 생각하였다.

힅스(Hicks)는 GDP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친환경적 소득⁸⁾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GDP에 대한 소득은 현재 소비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으로서 미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하며 하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GDP에 대한 지표를 “국내순생산⁹⁾ - 방어적 지출¹⁰⁾ - 자연자원고갈의 손실(R - X)¹¹⁾”로 설명하고 있다. 힅스는 이러한 그의 GDP의 개념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헤이즐 헨더슨(Hazel Henderson)은 GDP는 오염된 환경, 붕괴된 공동체, 깨어진 가정생활, 잠식당한 인간관계라는 사회적 비용이 가치 있는 생산물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DP는 산업의 생산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화폐적 영역과 비화폐적 영역을 계정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GDP산정에 있어서 화폐적 영역으로 취급되는 부분만이 GDP로 산

8) 힅스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소득의 개념은 “다음기간의 복지수준이 현재기간의 복지수준보다 하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기간에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명하고 있다.

9) 국내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란 GDP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것을 의미하며, 일정기간에 생산된 순국민생산의 총액이므로 GDP보다 더 면밀한 실질 국민소득개념이다.

10) 방어적 지출은 치안이나 방재 등과 같은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들면, 범죄가 증가하면 경찰이 늘어나고 경찰이 늘어나면 정부의 치안유지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GDP에 계정된다. 이때의 GDP의 증가는 사실상 범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베를린의 환경·사회 국제연구소의 Christian Leipert는 방어적 지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방어적 지출의 종류

	원 인	종 류
환경자원분야	경제성장	환경보호활동 비용, 환경훼손 보상 비용
도시화분야	밀집화, 생산의 집중	증가된 출퇴근 비용, 주택관련 비용, 여가비용
안전사고분야	산업체계의 고도화	범죄, 사고, 기술적 사고 방지를 위한 비용
교통분야	교통사고	차량수리 비용, 의료비, 차량운송비
생활환경분야	불건전한 소비	약물중독, 알콜, 직·간접적 흡연으로 인한 비용

※ 문석웅,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계정,” <폐기물>, 1994, 6. pp. 162-167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계정,” <경성대상경논문>, 경성대, 1993, 12. pp. 47~71.

11) 자연자원 고갈의 손실지표인 (R-X)는 자연자원고갈을 위해 투자해야 할 투자액에서 자연자원 고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원자원의 계정부분은 El Serafy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이것은 지속가능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즉 자원고갈은 미래세대에게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며 GDP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방법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V(t))와 미래에 대한 가치(V(t+1))로 나누어 이들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자원감소를 도출해 내고 이로부터 기대수익(R)과 참조소득(X)간의 차이(R-X)인 사용자 비용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El Serafy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X/R = 1 - \frac{1}{(1+r)^{n+1}}$$

X : 참조소득 R : 총기대수익 r : 할인율 n : 채굴연한 R - X : 사용자 비용

Salah El Serafy, *The Proper Calculation of Income from Depletable Natural Resources*, Y. I. Ahmad, S. El Serafy, and E. Lutz, (eds), *Environmental Accoun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hington D. C., World Bank, 1989.

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화폐적인 부분까지 GDP로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화폐적인 부분은 오염된 환경, 붕괴된 공동체, 깨어진 가정생활, 잠식당한 인간관계에 사용되는 비용 등으로 GDP에 계정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포함된 계정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GDP 개념에 ESSD 개념이 적용되면서 Green GDP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993년 OECD는 적합한 국가회계계정 체계 내에 있어서 환경과 경제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 그린 GDP를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친환경적 경제복지지표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1972년 Nordhaus와 Tobin에 의하여 제시된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를 필두로 하여 일본의 국민복지체계(Net National Welfare), 줄로타스의 경제복지지표(Index of the Economic Aspects of Welfare), Daly와 Cobb의 경제복지지표(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Repetto의 Green GDP와 프랑스에서는 세습자원계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이후 GDP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진정한 진전 지표(Genuine Progress Indicator : GPI)로 추정된 경제적 복지는 실제로 1978년 이후 감소했다. 1978년 정점을 찍은 tp계 GPI는 세계 생태 발자국이 세계 생태 수용력을 초과한 시기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도 1975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GPI는 1인당 GDP가 약 7,000달러를 넘지 않는다. GPI가 완벽한 경제적 복지 지표는 아니지만 GDP보다 훨씬 더 나은 근사치이다. 진정한 진전 지표(GPI)는 GDP를 가져와 불평등, 저취업 비용, 오염 비용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지표이다. 이를 품질 조정 GDP로 부르기도 한다.

“사회적 진보를 모니터링하고 기후 변화, 10억 명 이상의 소외, 자원 고갈, 새로운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기와 같은 21세기의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 지속 가능 개발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ISD)의 언급은 단일척도에 우선하고 성장주의에 매몰된 GDP 방식의 평가가 아니라 SDGs와 같은 균형적인 사회적 성과에 대한 논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웰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GDP를 대신한 다양한 논의들>

구분	보완적 국민회계계정 (System National Accounting)	환경·경제통합회계계제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 SEEA)	MEW (Measure of EconomicWelfare)	NNW (Net National Welfare)
주 창 자	UN	유엔통계국 (UNSTAT) 세계은행	노드하우스 (Nordhaus) 토빈(Tobin)	일본
개 념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가치를 반영하는 것	SNA가 국민경제 지속성을 위협하는 자연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함으로써 ESSD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경제적 후생을 보다 더 충실히 나타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표 NNP를 수정해서 경제적 후생의 MEW를 산출	토빈의 MEW 보다 사회복지 측면을 고려한 지표 NNW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측정지표	GDP1) = GDP - ED GDP2) = GDP + ES GDP3) = GDP + ES - ED	SEEA = 환경과 자연자원에 관한 보조계정을 설정	MEW = NNP + 여가의 가치	NNW = 국민복지증진요소 - 국민복지저해요소
비 고	GDP1) = 수정된 GDP ED = 환경과파괴의 총액 GDP2) = 수정된 GDP ES = 환경의 서비스로 인한 편익 GDP3) = 수정된 GDP	보조계정체계의 구분 1) 공급/원천계정 2) 사용/부가가치계정 3) 유형자산 대차대조표	NNP는 ①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액 ② 국방비, 치안유지비, 공중위생유지비, 각종 유감스러운 방어적 지출 ③ 도로 유지관리비 ④ 도시민 소득과 농촌소득의 차이 ⑤ 도시인의 통근비용 등을 공제하고 있다.	<국민복지 증진요소> ① 개인의 소비지출 중에서 실제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출 ② 내구소비재의 서비스중 실제 소비되는 비용 ③ 정부지출 중에서 보건, 의료, 교육, 문화관계 등 국민복지를 직접 증진시키는 지출 ④ 학교,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⑤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⑥ 여가의 가치 <국민복지 저해요소> ①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 ② 도시통근비용, 교통사고 손실, 도시화에 따른 손실 ③ 각종 방어적 지출
구분	EAW (Economic Aspects Welfare)	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Green GDP	NPA (Natural Partrimpry Accounts)
주 창 자	조로타스(X. Zolotas)	렐리(Herman Daly) 콕(John Cobb)	레페토(Repetto)	프랑스
개 념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다름, 상품광고비 절반만 취급 자원고갈을 사회복지손실의 지표로 인정	GDP에서 혼합한 비용, 각종 환경오염, 자원고갈 비용, 건강, 교육을 위한 예방적 지출 등을 가감하여 만드는 일종의 복지지표 소득매분 형태를 복지지표에 반영	자연비중이 큰 지역에 GDP를 녹색방식으로 수정하여 국내순생산을 계정하는 것	국민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환경통계를 수집·정리함 - 세습자연자원계정 이 계정은 회계형식을 갖춘 환경통계이며 자연자원의 개발과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측정지표	자원가격의 상승 = 자연자원자체의 지대 + 장기이자율 + 위험부담률	ISEW=가사노동의 가치, 도로의 서비스, 교육과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 순자본 형성, 해외순투자 더한 값에서 사회복지를 감소시킨 요소 제외	국내총투자 = 국내순투자 + 자연자원의 감소 + 감가상각	총체적 후생지표를 6단계에 걸쳐서 종합
비 고	GDP보다는 상당히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GDP에 있어서나 EAW와 MEW를 포함한 사회복지지표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소비지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	정부의 각종 방어적 지출, 내구성 소비재 구입비, 광고비 지출비의 일부, 통근비, 도시화 비용, 교통사고 피해 환경오염 및 환경과파괴로 인한 사회적 손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연구 석유, 산림, 토양자원 등 자연자원의 물적·질적변화와 환경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보아 오염정화를 위한 지출은 고려하지 않았음	제1단계 : 환경,자원 경제에 대한 기초자료수집 제2단계 : 1단계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수자원,대기,토양 등 부문별 취합을 통하여 주기적 환경통계작성 제3단계 : 부문별 자료를 종합하여 지역환경보고서 작성, 국가환경백서 작성 제4단계 : 세습자연자원계정과 보존환경계정 작성 제5단계 : 정책 예측, 시뮬레이션 작성 제6단계 : 경제복지지표

경제를 다시 묻는 도넛경제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은 20세기 경제학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린 21세기의 경제학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는 도넛경제학을 7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가는 전환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도넛경제학은 내생적·순환적 지역자본 축적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새로운 경제학이다. 케이트 레이워스가 제시한 21세기 경제학인 도넛경제학은 인간의 욕망이 지구의 생태적 용량을 넘지 않는 경계 사이에서 생기는 최적 지점을 의미한다. 20세기에는 성장 중심의 경제학이었다면 21세기의 경제학은 사회와 자연이 조화를 전제로 한 경제학을 의미한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원과 자연의 처리 용량을 관계를 설명한 개념이다. 이는 일찍이 인간의 욕망만 강조해 온 경제계 중심의 논의에서 자연계의 논의로 확장시킨 것으로 인간의 활동이 자연용량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도넛경제학의 7가지 방법>

구분	20세기	21세기
1. 목표의 전환	GDP	도넛
2. 큰그림의 구상	자기 완결적 시장	사회와 자연에 묻어둔 경제
3. 인간 본성의 회복	합리적 경제인	사회 적용형 인간
4. 시스템의 지혜 구현	기계적 균형	동학적 복잡성
5. 분배의 설계	경제 성장에 의한 부의 축적	분배적인 경제 설계
6. 재생	경제 성장에 의한 환경의 정화	재생적인 경제 설계
7. 성장에 대한 맹신 지양	지상 과제로서의 경제 성장 성장중독자	경제성장에 대한 맹신 보류 성장 불가지론자

※ 출처 : 케이트 레이워스, 홍기빈 번역(2018), <도넛경제학>, 학고재, pp. 38~39.

3. 로컬경제의 길 찾기

로컬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교환·분배·소비 등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경제활동을 전통적 인간활동이라고 한다. 인간은 지속가능한 인간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 배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은 인적 및 물적자원의 배분을 위해 생산·교환·분배 및 소비되는 것을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된다. 일련의 이러한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심을 갖는다면 지역경제학은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지리적 공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언제, 어디에 배분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학문이다. 즉, 인간활동에 따른 배분의 문제를 다룬 것이 경제학이라면 지역경제학은 공간적·지리적 관점에서 배분에 초점을 둔 것이 지역경제학이다. 개념적으로 지역경제학은 지리적 공간상에서의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

기 위한 생산·교환·분배·소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지역경제학은 개별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분석학 또는 지역과학의 한 영역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지역경제학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자원의 배분문제에 대한 분석방법은 전통적 경제분석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

지역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역경제분석은 지역간 인구이동, 지역간 고용기회의 격차, 산업구조의 불균형, 지역소득 및 임금의 격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있다. 지역소득을 위해 지역총생산이 주요 지표로 사용되며, 지역산업의 격차 분석은 지역의 입지 전문화 여부를 주요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역분석기법이 입지상분석(location quotient analysis),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지역성장률시차분석(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등을 주로 사용한다.¹³⁾ 이러한 지역경제분석기법은 지역의 전문성 또는 산업특화도에 초점을 둔 분석으로 지역경제가 갖는 내생적 요인보다 타 지역과의 지역경제력 우위를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개발학과 교수였던 홍기용과 최재선에 이어 대한국도 도시계획학회에서 발행한 <지역경제론>은 위와 같은 의미의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경제는 전통적으로 지역경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지역경제에 초점을 둔 지역발전은 외부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방식이 전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이다. 가령,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여 대형 쇼핑몰 단지를 조성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으로 지역경제효과 여부를 평가한다. 이러한 요소투입형 외생적 지역발전양식에 의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전통적 지역경제전략이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은 개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기업활동을 하여 번 돈 보다 부동산으로 번 돈이 많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개발이 갖는 지역경제 영향력은 막대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개발학과와 대한국도 도시계획학회에서 지역경제론을 다루는 이유는 곱씹어 볼만한 일이다.

스스로 길 찾는 로컬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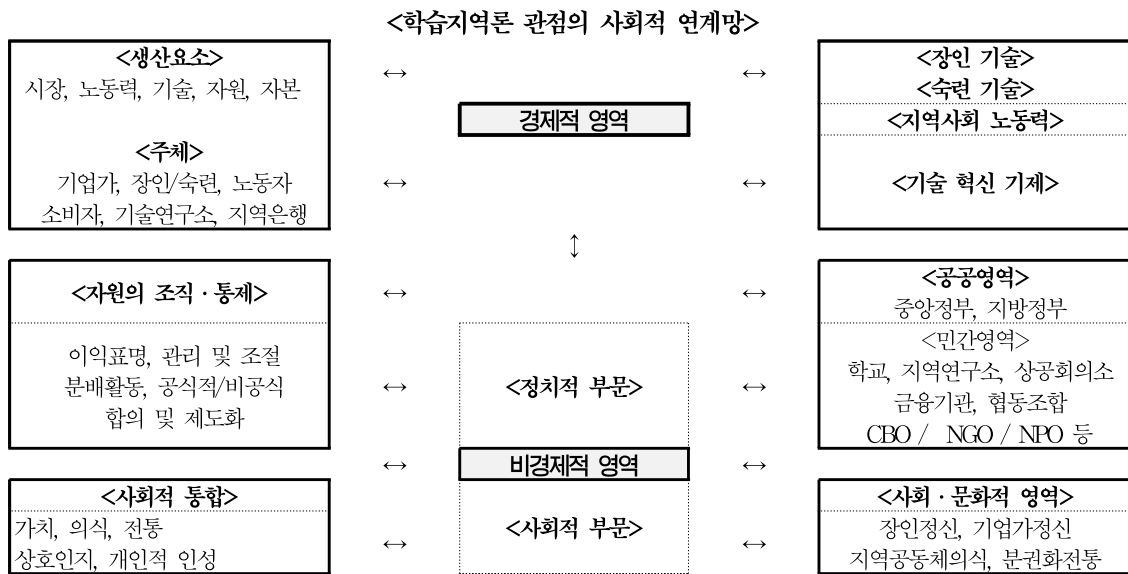
전통적인 지역경제론은 20세기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글로벌 경제의 고도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체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이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한 학습지역은 지역이 지식 기반을 구축

12) 최재선(1980), <지역경제론> 법문사, pp. 19~22.

13) 입지상 분석은 특정지역의 특정산업구조를 전국이나 전체 도시평균과 비교하여 해당산업의 상대적인 전문화 또는 특화 정도를 알아보는 개략적인 분석기법을 의미하며, 변화할당분석은 일정기간 동안 일어난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 지역성장률에 대한 고용 또는 생산액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들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할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변화할당분석은 산업성장률과 고용간의 관계에 따라 지역이 성장하고 성장에 따라 산업자체의 구성이 변하면서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는 지역경제분석기법이다. 반면 변화할당분석이 제시하는 성장효과는 모두 고용인 수나 소득의 변화량을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 방법으로는 산업별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숫자로 표시된 성장은 지역성장률에 기여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단순한 숫자로 표시된 n명의 증가는 지역성장률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호성을 배제하고 산업별 성장기여도를 성장률로 표시하는 기법이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이다. 최재선(1980), <지역경제론> 법문사, pp. 447~462. 재구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전략을 수립하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가(collectors), 지식의 축적, 지식 창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현이 학습지역의 핵심 요소이다. 학습지역은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을 통해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식 집약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지역을 학습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¹⁴⁾

지식집약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지역은 상호 의존적 관계, 네트워크 조직, 유연한 사고, 그리고 소비자 요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특징으로 한다.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학습지역은 지역경제 쇠퇴를 위해 사회적 연계망 구축을 강조한다. 사회적 연계망은 경제적, 비경제적 영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한다. 지역의 사회적 연계망은 지역을 하나의 생산 체계로 보고, 장인 및 숙련 기술, 지역 노동력, 기술 혁신 기제, 공공 및 민간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학습 지역은 경제적 영역과 비경제적 영역을 통합하여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가치 발굴형 전략이다. 이는 지역에서 사회적 생산의 중요성과 네트워크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역경제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역경제는 외부 자원 투입보다는 지역 고유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생산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부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방식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운영하는 내생적 발전 방식을 지향한다.



※ 자료 : 오숙희(199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31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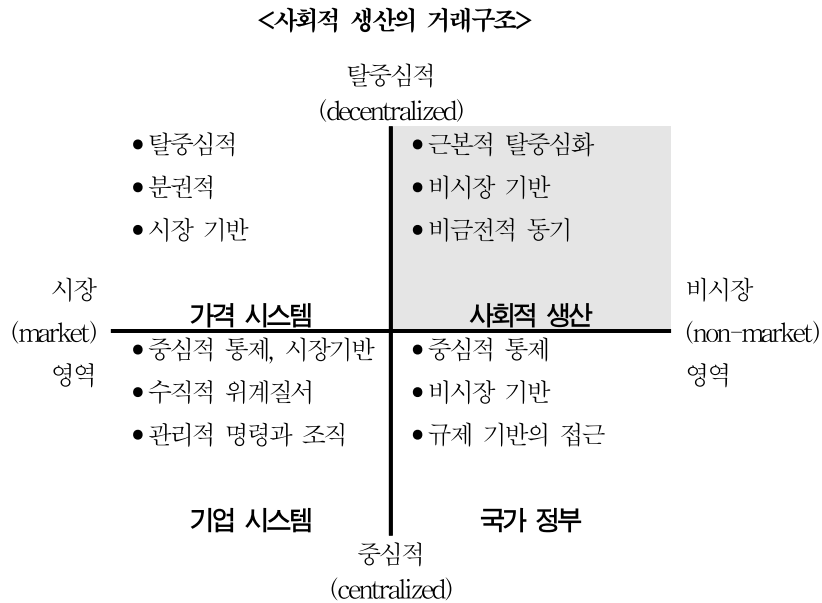
※ 참고 : CBO(Community-Based Organization),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네트워크가 경제다.

14) Rebert Hassink, "What Does the Learning Region Mean for Economic Geography?,"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Regional Frontiers』, Europa-University, 1997, pp. 20-23.

네트워크는 여러 주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로,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요하이 벵클러(Yochai Benkler)는 저서 <네트워크의 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들이 협력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생산'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생산이 시장 경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벵클러의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생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기존의 시장 중심 경제와는 다른 비시장적 가치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소유 중심의 경제에서 접속 중심의 공유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논리는 공유 경제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리프킨을 비롯한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소유 개념보다는 협력과 공유를 통한 상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 출처 : 요하이 벵클러, 최은창 번역(2015), <네트워크의 부>, 커뮤니케이션북스, p. 764.

요하이 벵클러의 주장처럼, 네트워크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한 멧칼프의 법칙(Metcalfe's law)이 있다. 이 법칙은 통신망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도 매우 크다. 그의 설명은 네트워크의 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통신망 사용자에게 대한 효용성을 나타내는 망의 가치는 대체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언급한 멧칼프의 법칙은 단순히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의 많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의미를 넘어 사회적 관계가 갖는 네트워크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요하이 벵클러가 언급한 사회적 생산이 갖는 네트워크의 힘이 곧 로컬의 네트워크의 부가 된다는 것은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니다. 멧칼프의 법칙의 법칙처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수가 일정한 숫자를 넘어서면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멧칼프의 법칙은 요하이 벵클러의 주장처럼 사회적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의 효과가 갖는 힘, 즉 네트워크의 부를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관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컬에서의 네트워크는 연결의 수가 로컬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컬의 선순환을 위한 경제

아니트라 넬슨(Anitra Nelson)과 프란스 티머만(Frans Timmerman)이 공동으로 저술한 <돈 없는 삶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2011)>화폐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트윈 오크의 노동 크레딧 시스템과 스페인 스쿼터들의 비화폐적 가치에 대한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화폐 제도가 지속되는 한 새로운 사회를 향한 그 어떤 대안도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로컬경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는 선순환으로 지역에 돈의 흐름이 이루어지는가이다. 이러한 논의는 로컬머니 관점에서 로컬경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존 로저스(John Rogers)는 <로컬의 돈 : 어떤 차이가 있나(2013)>라는 저서에서 로컬머니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지역이나 커뮤니티를 투기꾼으로 보호하며,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으며, 젊은이와 노인을 지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로컬머니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 화폐는 현대 국가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목적은 둔 화폐이다. 그 화폐를 이용하여 도로, 병원, 학교 등을 건설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서로 거래하고 임금을 지불하거나 벌기도하며, 세금을 내며 부채를 청산하기도 한다. 국가 화폐는 단일 화폐로 모든 사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화이다. 표준화된 통화인 국가 화폐는 1파운드, 1달러와 같이 인식 가능한 계산 단위를 제공하며, 전 세계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교환매체를 제공하며, 미래를 위한 저축이 가능한 매개체이다. 국가화폐와는 달리 지역의 부를 창출하고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로컬머니이다.

한편, 로컬머니 반대론자들은 단지 속임수이며 중산층의 유행이며, 지역 외부에 공급망이 있는 지역 기업에는 쓸모가 없으며, 지역의 상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역에 돈이 쓰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생산을 해야 하며, 로컬머니에 참여하지 않는 저가의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저소득층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 외에도 자유무역과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격이며, 불공정한 경쟁과 지역독점 및 부패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세금을 납부하거나 법적 채무를 청산 할 수 없으므로 로컬머니에 대한 호소력에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로컬머니로는 애플컴퓨터나 사람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는 것 로컬머니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화는 이익에 의해 주도되는 통화라면, 로컬머니는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을 지원하는 특징을 지닌다. 로컬머니는 지역적 다양성을 비롯하여 상호지원 사람을 자산으로 대하는 자세, 모든 일의 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며 환경보호를 하는 일에 집중할 때 주로 사용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슈마허는 로컬의 선순환을 위한 경제를 영속성의 경제라고 표현했다. 그가 말한

영속성의 경제는 먼 거리로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생산시스템에 대한 의존하는 로컬경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로 한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지역자원과 지역노동력을 사용하여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통용되는 국가 통화는 부의 소유권을 중앙 집중화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토착민을 소외시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형·분권형 로컬경제를 기반으로 한 고유한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지지하면서 부를 보다 폭넓게 재분배가 요구되고 있다. 로컬경제는 지역 거래 범위를 설정하여 로컬차원에서 거래하는 경제시스템에 큰 의미를 둔다. 이는 세계 경제의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지역 기업이 안정적인 로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4. 로컬경제의 실험과 도전

(1) 로컬경제 운동의 서막 : 지역사회지원농업, 로컬푸드, 로컬머니, 자산화

로컬경제는 커뮤니티와 이를 운영하는 구성원이 주도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로컬경제는 커뮤니티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을 비롯하여 로컬푸드, 로컬머니 등의 로컬경제의 현장으로 소개되어 왔다. 커뮤니티지원농업은 공유지 관점의 새로운 형태의 재산소유, 고용인과 피고인의 수직적 관계를 지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이익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의 실질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원칙을 운영하는 연합경제 또는 공동체 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되어 왔다.

로컬푸드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초국적 기업의 경영진에게 이익극대화를 위한 제국주의적 먹거리 경관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로컬 차원의 운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알도 레오폴드가 언급했던 토지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인류가 토지 및 그 여타의 생명과 관계 지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로컬푸드 공급망은 식품 생산 및 유통의 환경적 영향, 비용 및 수익의 공정한 분배, 노동자의 공정한 대우, 식품 안전 등 다양한 측면을 새롭게 조명한다. 즉 로컬푸드는 원거리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이다. 연료비 및 운송비 상승, 가족농의 급격한 소멸,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의 손실, 먹거리 안정성과 질에 관한 관심, 먹거리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결과 관련된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로컬 차원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민이 소유한 상점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면 지출된 돈은 지역에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역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결국 토지의 적절한 이용, 먹거리 운송 체계의 축소, 농가 소득의 제고, 로컬 차원의 먹거리 사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로컬머니(Local Money)는 돈이 로컬이나 커뮤니티에서만 순환하는 승수효과를 지속시키지는 의미를 지닌 화폐이다. 로컬머니는 보완적 로컬경제의 한 부류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로컬경제는 지역 외 교환 및 재화에 바탕을 둔 거시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로컬머니는 로컬 차원의 거래에 중심을 둔 경제를 의미한다. 로컬머니와

같은 로컬경제는 거시경제가 아닌 미시적인 로컬차원의 경제와 공동체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로컬머니는 지역화폐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화폐는 지역적인 교환 및 거래체계(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로 불리는 레츠(Lets)는 로컬 차원의 고용 및 교환체제로 지향했던 로컬머니의 원형이었다. 로컬머니는 트랜지션 타운머니, 쿠폰, LETS 등으로 사용하는 로컬의 철학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로컬머니는 국가 통화가 국가 규모에서 가능했던 것과 같이 지역 규모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차원의 통화를 의미한다. 즉, 로컬머니는 지역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로컬머니는 통화를 허용하는 지역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구분함으로써 지역 사업체와 통화가 유통되는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특징을 지닌다. 로컬머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해당 통화를 받는 지역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개인이 지역 우선 구매를 실천하면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활기차고 번영하는 지역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같이 로컬머니는 한 번 사용한 돈이 로컬에서 순환하는 승수효과를 지속시키자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슈퍼마켓이나 체인점에서 10파운드를 소비할 때 해당 지역사회에 3.6파운드의 경제 활동 효과가 생기는 반면, 로컬 소유의 독립적인 마켓에서 쇼핑을 할 경우 3.6파운드의 약 5배 정도에 이르는 17.6파운드의 경제활동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역자산화는 공공선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자산을 지역차원에서 자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지역자산화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지역자산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이 전문한 상황이다.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공동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분할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판단했는지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사례와 경기도 성남의 논골마을의 사례를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이 유무형적으로 자산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지역자산화의 국내 첫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 성북구에 자리한 곳이 있다. 지역자산화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4개의 업체가 모여 지역자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도모했다. 결과는 지역 자산화 방식으로 건물 신축까지 이루어졌다. 대표는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서 지역사회에 온전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고 한다. 공동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지역사회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립으로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몇 가지의 사례를 보면서 마을공동체든 뭐든 결국 지역자산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지원활동이 설계되어야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의 힘으로 만든 지역자산화 앞에 덤빌 정치인이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2) 로컬자원의 연계 : 리코노미(Reconomy)

리코노미(Reconomy)란 무엇인가

리코노미(Reconomy)는 Re와 economy의 합성어이다. 경제를 다시 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 알고 있는 경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REconomy는 ‘재경제’ 또는 ‘다시 경제’로 번역되는데, 이는 과도한 자본주의적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코노미는 마을과 사람, 순환과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리코노미는 윤리적인 로컬 또는 커뮤니티 기업과 새로운 생계를 찾고자 하는 주민과 함께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정한 경제를 지향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리코노미 운동은 로컬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혁신을 도모하는 운동이다. 리코노미 운동은 석유정점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역운동을 하는 트랜지션 타운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이다. 리코노미의 원칙은 지역화, 지역사회의 이익 보장, 탄력성의 향상, 저탄소 기업 지원, 더 넓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 자산의 커뮤니티 소유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조직, 리코노미(Reconomy)센터

토티네스의 리치웰 스트리트에 위치한 REconomy 센터는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센터는 토티네스 주민들이 참여와 공감, 공론과 숙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느리지만 꾸준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슬로 머니’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정기적인 포럼 개최, 지역 화폐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리코노미 센터는 토티네스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 오피스, 스타트업 사무실, 미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다. 100여 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센터는 지난 수년간 운영되며 회원 및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비즈니스 계획부터 개인의 회복력 강화 까지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환경을 제공해왔다. 회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 기업가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Local Entrepreneur Forum’은 지난 몇 년 동안 15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약 100,000 파운드의 투자를 약정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리코노미 센터에서 진행되는 기업가 포럼은 토티네스 지역에서 활기차고, 활기차고, 풍부한 새로운 경제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이다. 매년 진행되는 기업가 포럼을 통하여 지역의 기업가, 투자자 및 기타 변화 주도자들을 모아 서로에게서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진취적인 협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기업가 포럼의 핵심목표는 사회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재생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고, 혁신적이며, 의미 있는 생계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업. 이것이 우리가 ‘지역사회 지원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리코노미 활동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그 의미가 확인되었다. 그 중에 이들의 경제 평가 활동은 새로운 로컬 경제의 잠재적 가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잠재적인 재지역화된 식품 부문이 얼마나 많은 수익과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은 귀중한 정보가 되고 있다. 런던의 자치구의 하나인 램버스의 브릭스톤(Transition Town Brixton), 트랜지션 타운 운동의 대명사로 불리는 토티네스(Transition Town Totnes) 및 농촌지역이 헤리퍼드(Transition Hereford) 외에 유럽의 다양한 곳에서 리코노미 활동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었다.

<각국의 리코노미 활동 현황>

구분	부문	주요활동	국가
카나풀리아(Canapuglia)	농업	대마 생산 및 연구	이탈리아
문화 연구 스피가(Kulturys studeja Speiga)	지역사회	오지 농촌 지역의 생태 공동체	라트비아
멜피냐노(Melpignano)	지역사회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이탈리아
아틀리에 3D(Atelier 3D)	지역사회	70개 지역기업 협력	네덜란드
이크스킬레스 자유학교(Ikkskiles Free School)	교육	무료 학교 300E 시작	라트비아
'크르크 섬'(Island of Kirk)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기	크로아티아
레세다(Reseda)	에너지	재생 에너지 및 기타 여러 가지	이탈리아
NLD 에너지(NLD Energie)	에너지	재생 에너지 및 촉진	네덜란드
메를란덴(Meerlanden)	에너지	퇴비로부터 얻는 에너지 및 기타 효과	네덜란드
직접 구매 그룹(Direct buying groups)	음식	유기농, 저렴한 지역산 농산물	라트비아
CSA 풀라(CSA Pula)	음식	CSA 및 농산물 시장	크로아티아
아르바이아(Arvaia)	음식	지방 정부 토지에 대한 CSA	이탈리아
르 주르 뒤 빵(Le Jour du Pain)	음식	지역사회 지원 베이커리	벨기에
협동적인 아르덴테 Coopérative Ardente	음식	온라인 슈퍼마켓, 유기농, 지역	벨기에
카르토펠콤비나트(Kartoffelkombinat)	음식	CSA, 농장의 우호적 인수	독일
바케리 드 온더그론드세(Bakkerij De Ondergrondse)	음식	지역사회 지원 베이커리	네덜란드
라주르(Lazuur)	음식	지역사회 소유의 살내 시장	네덜란드
미트스호이저 신디кат(Mietshäuser Syndikat)	주택	저렴한 공동주택 임대	독일
다르바비에투(DarbaVietu)	서비스	공동 작업 공간	라트비아
로댕 랫(Rodin let)	식물	천 가지귀 만들기 및 마케팅	크로아티아
휴마나 노바(Humana Nova)	식물	생태/재활용 섬유를 만들고 판매하세요	크로아티아
울리플라워(Woollyflower)	식물	페모 주변의 재스킬링	이탈리아
자전거 타기(Biciklopravljajona)	수송	자전거 수리	크로아티아
르 쿠르시르 모르상(Le Coursir Morsan)	수송	자전거 단거리화물	벨기에

※ 출처 : <http://reconomy.org/what-you-can-do/inspiring-enterprises/more-inspiring-enterprises-from-around-europe/>

운영기제, 기업가포럼

기업가 포럼에는 모든 사람이 지역 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기업가 포럼은 지역 투자자가 지역 기업가를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기업가에게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 사회의 지지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가는 더욱 성공적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곧 살기 좋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리코노미 센터는 지역투자를 권장한다. 지역투자는 영국정부도 권장하는 사항이다. 이와 연계하여 지역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정적 수익과 사회적, 환경적 수익 뿐 만 아니라 은행 및 기업 증권과 같은 일반적인 목록에 중의 하나로 취급한다. 이러한 중개역할을 기업이 포럼이 진행한다. 토트네스 리코노미 센터에서는 지역투자를 위해 지역투자 리소스 센터¹⁵⁾를 비롯하여 로컬투자를 위한 기술, 지역사회에 돈과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¹⁶⁾, 지역 식량 시스템, 유기 농업, 토양 비옥도를 위한 기초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인 슬로우 머니¹⁷⁾, 영국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¹⁸⁾를 공유하고 있다.

잉글랜드 애쉬프링턴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이자 영국 최초의 커뮤니티 푸드 허브인 <푸드 인 커뮤니티 CIC(Food in Community CIC)>¹⁹⁾ 공동 이사인 데이비드 마크슨(David Markson)은 “리코노미 센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정체성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얻으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공간 공유를 통해 우리는 다른 기업가들과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편안하고 친근한 환경에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토트네스 재생 에너지 협회의 재인 브래디(Jane Brady)는 “리코노미 센터는 회원, 기금 제공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킹하고, 에너지가 식량, 교통, 화폐와 함께 지역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하고 있다²⁰⁾.

2021년 9월 5일에는 토트네스의 리코노미 센터에서는 슈마허 칼리지 뒤편의 놀라운 야외 공간인 글레이드(The Glade)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5개의 지역 사업 프로젝트인 리빙 프로젝트(The Living Projects), 몬트

15) 로컬 투자 리소스센터(Local Investing Resource Center)는 전국의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대한 투자 지원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지역투자자인지, 커뮤니티 빌더인지, 투자전문가인지, 사업주인지를 물으며 그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https://localinvesting.org/>

16) Michael H. Shuman, <24 Top Tools for Local Investing>, <https://michaelhshuman.com/wp-content/uploads/2013/12/Top-Tools-2.0.pdf>

17) Slow Money는 지역 식량 시스템, 유기 농업, 토양 비옥도를 위한 기초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지역식량 시스템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기후 변화, 건강, 지역 사회 회복력 등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자체 조직 지역 그룹의 형성을 촉진하며, 공개 회의, 농장 행사, 피치 페스트, P2P 대출, 투자 클럽,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0% 대출을 하는 비영리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다. 슬로우 머니는 지역 투자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지역 농부들,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토지와 연결되어 의미 있는 새로운 육성 자본의 흐름을 촉진하고 있다. <https://slowmoney.org/about/>

18) 영국 정부는 커뮤니티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 주식 매수는 사업의 일부 소유자가 됨으로써 지역 주민은 사업의 지지자, 자원봉사자 및 옹호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커뮤니티 주식은 지역 슬집을 구하거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지역 주민의 투자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get-involved/take-part/invest-in-local-enterprises>

19) Food in Community CIC는 영국 최초의 커뮤니티 푸드 허브로 10년 이상 영양가 있는 유기농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 단체이다. 일년 내 내 매주, 날씨에 상관없이, 푸드 인 커뮤니티의 자원봉사자들은 신선 과일, 채소 및 기타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음식을 수집하고 분류한 다음, 지역사회(사우스 데번) 전역의 각 가구와 자선 단체, 지역 사회 단체에 식품 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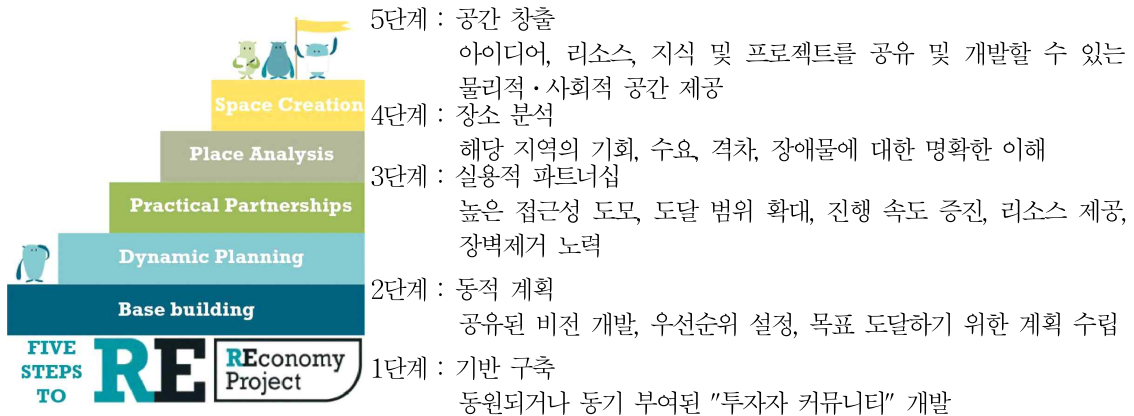
20) 토트네스의 리코노미 센터는 리코모니 운동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 https://reconomycentre.org/home/reconomy_centre_page/

리올 스타일 베이글(Montreal Style Bagels), 커먼플로라(CommonFlora), 브루하하(BrewHaHa), 멘드 어셈블리(Mend Assembly)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이었다 . 당시 돈과 현물 사업 서비스를 포함하여 143개 이상의 제안이 있었고, 그 가치는 11,500파운드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뿐 아니라 일부 투자는 소개, 지식, 자원 봉사, 트윗, 석고 바르기, 병입, 배달, 심지어 육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리코노미 활동 5단계

영국에서 진행된 리코노미 활동 경험은 로컬 및 지역사회 중심의 하향식 경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난 경험을 통하여 얻은 리코노미 활동은 1단계인 기초 구축, 2단계인 역동적인 계획, 3단계인 실용적 파트너십, 4단계인 장소 분석, 5단계인 공간 창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류했다.

<리코노미 활동 5단계>



구분	주요내용
<p>1단계 : 기반 구축</p> <p>동원되거나 동기 부여된 <투자자 커뮤니티> 개발</p>	<p>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모델 구축은 다양한 사람과의 협력이 필수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팀 구성 : 초기에는 소규모의 핵심 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 필요 ● 커뮤니티 이벤트 개최 : 작은 규모의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의 비전을 만들고, 활동 계획 수립 ● 다양한 채널 활용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이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사람의 참여 유도
<p>2단계 : 동적 계획</p> <p>공유된 비전 개발, 우선순위 설정, 목표 도달하기 위한 계획 수립</p>	<p>초기의 열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동기 부여 :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동기 부여 ● 명확한 방향 설정 : 활동 방향의 명확한 설정 ● 외부 지원 확보 : 외부 지원 확보
<p>3단계 : 실용적 파트너십</p> <p>높은 접근성 도모, 도달 범위 확대, 진행 속도 증진, 리소스 제공, 장벽제거 노력</p>	<p>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 지역 경제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 관계 구축 ● 상호 이익 추구 : 협력 파트너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제시 및 상호 간의 이익 추구 도모 ●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 :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 유지 ● 다양한 채널 활용 : 이벤트, 회의,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소통 필수
<p>4단계 : 장소 분석</p> <p>해당 지역의 기회, 수요, 격차, 장애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p>	<p>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은 각기 다른 문제와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 및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청사진 모델 활용 : 지역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지역 주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 제시 ● 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사회의 참여 유도 :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축 ● 외부 자원 확보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자원 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p>5단계 : 공간 창출</p> <p>아이디어, 리소스, 지식 및 프로젝트를 공유 및 개발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공간 제공</p>	<p>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또는 사회적 공간이 중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공간 필요 : 시골 지역은 기업 간 교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도시 지역은 정기적인 모임 공간이 부족할 수 있음 ● 맞춤형 공간 제공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간을 제공하여 기업가들이 서로 만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간을 통한 네트워킹 : 공간을 중심으로 기업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모색

※ 출처 : <http://reconomy.org/starting-a-reconomy-group/five-steps-to-reconomy/> 재구성

로컬의 권한 강화

리코노미 운동은 상향식 전달 조직이 아닌 하향식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실제 경제 실험실이다. 영국이 리코노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지역 경제의 변화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과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업과 협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50여 개의 전환 이니셔티브를 통해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프로젝트를 금융 및 지원과 커뮤니티 권한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커뮤니티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윤리적 투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지역 공동체가 새로운 지역 금융 상품과 투자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로컬머니에 대한 관심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새로운 기업들은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술, 자신감,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기존 지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통화와 커뮤니티 금융 이니셔티브의 운영 방식을 평가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금융 혁신과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 혁신은 차세대 통화 시스템, 지역 토지 가치에 연동된 통화, 새로운 자발적 커뮤니티 세금 등을 모색하고, 사람들의 금융 기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지역 신용 조합과 같은 지역 개발 금융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코노미 운동은 지역사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사회가 공공 자산, 토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프롬과 같은 지역에서는 기존 권력 구조를 깨고 새로운 권한을 주장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새로운 권한에 대한 수용도 더딘 편이다. 한편, 프롬이나 프레스턴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권력을 되찾고 좌절감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끈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을 위한 협력적 리더십 교육과 혁신적인 방법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와 주요 기관들이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지역 중심의 의사 결정 과정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의 REconomy 교환 시스템

새로운 지역 경제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환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게리 알렉산더(Gary Alexander)는 선물 경제와 지역 교환의 장점을 보완 통화와 전환사회를 모색하는 기업의 개념과 결합하여 새로운 로컬 경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환 기업들은 기존 시장의 경쟁과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리코노미 교환시스템(REconomy Exchange System)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리코노미 교환시스템

(REconomy Exchange System)의 목표는 향후 미래 맞이할 로컬경제에 대한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 기업 네트워크 구축 : 전환 기업들은 고객, 공급업체, 금융 기관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부 경쟁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마치 선택적인 상호의존적인 시장처럼 참여 기업들은 서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급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금융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품질 관리 및 평판 향상 : 고객과 공급망 전체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유와 상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재정적 투명성 확보 :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과 공급업체의 신뢰를 얻고,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책임 강화 : 환경 보호, 윤리적 경영, 사회적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경제 활성화 : 선물 경제와 지역 통화를 활용하여 지역 내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고, 외부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여섯째,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 유사한 전환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틈새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 은행, 신용 조합, 건축 조합 등 다양한 금융 및 사회적 기관을 통합하여 기존 통화와 보완 통화를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정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역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선출된 조정자와 함께 협력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로컬의 부의 축적 : 로컬 웰스(Local Wealth)

로컬 웰스, 커뮤니티 부의 축적

미국의 클리블랜드와 영국의 프레스턴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로컬 차원의 부의 축적의 중요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마저리 켈리(Kelly, Marjorie)와 테드 하워드(Howard, Ted)의 <모두를 위한 경제>는 클리블랜드와 프레스턴의 사례를 잘 소개하고 있다. 로컬의 부의 축적과정을 중요성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두 지역의 사례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유주의 경제를 넘어서기 위한 로컬차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원의 로컬차원의 경제이다. 클리블랜드와 프레스턴 사례 이전에 협동조합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볼로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지역순환을 원칙으로 한 로컬경제의 등장과 부의 축적이 아니라 로컬에서 사회적 혁신을 강조·확대·촉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정치의 과감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는 산업 공동화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지역의 양코조직과 협동조합이 연계하면서 로컬경제를 든든하게 만든 사례로 제도

적으로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이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영국의 프레스턴은 민주적 소유권 기반 협동조합의 확대과정을 통하여 로컬경제를 든든하게 사례로 꼽는다. 프레스턴의 만성적인 가난, 실업 문제, 그리고 심화되는 건축 정책 과정에서 공동체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한 지역성장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노동자 소유 기업, 공동체 토지 신탁, 공동체 은행과 같은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스스로 자산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다. 프레스턴 모델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한 유형은 지역 내부 자원 활용에 초점을 둔 로컬경제 전략이었다. 이들의 특징은 ① 지역 내 대학교, 병원, 주택조합 등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수요를 가진 공공기관을 ‘앵커 기관’으로 정의하고, ② 이들의 구매 활동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③ 지역 내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진보적 조달’ 방식을 도입하였고, ④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했으며, 진보적 조달을 통해 지역 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⑤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이와같이 로컬은 기업에서 은행에 이르기까지 커뮤니티에 있는 경제 기관 소유권은 부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사적소유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는 해당 소유자에게 집중된다. 점점 더 금융화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우리는 극소수에게 소유권이 집중되고 단기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더 많은 소유자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커뮤니티의 부를 유출시키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롭게 지역적으로 재순환되지 않으며, 로컬 또는 커뮤니티의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킨다.

로컬 웰스는 커뮤니티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전략이다. 로컬웰스의 특징은 커뮤니티가 자산을 직접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커뮤니티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커뮤니티 웰스 빌딩(CWB: Community Wealth Building)이라고 한다. CWB는 커뮤니티의 민주적 소유권과 자산 통제를 기반으로 로컬 경제를 변화시키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공유되는 경제적 번영, 인종적 평등,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한다²¹⁾. 그 뿐 아니라, 민주적 참여와 소유권을 핵심으로 커뮤니티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방정부와 공공부문 및 기타 뿌리깊은 앵커기관의 자원, 자산과 힘을 활용하여 보다 공평한 경제조건을 만들어 낸다. 더 큰 협력과 집단적 행동을 통해 CWB는 커뮤니티에서 기초적인 활동을 위한 관련 정책 조치 및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장소에 기반을 둔 CWB는 역사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당되고, 창취당했던 사람을 위한 포괄적 사회적 커뮤니티 디자인이다. 따라서 CWB는 경제적 민주적 소유권과 커뮤니티의 자결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접근방식이다.

커뮤니티 부의 축적은 지역 및 협동조합에서 커뮤니티 및 공공소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한 민주적인 소유권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사람이 창출된 부를 공유하고 경제적 상황이 통제되어야 한다. 그 과정 옛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시스템은 커뮤니티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자산이 소유되는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로컬 웰스는 커뮤니티 자산을 구축을 원칙으로 한 추출적 소유가 아닌 민주적 소유에 기반한 지역경제이다.

21) Sarah McKinley and Neil McInroy(2023), <Action Guide for Advancing Community Wealth 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Democracy Collaborative, p. 7.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기둥

CWB는 부의 생성방법, 부의 순환 및 분배방법과 부의 혜택에 초점을 둔다. 토지에서 노동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자산의 소유권은 부가 어디로 가며, 누구에게 가는지를 경청한다. 자산의 소유권을 확대하면 지역경제 내에서 부의 흐름의 본질과 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CWB는 자금을 재순환시키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커뮤니티의 부를 축적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직적 불평등과 쇠퇴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커뮤니티의 부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깊이 있게 로컬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CWB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제와 부를 구성하는 구조와 흐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사리 맥킨리(Sarah McKinley)와 닐 맥인로(Neil McInroy)는 <미국 내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행동가이드>에서 커뮤니티의 부의 구축을 5개의 기둥으로 설명하고 있다.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5개의 기둥>

구분	주요내용
점진적 조달	지방정부와 지역기반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재지역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조달 관행 선도
장소에 뿌리 내리는 자원	금융은 공공 및 지역은행, 신용조합, 공적연금을 통해 실물경제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자금의 재지정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정책은 생산적 자본의 소유가 모든 정치·경제 시스템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노동자 및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방기업 등의 설립을 지원
공정한 노동	모든 근로자는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직장에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력을 갖고 적절한 일자리와 조건을 갖춘 노동조합 권리 증진
토지와 재산의 공정한 사용	지방정부는 토지와 재산 자산을 동원하여 커뮤니티에서 실제 부를 축적하고 지역토지와 부동산 개발을 다시 커뮤니티의 통제하에 두어 투기와 이주의 방지

※ Sarah McKinley and Neil McInroy(2023), <Action Guide for Advancing Community Wealth 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Democracy Collaborative, p. 8.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5개의 기둥의 영향지표>

구분	주요내용
점진적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지출이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된 비율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특별히 지정된 지출 비율 ● 지역기관 공급망을 통해 창출된 생계임금 일자리의 비율 및 개발 ● 진보적 조달 전략을 통해 창출된 생계임금을 지불하는 신규 일자리의 비율
장소에 뿌리 내리는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연금기금의 화석연료 투자는 0원으로 축소 후 다른 용도로 전환 ●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 연금 및 운영 자금의 비율 ● 연금 및 기금 내 국내투자에 대한 목표 설정 ● 재정적 불안을 겪는 인구 비율 감소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내 협동조합 및 근로자소유기업의 비중 증가 ● 노동자 협동조합 및 직원 소유기업에 종사하는 지역 시민 ● 직원소유로 전환된 사업체 수의 증가
공정한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증가. ● 생계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비율 증가 ● 저소득층 및 BIPOC 커뮤니티 고용률 증가. ● 노동조합 가입률 증가. ● 성별 및 인종 간 임금 격차 감소.
토지와 재산의 공정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토지신탁이 보유한 토지의 비율 증가. ● 지역, 공공 및 협동조합 소유 자산 증가. ● 지역경제, 사회 또는 생태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의 비율 ●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의 가용성 증가.

※ Sarah McKinley and Neil McInroy(2023), <Action Guide for Advancing Community Wealth 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Democracy Collaborative, p. 35.

우선순위와 핵심가치

영국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국가조직인 로컬경제전략센터(CLES: The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는 커뮤니티의 부의 축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코로나 19와 팬데믹, 생계비 유지, 에너지 및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기후위기 등이 로컬에 깊게 영향을 주면서 로컬경제는 지속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보고 있다. 로컬경제의 변화를 위해 CLES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로컬의 부의 축적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첫째, 공정한 부의 흐름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는 실업률 감소, 소득증가, 불평등 감소 등이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기후위기 같은 환경제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와도 연결된 경제모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을 위한 커뮤니티 부의 축적 관한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지역 경제 개발의 핵심 학문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커뮤니티 부의 축적 개념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조달 및 고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토지, 금융 등 복잡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부의 축적의 주체와 역할,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사회 전체의 의제화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토지 개발 영향 분석, 조달 정책 활용 방안 모색, 법률의 역할 탐구 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셋째, 강력한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진보적 운동의 성공을 위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고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개발에 시민 참여형 모델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LES가 정한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우선순위에 이어 CLES는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5가지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부의 축적을 위한 핵심원칙>

핵심원칙	주요내용	해결책
1. 경제의 복수 소유권 (Plural ownership of the economy)	소규모 기업, 지역 사회 조직, 협동조합 및 지방 소유권에 대한 개발과 성장으로 지역 경제에 재정적으로 더 많은 이익 제공 및 부를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기업 •협동조합 •지방 소유권 •인소싱 •창조경제
2. 지역 장소에 재정적 힘을 작용시키기 (Making financial power work for local places)	자본을 유치하는 것과는 반대로, 로컬에 있는 부를 활용하고 재순환시켜 지역 경제 내 투자 흐름 증가 도모 여기에는 지방 자치 단체 연금 기금을 재지정 및 상호 소유 은행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금 기금 •상호은행과 지역은행 •신용 조합
3. 공정한 고용과 공정한 노동 시장 (Fair employment and just labour markets)	앵커 기관은 지역 주민의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 저소득 지역에서의 채용, 생계 임금 지급, 진급 경로 구축은 모두 지역 경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생활 임금 •좋은 고용 현장 •“접근하기 어려운” 그룹에서의 모집
4. 상품과 서비스의 점진적 조달 (Progressiv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지역 고용을 지원하고 지역적으로 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밀집된 지역 공급망을 개발 여기에는 중소기업, 직원 소유 사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지역 사회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지출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 •사전 자격 심사 기준 •서비스 위탁을 위한 시장 형성
5. 토지와 재산의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사용 (Socially just use of land and property)	앵커 기관이 보유한 지역 자산의 기능과 소유권을 심화하여 시민들이 재정적, 사회적 이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유지의 일부로서 공공 부문 토지와 시설인 커뮤니티 사용을 개발하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토지 신탁 •공유지

※ 참조 : CLES(<https://cles.org.uk/what-is-community-wealth-building/the-principles-of-community-wealth-building/>)

커뮤니티의 부의 축적으로 위해 영국의 이슬링턴 의회는 사회 복지 및 육아와 같은 기초 부문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사업 지원 허브와 협동 개발 기관을 위임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에서 Combined

Authority는 일상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협동, 상호, 사회 및 지역 사회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커뮤니티 부의 허브를 설립했다. 한편, 리버풀 시 지역에서 시장은 사회적 거래 조직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의 영향을 키우기 위한 Kindred 의 작업을 지원했으며, 셰필드에서는 Co-Operatives UK 및 Employee Ownership Association과의 The Ownership Hub 파트너십이 시 지역에서 근로자 소유권을 키우도록 설계되었다.

커뮤니티 부의 거점, 앵커기관

커뮤니티 부의 축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로컬에 뿌리 내리고 활동하고 있는 앵커기관이다. 앵커기관은 개규모 공공, 비영리 및 사회부문 조직으로 지방정부, 교육기관,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의 앵커기관은 로컬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앵커기관은 로컬에서 가장 큰 고용주이자 구매자의 성격을 갖는다, 이 기관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상품과 서비스, 지역주민 고용 토지, 재산, 금융자산 등의 재배치를 통하여 로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앵커기관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므로 기업이전과 같은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로컬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큰 특징도 있다. 로컬의 앵커기관은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주적 역할도 매우 크다. 앵커기관의 규모, 고정 자산 및 활동 그리고 로컬과 커뮤니티의 연결등을 점착성 자본(sticky capital)²²⁾으로 부른다.

5. 결론 : 우리의 현실과 과제

대한민국 헌법 속의 지역의 위상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하여야 할 역할을 다룬 법률이다.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하여야 할 역할을 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택개발정책으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0조의 2항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다루고 있다.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 제123조 2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5조 3항, 제119조 2항, 120조 2항, 제122조, 123조 2항에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비롯하여 균형발전을 다루고 있다.

22) 점착성 자본(sticky capital)은 끈적끈적한 자본, 또는 끈적끈적한 자본 통제, 자본통제정책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말한다. 즉, 자본통제정책의 변경이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앵커기관을 점착성 자본으로 보는 이유는 로컬이나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자본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부분의 헌법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주요내용
제35조 2항	주택개발정책에 의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제119조 2항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 민주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제120조 2항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토의 자원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
제123조 2항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경제 육성의 의무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는 성장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균형성장을 다루고 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균형성장은 재벌 중심의 경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편중된 지역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이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바라본 경제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는 경제민주화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보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를 강조한다. 그 외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헌법 제120조는 주요자원의 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30조 가운데 지역을 다룬 단어는 제123조 2항의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에 지역간의에서 지역과 지역경제의 지역이라는 단어가 전부이다. 그 만큼 지역 또는 로컬에 대한 무게중심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편중과 로컬의 위기

이러한 지역의 위상을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이 인구이다. 2025년 1월의 인구 관련 첫 뉴스는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저출생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특히 한국사회는 자연감소율 대비 자연출생율은 전 세계에게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저출생 고령화에 이면에 더 시급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인구가 편중된다는 것이다.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의미의 편중이라는 뜻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단어다. 수도권에 인구가 모이면서 인구집중이라고 사용했으나 집중보다는 편중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듯 하다. 편중은 정해진 용량은 있는 특정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인구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곳에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중이라는 점이다.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33명으로 2022년에 비하여 11만명이 줄어 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증가,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를 비롯하여 저출생 등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점으로 4년 연속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인구수 증감 추이>

(단위 : 만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5,133	5,153	5,170	5,178	5,183	5,185	5,183	5,164	5,144	5,133
남	2,567	2,576	2,583	2,586	2,587	2,586	2,584	2,575	2,564	2,557
증감	80,960	88,890	69,408	28,325	10,210	-1,313	-23,787	-94,345	-109,733	-71,215
여	2,566	2,577	2,587	2,592	2,596	2,599	2,599	2,589	2,580	2,576
증감	105,488	112,532	97,470	54,003	37,305	25,115	2,949	-95,869	-90,038	-42,494

※ 출처 : 안전행정부(2024. 1. 10). <보도자료 :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 133만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이와 같이 인구감소는 노동, 경제, 교육, 지역, 국방, 치안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연령 인구 감소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들며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와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분야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체계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의 측면에서는 병역자원의 감소에 의한 국방력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지역측면에서 수도권 인구편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 1%가 감소하면 국내총생산의 0.59%가 감소하며, 피부양인구 1%가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의 0.17%가 증가한다고 예고한바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에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에 향한 인구편중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수도권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알 수 있다. 수도권 중심의 인구편중은 로컬 없는 로컬리터만남을 뿐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추이>

(단위 : 만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도권	2,536	2,547	2,559	2,568	2,580	2,593	2,604	2,602	2,599	2,601
	49.41%	49.43%	49.50%	49.60%	49.78%	50.00%	50.24%	50.39%	50.52%	50.69%
비수도권	2,596	2,606	2,611	2,610	2,603	2,592	2,579	2,562	2,545	2,531
	50.59%	50.57%	50.50%	50.40%	50.22%	50.00%	49.76%	49.61%	49.48%	49.31%
격 차 (수도권 - 비수도권)	-60.1%	-58.8%	-51.5%	-41.9%	-23.1%	0.2%	24.8%	40.8%	53.1%	70.3%

※ 참조 :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3곳을 의미하며, 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곳을 의미함

※ 출처 : 안전행정부(2024. 1. 10). <보도자료 :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 133만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전국 시·도별 인구증감 현황>

(단위 : 명)



'22년 대비 인구증감		순위	시·도	자연적 요인 (출생-사망)	사회적 요인 (전입-전출)
증가	41,389	1	경 기	순감 ↓	순유입 ↑
	30,096	2	인 천		
	11,299	3	대 구	순감 ↓	순유출 ↓
	7,082	4	충 남	순감 ↓	순유입 ↑
	2,934	5	세 종	순증 ↑	순유입 ↑
감소	-46,168	1	경 북	순감 ↓	순유출 ↓
	-42,338	2	서 울		
	-29,335	3	경 남		
	-24,450	4	부 산		
	-14,850	5	전 북		
	-13,480	6	전 남		
	-11,813	7	광 주		
	-8,691	8	강 원		
	-7,002	9	울 산		
	-3,856	10	대 전		
	-2,907	11	제 주		
	-1,589	12	충 북		순유입 ↑

※ 참조 : 순증 : 출생-사망>0, 순감 : 출생-사망<0 / 순유입 : 전입-전출>0, 순유출 : 전입-전출 < 0 / 대구는 '경북 군위군'의 편입으로 전년대비 인구증가

로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전환패러다임 모색

도시국가론, 세계도시론의 등장은 로컬의 경쟁력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의미는 로컬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과거에 지향해왔던 로컬 중심의 논의인지는 의문이 든다. 여전히 경제적 세계화 중심의 로컬정책이라면 여전히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지역경제 정책에 불과하다. 이제 로컬의 경제적 위상은 기후위기는 지구적 변수와 내생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영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사회적자본으로서 가치를 발현하는 상호 순환과 호혜의 경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경제의 특징을 지닌다.

사례에서 소개했듯이, 커뮤니티지원농업, 로컬머니, 로컬푸드를 비롯하여 로컬의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위한 로코노미 관점부터 로컬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다양한 전략이 고도화되고 있다. 경제는 세계를 대상이 되고 있다. OTT 시장은 이미 문화자본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깊게 뿌리내린 상화에서도 우리의 삶과 살림살이를 위한 로컬은 여전히 중요한 장소이자 공간이다.

외부자원에 의존한 지역경제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그 연결을 통하여 로컬차원의 승수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로컬경제의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SDG 8번 목표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SDG 8번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주류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관점이 아니라, 지역화(Localisation), 자연자원의 한계 존중(Valuing natural capital), 자연자원의 가치평가 정상상태 또는 제로 성장 경제(Steady state or zero growth economy), 대체교환수단(Alternative means of exchange) 등의 논의가 구체화된 로컬경제의 운영이 필요하다.